

第7回 美洲地域學術會議

統分 91-9-48

'90年代 北韓의 變化와 南北韓 關係

1991

統 一 院

이 논문집은 統一院 主催, 在美韓人政治學
會主管下에 「'90年代 北韓의 變化와 南北韓 關
係」라는 주제로 1991. 7.12~13 美國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第7回 美洲地域學術會議에서
발표된 論文들을 收錄한 것입니다.

이 冊子가 韓半島統一問題를 理解하고 研究
하는데 一助가 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國內外 學者들의 主張이 當
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아
울러 밝혀둡니다.

1991. 10.

情報分析室

目 次

開會式辭	3
開 會 辭	金鴻洛... 5
致 辭	宋漢虎... 7
基調發表文	閔丙天... 13
第 1 分科 '90年代 北韓의 開放化	17
1. 北韓의 權力承繼와 政治變化	梁性喆... 19
2. 北韓經濟의 改革과 開放	李喜相... 47
3.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朴京愛... 83
第 2 分科 '90年代 北韓의 對外關係	107
4. 北韓의 對美·日 政策	金鴻洛...109
5. 北韓의 對中·蘇 政策	李採畛...139
6. 北韓의 對南戰略	金一平...161
第 3 分科 '90年代 南北韓 關係	183
7. 南北 對話와 交流	金漢教...185
8. 南北韓 緊張緩和와 軍備統制	李恒悅...205
9. 南北韓 統合 模型	金甲喆...229

開 會 辭

金 鴻 洛(在美側 準備委員長)

존경하는 宋漢虎 統一院次官님, 그리고 韓國과 美國 各州에서 오신 선배동료 學者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學術會議는 우리 民族의 오랜 宿望인 南北統一에 기여하기 위하여 統一院의 지원을 받고 1985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금년 第7次 會議의 주제는 「'90年代 北韓의 變化와 南北韓關係」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소련 및 東歐圈의 改革과 變化의 結果로 구라파에서는 이미 냉전이 종식되었으며 東西獨의 統一이 이루어지는 등 커다란 變化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冷戰의 최후의 보루하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도 이러한 변화와 화해의 물결이 서서히 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北方政策의 성공적인 전개로 소련 및 東歐圈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북한 역시 일본과 國交正常化 교섭을 진행하면서 유엔에 同時加入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금년 가을부터 南北韓의 새로운 關係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北韓의 變化를 낱게 한 背景과 要因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지를 論議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의 會議를 통해서 이자리에서 論議하고 짜낸 지혜가 韓半島의 統一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하나마 開會辭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致 辭

宋 漢 虎(統一院 次官)

尊敬하는 여러 學者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來賓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學術會議에 참석하여 人事말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째 계속되는 이 學術會議를 主管하고 準備하느라 애쓰신 金鴻洛교수님을 비롯한 關係者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이번 學術會議는 變化하는 世界秩序 속에서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現實과 變化의 展望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주된 關心事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時宜適切하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最近 2,3년에 걸쳐 世界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變化하는 世界秩序 속에서 우리는 分斷을 克服하고 民族의 生存과 發展을 摸索하여야 한다는 脈絡에서 같이 고민하고 討論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既存秩序의 變化는 우리에게 希望과 不安을 同時에 갖게 합니다.

變化에 대한 對應樣態 또한 두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變化를 受容하고 活用하거나 變化를 두려워하고 拒否하는 방향이 그것입니다.

우리 政府는 最近의 世界秩序 變化가 自由와 人權과 福祉 그리고 平和를 추

구하는 人間本性에 바탕을 두어 우리에게 希望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評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變化에 積極 參與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自負하고 있습니다.

和解와 協力の 祭典이었던 서울올림픽을 成功的으로 開催함으로써 對立과 不信의 冷戰秩序를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中·蘇와의 關係改善을 통해 우리의 安全과 平和與件을 조성하고 東北亞 安定을 이루었음은 물론 理念과 體制의 차이를 뛰어넘어 國家間的 交流와 協力を 선도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民族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分斷狀況의 克服은 國民的 興望과 世界秩序의 變化에 부응할 만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共和國 出帆以後 政府는 같은 民族이 不信하고 對立하고 있는 現實을 克服하여 和解와 協力, 그리고 統一指向的 關係를 이룩하고자 多角的인 努力을 기울였습니다.

南北韓 關係를 民族共同體로서 발전시켜 統一國家를 建設하고자 7.7宣言을 發表하였고 國民的 知慧를 모아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을 制定·施行하여 南北間 諸般交流와 協力を 法的 保障속에서 推進할 수 있도록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國民의 熱望과 政府의 努力으로 南北의 總理가 서울과 平壤을 오가며 南北 高位級會談을 세차례나 진행하여 統一問題를 책임있는 當局間的

對話의 場으로 끌어들었으며, 온 民族의 聲援속에 統一蹴球大會와 合同音樂祭를 相對地域을 교대로 오가며 개최하였고, 卓球單一팀과 靑少年蹴球單一팀을 구성하여 國際大會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最近 2年사이에 1億달러가 넘는 적지않은 物資가 南北間에 거래되는 등 有無相通과 相扶相助의 民族的 紐帶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海外僑胞들 또한 자유롭게 北韓을 왕래하면서 南北韓과 海外의 同胞들이 共同體意識을 回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成果들은 비록 우리 民族의 統一熱望에 비추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南北間의 閉鎖와 斷絶을 극복하는 연계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擴大·發展되어 統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一方的 努力은 限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相對인 北韓은 아직도 “우리式대로 살자”라는 閉鎖路線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幸福해요”式的 愚民化政策을 推進하고 “南韓을 植民地 상태에서 解放시키겠다고”하는 소위 “하나의 朝鮮政策”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平和統一은 本質적으로 變化와 開放과 和解, 協力の 精神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守舊와 閉鎖와 斷絶, 革命은 平和統一의 本質과는 거리가 먼 統一의 障礙要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北韓이 현재 겪고 있는 落後性의 原因은 그들의 閉鎖政策에 起因한다고 斷言할 수 있습니다.

閉鎖路線의 고집은 人類社會가 이룩해 놓은 知識과 資源으로 부터의 孤立을

자초하는 것이며, 이는 쇠망의 길로 이어졌던 것이 人類歷史였습니다.

오늘날 世界의 모든 나라가 閉鎖와 對決의 時代를 벗어나 서로 和解하고 協力하는 흐름으로 가는 밑바탕에는 人類가 가지고 있는 知識과 情報 그리고 資源을 交流하고 共有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人類全體의 福利를 極大化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政府도 이러한 時代的 흐름속에서 南北韓이 더 이상의 對決과 斷絶을 清算하고 交流·協力함으로써 民族共同體의 福利를 증진시키는 것이 民族의 統合的 發展을 위해 바람직한 方向이라는 判斷에 따라 北韓에 대하여 開放과 人權保障을 강력히 促求하고 있습니다.

世界가 엄청난 科學技術文明의 進歩를 겪고 있는 狀況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지탱할 수 있으며, 과연 民族의 統合的 發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北韓은 반드시 變化해야 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政府는 北韓의 變化와 開放을 積極的으로 誘導하고 도울 것입니다.

다행히도 北韓은 最近에 UN加入과 國際核査察의 受容, 日本·美國과의 接觸過程에서 實用主義 路線으로 轉換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提示하는 등 評價할 만한 變化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北韓의 對南關係에서도 이러한 바람직한 變化를 促求하고 誘導하여야 합니다.

北韓의 變化를 誘導하여 平和統一을 成就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政府의 責任일 뿐만 아니라 이 時代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 同胞의 責務이자 人類文明社會가 안고 있는 課題입니다.

특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民族의 知性으로서 北韓의 開放을 誘導하는

데 보다 많은 關心과 役割을 擔當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 學術會議, 그리고 討論되는 主題들은 學問的으로나 政策 遂行의 側面에서 가장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北韓의 變化』로서 중요한 意義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學術會議를 통해 우리가 當面한 가장 중요한 現實問題에 대한 보다 正確한 分析과 處方이 나와 民族의 統合的 發展, 東아시아의 協力과 世界 平和를 主導하는 統一國家 建設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人事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健康과 家庭의 幸福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基調發表文

閔 丙 天(東國大總長)

I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東歐의 내외적 변화는 그 곳과 韓國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상황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韓蘇修交와 한중관계의 급속한 진전이 그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外的인 환경변화는 한반도 특히 北韓의 변화를 위한 강한 충격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충격의 상징적인 것의 하나가 北韓의 유엔가입신청 발표이다. 南北韓이 모두 유엔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영구분단」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던 북한이 그것을 받아 들인 것은 분명히 외적인 변화의 충격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北韓의 그러한 정책변화는 南北關係에 새로운 영향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아직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거의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南北對話나 交流에 대해서도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갖는 이 회의에서는 北韓은 과연 변화하고 있으며 변할 것인가? 그와 관련하여 南北關係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모색해 보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北韓의 변화가능성과 南北關係」를 다룰 경우 「狀況」분석과 「政策」이나 「戰略」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상황분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北韓의 改革과 開放의 실태나 가능성을 다루는데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對北戰略과 政策變化에 초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狀況과 政策은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변하면 정책도 변할 수 밖에 없고 정책이 변하면 상황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느 한쪽에 치중되는 분석과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綜合性的의 결여에서 오는 그릇된 分析結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北韓을 분석할 경우 資料의 빈곤에서 오는 곤란과 中立性的의 결여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이다.

가장 비공개적인 北韓에 대한 분석자료를 얻기는 매우 힘들다. 많은 경우 일방적인 宣傳物을 자료로 한 分析을 해야만 한다.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客觀的의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南北關係는 어느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완전히 中立的의 立場을 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한편 政策과 전략을 세우려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南北關係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軍縮을 비롯한 군사관계의 개선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交流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平和도 중요하지만 交流등을 통하여 統一을 진전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평화에 집착할 때는 오히려 분단을 장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統一을 너무 서두를 경우 자칫하면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상황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은 交流의 확대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交流는 平和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平和와 統一은 떼어 놓을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가 될 것이다.

둘째, 南北關係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國際環境의 개선이나 內部條件의 개선이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東歐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南韓과 그들 나라와의 관계개선 등 외적인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北韓이 日本 및 美國과 관계개선을 하게 되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게 된다면 주변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變化들은 남북관계와 통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화만으로는 南北關係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없다. 南北韓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北韓이 변화해야만 된다. 이 점에서 보면 內部條件의 개선론이 중요시될 것이다.

국제환경의 개선없는 統一이 쉽지 않지만 民族內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南北關係의 개선과 統一主張은 한낱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셋째, 南北關係의 개선 및 統一을 위해서 當局主導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民間主導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南韓當局은 當局主導로 통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한다. 남한 내의 일부 세력에서는 民間(민중)주도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統一問題는 민족내부문제 또는 內國問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국제적 성격을 갖는 이상 그것은 當局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실질적 생산(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이 주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當局主導論은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統一과 같은 어려운 문제는 정부만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 민족적 역량을 모두 발휘해야만 한다. 그 점에서는 民間의 역할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民間의 역할은 보조적이어야 하고 주도적인 것일 수는 없다. 더욱이 「民衆主體」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의 민간주도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고 본다.

Ⅲ.

앞에 지적한 문제들을 이번 회의에서 모두 극복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적어도 몇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이번의 주제들이 설정되었다고 본다.

종래의 연구들이 國際環境分析에 치우쳤음에 비추어 또 지금은 北韓의 變化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北韓變化를 이 회의에서 비중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變化는 狀況變化에 비중이 두어지면서 검토될 것이지만 政策이나 戰略變化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 1 分科 '90年代 北韓의 開放化

1. 北韓의 權力承繼와 政治變化

梁 性 喆(慶熙大)

目 次

I. 머릿말	21
II. 北韓 政治權力的 耐久力	22
III. 北韓權力 엘리트의 葛藤構造	39
IV. 맺는말	46

I. 머릿말

이 小考에서는 現北韓權力 엘리트의 갈등구조를 짚어보고 그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틀을 기준으로 해서 內在하는 또는 顯在하는 북한권력 엘리트의 갈등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위의 갈등구조, 갈등현상을 밑바닥에 간 앞으로의 북한정치권력 엘리트의 向方을 金日成-金正日 후계체제 구축과 그 成敗라는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II. 北韓政治權力的 耐久力

북한권력 엘리트의 갈등구조분석과 분석틀을 시도하기에 앞서, 김일성을 首相으로하는 북한체제의 이른바 耐久力(Durability)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공산전체주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耐久力은 어떤 것들인가? Bertram Wolf는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내구력을 부추기는 7가지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첫째로 상층부 권력투쟁에 있어서 기득권 집권층이 권력의 지레(the power levers) 즉 당기구, 비밀경찰, 군, 대중조직, 개인숭배 등을 독점·활용한다.

둘째로 공산당집권 세력은 문화의 조정(the coordination of culture) 즉 역사를 무기로삼아 날조작전("operation rewrite")을 자행하며 과학을 黨의 도구로 악용하며 인간을 로봇트로 훈련시키고 心性統制(mind control)을 일삼는다.

세째로 소비에트 스타일 선거 즉 100%투표자가 100%찬성하며 반대(당)의 권리가 없으며, 참된 의미의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밑으로부터의 상층부권력의 통제가 가능하지 않고 인민의 기권 또는 묵비권의 자유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네째로 노동자국가에서의 노동자가 통제되는 현실 즉 농민·노동자·시민의 감시가 무심하고 새 계급(특권층)사회가 등장하고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노동이 전적으로 군사화된다.

다섯째 공산종주국인 크레믈린과의 관계가 권력의 변수가 된다.

여섯째 전체주의의 성격은 국가가 인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이 국

가를 위해 있으며 자발적, 自生的인 조직체의 종식을 뜻하고 인간정신의 착취를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국가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 든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까지도, 소유하려 든다. 다시 말하면 공산독재체제의 내구력은 폐쇄사회, 전체권력의 非一時性, 집단지도 체제의 一時性, 분리될 수 없는 포괄적인 권력, 통제기구와 파편화한 사회(atomized society)이며 非國家 연대단체 형성이 불가능하며 黨이외의 중심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나아가서는 중앙집권화되고 單一石的(Monolithic)이고 독점적인 黨이 군림한다. 그리고 열성, 교조적 순수성, 열광적 헌신, 단합(Discipline), 복종, 완전동원이라는 틀로 黨을 운영한다. 一黨國家로서 절대적 폭력의 정권(a Rezime of absolute face)은 절대폭력과 설득, 인민에의 지속적인 심리전을 자행하므로써 권력을 유지해 나간다. 一黨국가 절대정권은 또한 관료체제를 유지한다. 즉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全財産을 소유하며, 전체경제를 운용한다. 또 대부분의 생산자들(人力)은 겨우 生存수준에 머물도록 의도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 또 문화를 완전히 통제 조작한다. 모든 표현과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수단을 독점하고 국가가 "비판"의 제도를 독점한다. 나아가서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無謬의 독트린은 無謬의 권위기구로 부터 나오며, 이를 無謬의 黨이 해석하고 적용하며, 無謬의 黨은 無謬의 지도자에 의해 지도된다. 승진방법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목표를 향해 지그재그꼴로 움직이며 승진, 강등, 실수의 교정, 전략과 전술의 수정, 異見의 제거등은 최고지도자의 裁可(명령)로 결정되며 여러가지 형태와 규모의 숙청도 감행한다. 또한 엘리트의 代替, 죽은 나무 즉 쓸모없는 사람들의 갈등, 신진세력의 승격, 모든 잘못에 재물이 되는 희생양, 필요한 路線변화에의극적 조치등

도 최고지도자의 인가(fiat)에 매달린다. 위로부터의 지속적인 혁명에의 시행은 크레믈린핵심권력 엘리트의 청사진대로 소비에트 市民이 개조되고 공산주의가 세계를 정복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소비에트체제는 "사라미전술"(salami tactics) 즉 長期戰을 통해 야금 야금 침식, 침투하여 인간을 再改造하고 공산주의가 전세계를 정복하는 데 대외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¹⁾

물론 위에서 열거한 Wolfe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특성들은 소련 공산주의의 체험적 분석에서, 더구나 스탈린독재가 절정에 달했을 때의 것으로 가볍게 일축해 버릴 수도 있다. 더구나 소련에서 그리고 동구에서 그리고 모든 공산당 집권 체제들이 쿠바와 북한만을 빼놓고는 모두 變身 및 자유화·민주화, 경제개혁·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Wolfe의 공산전체주의 특성들은 군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 김일성 一黨一人 북한 체제가 안고있는 체제적 특징들이 잘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분석은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의 고전적 가치를 아직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스탈린時代의 공산전체주의 특성의 북한현체제에의 적실성, 적용성 이외에 북한만이 갖고있는 즉 現金日成 一黨一人, 父子世襲체제가 長期집권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東西를 막론하고 金日成이 세계最長期집권자로 군림할

(1) Bertram D. Wolfe, Communist Totalitarianism : Keys to the Soviet System (Boulder : A Westview Encore Edition, 1985), Passim. Sung Chul Yang, "Totalitarianism Versus Authoritarianism : the Case of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s, in chung-won chouced),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Korean Peninsula (Seoul : Kyumghee University, 1988), pp. 209~231 참조.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공산주의 집권체제가 무너지고 아프리카의 최빈국 에디오피아에서 마저도 레닌의 동상이 무너지는 시간에도 金日成이 버티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공산주의 正統마르크스-레닌주의의 現論에서도 70餘年 공산당권력집권사에서 도 찾아볼 수 없는 「現論不在」「史例不在」의 父子繼承론을 어떻게 버티어 나가고 있는가? 이제 /까지 버티어 온 북한권력 엘리트의 耐久力이 한계에 다달은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卍떡없는 餘力을 지닌 것인가?

먼저 북한권력엘리트의 내구력을 침식·침해 도전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外因을 들 수 있다. 중국 등소평 체제등장과 경제개혁 시행이 '70年代末부터 시작되었고 이에대한 북한의 긍정적이고 부분적인 적응이 이른바 合營法(1983년 9월)시행이었다. 그러나 더 결정적 外壓은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의 등장(1985년 3월)과 글라스노스트(公開), 페레스트로이카(체제개편)의 회오리 바람이다. 그 뒤 1989년을 기점으로 한 동구공산당집권체제의 붕괴와 와해, 서독의 동독흡수통일은 김일성을 이제 쿠바의 카스트로와 함께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외로운 마지막 남은 두「공룡」으로 북한과 쿠바를 공산주의 체제의 최후의 「박물관」으로 남게 하고 있다. 동구의 알바니아도, 아세아의 베트남도 남은 공산주의의 억압과 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쏟고 있다. 1989년 6월 천안문사태는 중국의 개혁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수정·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붕괴·와해라는 外風이 북한에 밀려드는 데 일단 일시적으로 바람막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형제공산권 국가들로 부터 밀려오는 변화와 변신의 外風을 감당할만한 耐久力이 있는지는 큰 의문으로 남는다.

둘째로 남한요소를 뺄 수 없다.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 약한 나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 나라가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만 가능하다.⁽²⁾ 한 핏줄, 한 歷史의 동일민족으로서 2차대전 뒤 분단국가로 이제까지 남북한이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어느나라 보다도 우리는 비교에 민감하고 또 이러한 비교의 우위 또는 열세에서 오는 심리적 타격과 충격이 큰 나라도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남한과의 비교에서 결정적인 「비교의 열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뉠대로의 열세를 호소하기 위한 전시효과와 과시(1989년 11차세계청소년대회, 1991년 IPU총회등)를 북한이 안간힘으로 서둘러보기도 했으나 객관적, 상황적 남북한 비교에서의 열세를 극복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달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제6공화국의 국제정세, 주변환경의 好機를 탄 적극적인 北方정책의 추진은 북한의 과거사회주의 형제국가들과의 수교를 거의 완료한 상황에 이르렀다. 쿠바와 알바니아를 빼놓고는 아직 수교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은 중국, 베트남과도 무역및 기타 교류의 추세로 봐서 수교는 이제 시간문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Paul Kennedy의 假說 즉 경제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군사적 제국초과 확장세(imperial overstretch)는 강국쇠망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³⁾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이젠 군비경쟁, 경제성장, 경

(2)"어느 국가고 추상속에서 단순히 強하지 않다; 한 나라가 강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強勢와의 비교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 假說은 Michael Mandelbaum이 그의 최근 저서, The Fate of Nation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p.2에서 크게 역설하고 있다. 이 假說을 최초로 강조한 학자는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Mass : Addison-Wesley, 1979),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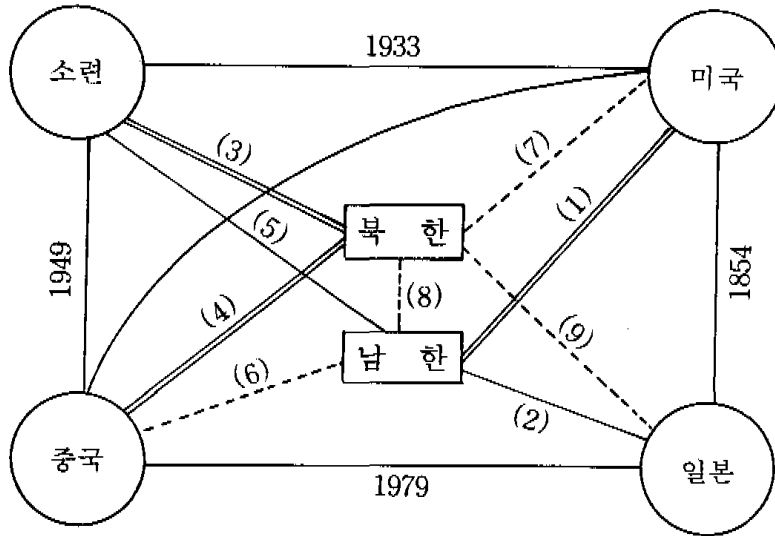
(3)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 Economic change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New York : Random House, 1987), p.444, p.515.

제규모 경쟁등에서 북한은 '70년대 중반을 고비로 남한에 뒤지고 있으며 그 절차는 증폭되고 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990년 10월 3일 서독주도의 동독흡수통일실현은 북한으로 하여금 體制守護型(system-defensive)정책으로의 전환을 점진적이거나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좋은 보기가 북한 외교부의 UN個別個人결정(5월 27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조선」구호를 포기하지 않았고, 속셈으로는 「남한통일전선전략」을 희망사항으로 간직하고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객관적인 국제여건, 주변환경, 남북한 관계로 미루어 봐서 이제는 북한현체제 수호마저도 힘겨운 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세제로 위의 外因과 남한요인과 관련한 북한체제에의 결정적인 도전은 기존 二重三角 동맹체제(도표-1 참조)가 무너져가고 새로운 二重四強 관계가 재조정·재편되는 와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기존 동맹국가인 소련과 중국이 아직도 동맹조약의 틀(1961년 조·소 및 조·중친선협력상호원조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련과 한국의 수교(1990년 10월), 중국과 한국의 무역상설사무소설치(1991년 2월), 중국과 한국 正式修交 가능성 증대(1992년초 예상)로 북한·소련·중국 對 한국·미국·일본이라는 二重三角동맹·협력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二重四強 교차접촉·교차수교·교차협력의 시대로의 전환기에 있다. 이러한 전환기는 북한체제에의 새로운 次元의 도전이요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도표-1 참조). 이러한 기존동맹체제의 변화의 구체적인 보기로는 남한의 소련으로부터의 핵원료공급계약, 소련침단군사기술분야 민간화 상호협력 모색등을

(4)梁性喆, "南北韓 무력갈등과 새로운 代案", 구영록, 김승흠, 양성철(공저), 남북한의 평화구조(서울:法文社, 1990), p. 267~329참조

〈도표-1〉 東北亞에서의 남북한과 4強관계



<p>—— 범례 ——</p> <p>—— 접촉 및 통상거래</p> <p>—— 국교수립</p> <p>—— 국교 및 동맹관계</p>
--

- (1) 1954 한미 상호방위조약, 1948년 국교수립
- (2)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 (3) 1961 조·소 친선협력상호원조 조약, 1948년 국교수립
- (4) 1961 조·중 협력친선협력 상호원조조약, 1949년 국교수립
- (5) 1990년 한·소 국교 수립
- (6) 1991년 2월 한·중 무역대표부 상주사무소 설치합의
- (7) 15차 북한·미외교관 북경 접촉(1991년 5월 현재)
- (8) 3차 북한·일본 국교 정상화 회담(1991년 5월 현재)
- (9) 3차 남북한 총리 회담(1991년 5월말 현재)

들 수 있다. 특히 1991년 1월을 기점으로 소련의 기존사회주의 동맹국가들과의 통상거래를 경화(Hard Currency)결제로 소련이 정책전환을 함으로써 소련으로부터 대부분의 原油공급을 받아 온 북한은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련정책 변신을 예상하여 북한은 '88년과 '89년 이란과의 일련의 협상과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무기를 수입하는 댓가로 연간 200만톤 규모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정책적응에 성공하기도 했다.⁽⁵⁾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존 동맹종주국인 소련의 대북한 정책 수정, 중국의 기본개혁정책

(5)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사회 주의국가체제연구소 연구원 '알렉산드리아 유리에 비치 만스르브'의 글, 세계일보(1991년 2월 19일) 참조

과 북한의 체제 수호정책의 괴리는 이들 두 우방과의 불협화음 나아가서는 갈등까지도 심화할 가능성과 확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에서 지적된 현북한체제에의 침식,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체제의 내구력을 지탱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인가?

첫째로 Wolfe의 공산전체주의 특성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현북한 권력지배층은 모든 대중매체(신문, 라디오, TV, 영화, 연극, 기타 모든 출판물과 예술문화 창작물에 이르기까지)들을 완전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자의로 통제·조작하고 있다. 이로인해 인민이 북한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깥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국제정세, 주변정세, 남한현실-들을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아는 것도 권력지배층 엘리트가 꼭 인민들이 알아야겠다고 판단된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작발표·공포·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신문의 경우 북한뉴스란 당 선전·선동차원의 이데오로기(주체사상)강좌 교육내용과 각종 일터(공장, 농장, 사업소등)의 실적, 목표초과달성이 주가되고 바깥세상이야기는 모두가 부정적인 것 뿐이다.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모, 부패·무정사건(水西사건, 국회의원 내물외유사건 등)만이 일방적으로 보도된다. 미국·영국등 이른바 서방세계에서 발생하는 실업·파업·빈민생활상만을 확대보도한다. 다시말하면 현대 최첨단 정보화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의 신속성, 全地球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모든 독자와 시청자에게 뉴스로 전파되는 시대에서 북한의 인민은 현 권력엘리트의 매체독점과 통제로 인하여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1991년 4월 26일 사복경찰(백골단)이 저지른 명지대 시위학생인, '강경대'군의 致死사건을 보기로 들어보자. 이 사건은 즉각적

으로 남한전역은 물론 전세계의 뉴스가 되었고 이 사건에 항거하는 데모도 전국적으로 확산, 5월 9일엔 20만명~30만명이 항거시위를 벌이는 사건으로까지 심화되었다. 만약 똑같은 사건이 북한의 어느 한 대학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현북한체제하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런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건의 직접 목격자 이외에 그 목격자를 통한 입으로 입으로 전파되는 비공식적 전파수단 이외에 그 사건이 지역을 넘어 북한전역에 바깥세계에 즉각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 어느 한 지역, 한 광산 사업소에서 항거데모가 있었다고 하는 뉴스가 일본 또는 남한 매체에 보도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그것마저도 사건이 지난 훨씬 뒤의 「추측기사」일 뿐이며⁽⁶⁾, 그러한 추측기사 보도마저도 북한인민에게 밖으로부터 안으로 알려질 수 없는 대중매체 통제장치와 기구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체제의 내구력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구체적으로, 현북한 지배세력이 허락·허용하는 뉴스이외의 소식들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밖에서 일어나는 뉴스이고 한 마을과 마을, 한 지방과 지방, 한 지역과 지역간 즉

(6) 보기를 들면 함경북도에서의 反金체제저항운동(82년 4월)인민군및 광부폭동(82년 11월), 청진市에서의 노동적위대와 인민군간의 유혈충돌(82년 9월), 신의주에서의 지방당간부와 3대혁명 小組간 충돌사건(82년 11월), 용양광산에서의 식량폭동사건이 내외통신의 1985년 6월 14일字 439호에 발표되었다. 조선일보 1987년 8월 20일字는 청년돌격대폭동(83년 4월), 원산에서의 대규모 주민폭동(83년 4월), 만수대의사당 폭발미수, 휴전선 주둔군부대 반란사건, 「대성민주동맹」사건, 평양에서의 강제노역 항의대규모폭동으로 40여명 사상등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1990년 2월 15일字는 함경도 지방에서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및 동상파괴사건(1987년 5월 15일), 함북화순의 군용열차 폭파사건(87년 12월), 평양시내 민주화요구 데모(90년 1월)등 미확인 보도를 실었다.

1988년 4월 24일字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젊은 도시노동자와 농민, 군인들을 포함한 800여명으로 구성된 「조선인민자유연맹」이라는 반정부단체가 남포, 원산, 청진, 신의주등 4개도시를 중심으로 활동-를 중앙일보가 1988년 4월 25일字로 실었다. 이밖에도 83년 3월 18일 황해남도 신원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 103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사건들은 靈宗, 金正日체제 구축 후 「단명실각」 同和(1991년 6월호), p. 104~105에서 再引用함.

전북한지역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뉴스로 전파할 수 있는 전국적 통신·전신·뉴스망(Network)을 의도적으로 막고, 분리시켜 놓고, 그들 지배세력만이 필요로 하는 連絡網만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정보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의 알 권리가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는 인민의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의 원인이 되는 나와 이웃, 북한과 남한, 우리와 다른 나라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대중매체의 조작을 통해 현북한 주민의 생활형편이 과거 일제 식민지하의 궁핍과 꺾박의 생활이나 남한 형제들의 「실업과 범죄의 소굴」같은 생활상에 비해서는 「지상낙원」이라는 것이 고의적으로 세뇌·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뇌·선전·선동의 효과가 시간과는 역비례하는 일반원칙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은 북한 권력엘리트의 철저한 대중매체의 독점, 조작, 그리고 전국적 통신망의 차단통제운영이 체제내구력의 기본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인민의 주거, 직업의 선택, 이주·이동및 여행의 자유를 빼앗고 이 모든 기본적 인권이 통제되고 있는 것이 또하나의 체제내구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와 통제는 북한 집권지배층 특히 관료체제의 부패·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위와같은 정보망의 통제, 조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천부인권적인 자유와 권리가 부재, 배제된 사회라 하더라도 '80년대에 들어와 나름대로의 부분적·장신구적 「개방」의 물결이 북한에 스며들고, 동구·소련 유학생의 집단소화 및 소개, 기타 구미지역 친인척들의 북한 방문, 세계 청소년대회(1989년), 국제의원연맹세계총회(IPU, 1991년 4월)등으로 차차 굳게 닫힌 폐쇄의 문이(그것이

大門은 아니더라도 창문이)열리면서 바깥세상의 사실과 소식들이 인민들의 귀와 잡히기 시작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놀랍게도 북한인민의 절대다수가 바깥 세상을 대충 알고 있으며 북한 매체가 선전·선동하는 것처럼 남한이 굶주림, 가난, 범죄의 소굴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 사람들보다 잘 산다는 것마저도 알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북한의 선전·선동 매체의 허구성 뿐만 아니라 그 지속적인 전파에 염증, 혐오증까지도 느끼는 심리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불평이 팽배한 상황에 이미 도달했는 데도 이것이 인민항거-인민봉기 나아가서는 현북한체제 전복에으까지 비등·비화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아닐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호작용-즉 인민의 무력감, 무력증과 북한 권력엘리트의 통제감시정보기구와 기능의 절대적 폭력성-때문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아무리 인민의 불만과 불평요인이 팽배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만요인을 결집하고 제도화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항거, 저항세력으로 조직화할 때만 정치적 힘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여건이不在할 뿐아니라 그러한 반대·저항세력의 통제, 감시, 정보, 폭력제제 기능때문에 위압, 압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민 불만의 잠재력이 현체제도전세력으로 현실화하기에는 인민의 상대적 무력증, 무력감-현집권통제의 절대적 위압과 위세가 아직도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현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주어질 때 현 절대다수의 인민이 품고 있는 것으로 정보분석되는 불만이 현체제도전·전복을 위한 항거와 봉기로 확대·확산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끝으로 북한 김일성 1인독재체제의 절대권력자로서의 金의 철저한 인사관리의 독점을 들 수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북한권력의 핵심기구라고 볼 수 있는 조선로동당정치국 상임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 통치기구로서의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를 포괄적·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인물은 오직 김일성 한 사람 뿐이라는 사실이다. 金日成은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며, 비서국 총비서이고, 당군사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首位이자 주석이며 국방위원회위원장이다. 또한 국가보위부와 인민무력부는 통제기관인 인민위원회 首位로서 그의 직접 통수권하에 있다. 다시말하면 북한권력 지배층이 누릴 수 있는 핵심권력의 날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김일성 한사람 뿐이다. 그 다음으로 권력의 날개가 덜 찢긴 인물은 그의 후계자요 長男인 金正日이다. 金正日是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2位)이며, 비서국비서(2位)요 黨군사위원회 오직 軍경력이 없는 위원이며, 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산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역시 유일한 非軍人출신)으로 군림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공화국통치기구의 형식적 기구에는 국방위를 빼놓곤 그의 권력의 날개가 없다. 그밖의 모든 권력핵을 둘러싼 인물들은 위의 권력핵심기구의 날개가 하나 들썩 주어져 있을뿐 모든 것을 다장악하고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다. 다시말하면 북한권력핵심기구의 水平的장악은 김일성 이외에는 모두가 배제되는 方式으로 김일성은 그의 권력의 장기화를 가능케 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북한권력기구의 수직적 장악, 즉 김일성 이외에는 아무도 핵심기구를(당의 경우 1차 당에서 6차당, 내각·정무원의 경우는 1차에서 9차, 최고인민회의의 경우는 1期에서 9期)지속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方式

〈표-1〉 북한 권력엘리트 핵심부(1990. 5.22 현재) (1)

권부 구분 이름	조선로동당						통치기구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위원장	위원	총비서	비서	위원장	위원	의장	부의장	대의원	의원	의장	부의장
1. 金日成**	+	+	+		+				+			
2. 金正日		+		+					+			
3. 吳振宇		+							+			
4. 延亨默		+							+			
5. 李鍾玉		+							+			
6. 朴成哲		+							+			
7. 韓成龍		+	당비서	+					+			
8. 金永南		+							+			
9. 柱應泰		+		+					+			
10. 許 鎔 (死)		+							+			
11. 崔 光		+		+					+			
12. 徐允錫		+							+			
13. 全炳浩		+	+						+			
14. 姜成山		+		+					+			
15. 玄武光		+							+			
16. 崔泰福		△	당비서	+					+			
17. 金鐵萬		△							+			
18. 崔英林		△							+			
19. 洪成南		△							+			
20. 金福信		△							+			
21. 趙世雄		△							+			
22. 鄭濬基		△							+	+		
23. 康希源		△							+			
24. 洪時學		△							+			
25. 李善貫		△							+			
26. 黃長燁				+					+			
27. 徐寬熙				+					+			
28. 朴南基				+					+			
29. 金仲燐				+					+			
30. 尹基福				+					+			
31. 金容順				+					+			
32. 吳克烈									+			
33. 全文燮									+			
34. 白學林				+					+			
35. 金斗南									+			
36. 金江煥									+			
37. 李乙雪									+			

이름	구분	조선로동당						통치기구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위원장	위원	총비서	비서	위원장	위원	의장	부의장	대의원	의원	의장	부의장
38. 朱道一						+				+			
39. 李斗益						+				+			
40. 趙明祿						+				+			
41. 金鎔喆						+				+			
42. 崔相旭						+				+			
43. 李奉遠						+				+			
44. 吳龍訪						+				+			
45. 李河一										+			
46. 金光鎮										+			
47. 金奉律										+			
48. 楊亨燮								+		+		+	
49. 呂燕九										+			+
50. 白仁俊										+			+
51. 金璟鳳										+	사무장		
52. 李季白										+	+		
53. 鄭信赫										+	+		
54. 元東九										+	+		
55. 廉泰俊										+	+		
56. 鄭斗煥										+	+		
57. 崔龍海										+	+		
58. 朴守東										+	+		
59. 金聖愛										+	+		
60. 柳好俊										+	+		
61. 鄭夏哲										+	+		
62. 崔文善										+			
63. 金學奉										+			
64. 康賢洙										+			
65. 朴勝日										+			
66. 李奉吉										+			
67. 林亨九										+			
68. 廉起淳										+			
69. 金基善										+			
70. 池昌益										+			
71. 金潤赫										+			
72. 金遠鉉										+			
73. 金 渙										+			
74. 金昌柱													
75. 張 澈										+			

* 46년 8월 조선로동당 1차당대회 조선로동당 규약 3장 13조 정치위원회
'56년 4월 조선로동당 3차당대회 조선로동당 규약 5장 38조 정치국으로 개칭
'80년 10월 조선로동당 6차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에서는 3장 24조, 25조에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들로 구성된 비서국을 둠
** 번호 1번부터 32번까지는 필자가 나름대로 총비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위원, 정치국위원, 후보위
원, 비서국비서를 중복되지 않는 인물순서로 나열했음. 33번부터 45번까지는 로동당 중앙군사위
원회들을 중복되는 사람을 빼놓고 나열했음. 46번부터 48번까지는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으로 金日成은 그 권력을 지탱해 온 것이다. 오직 김일성만이 북한권력핵심기구를 종적·횡적으로, 水平的·수직적으로 완전독점함으로써 그밖의 모든 人物들의 人事權(승진, 강등, 숙청, 제거, 발탁 등)을 궁극적으로 그만이 쥐고 있으므로, 그의 자의에 맡겨짐으로써 그의 장기화 집권이 가능했고 이는 곧 현재제의 내구력이 핵심요인이 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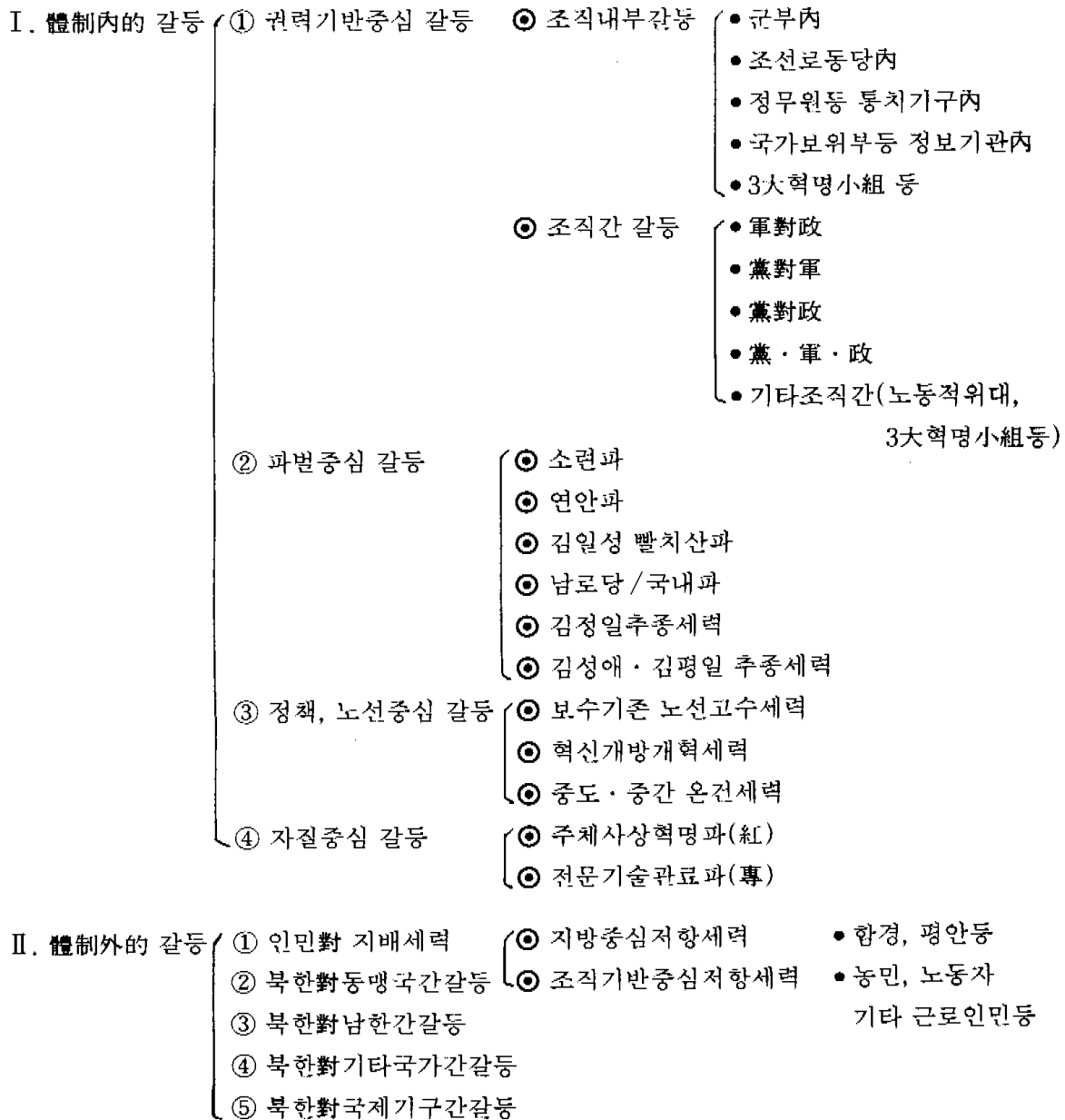
위와같은 북한 김일성 1人1黨체제, 김일성-김정일 후계체제의 내구력에도 불구하고 共產宗主國인 소련이나 북한의 최후의 보루인 동맹국 中國에서마저 부분 또는 全面變身을 시도하고 있는 情況下에서 북한 내구력의 限界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에는 북한 권력엘리트의 내구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권력내부의 갈등구조와 갈등의 內在的 또는 顯在的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7)梁性喆, 북한정치론(박영사, 1991), pp.3-118. 참조

Ⅲ. 北韓 權力엘리트의 葛藤構造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권력엘리트 갈등구조를 편의상 체제의 내적갈등과 체제의 外的 갈등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체제 內的 갈등은 권력기반

〈표-2〉 북한권력 엘리트 갈등구조 분석모델



중심, 파벌중심, 정책·노선중심, 자질중심 등 4가지 갈등현상으로 분류해 보았다. 다시 이들 4가지 갈등현상을 세분화해서 현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의 內在的·顯在的 요인들을 점검해 보면, 첫째로 1950년대말까지는 체제 內的 갈등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파벌중심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일성 빨치산파가 기타 파벌세력들-남로당파, 소련파, 연안파등을 단계적으로 제거·숙청하는 갈등구조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권력기반 次元에서 보면 이는 黨內部の 파벌갈등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으며 김일성파의 일방적인 승리-기타 세력의 전면적 패배와 실각-로 표현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는 김일성 도전 세력이 거의 全無한 상태에서 김일성파 내부의 권력갈등-김정일 추종세력, 김일성 친인척 이른바 「척신」세력등이 꿈틀거리고, 다시 체제 內的 갈등은 권력기반 중심, 파벌중심, 정책·노선중심, 자질중심 등 4가지 갈등현상으로 분류해 보았다. 다시 이들 4가지 갈등현상을 세분화해서 현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의 內在的·顯在的 요인들을 점검해 보면, 첫째로 1950년대末까지는 체제 內的 갈등은 권력기반 중심, 파벌중심, 정책·노선중심, 자질중심 등 4가지 갈등현상으로 분류해 보았다. 다시 이들 4가지 갈등현상을 세분화해서 현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의 內在的·顯在的 요인들을 점검해 보면, 첫째로 1950년대末까지는 체제 內的 갈등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파벌중심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일성 빨치산파가 기타 파벌세력들-남도당파, 소련파, 리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따라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軍黨·政·기타 통치기구의 권력기반을 깔고 과거와 같은 파벌중심 갈등보다는(친인척 세력간 현재적 잠재적 갈등은 제외하고)정책·노선중심 갈등(체제수호및 강화세력, 체제개혁및 개

방세력, 점진적 개방·개혁노선 對 급진적 개방·개혁세력등)이나父子후계체제를 구축 옹호하는 주체혁명파와 이에대한 반대세력, 또는 주체이념 盲信者(True Belivers)와 기술·관료·행정요원과 등이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1989년 세계청소년대회 개최, 1991년 4월 IPU총회, 1991년 5월 UN개발가입결정등은 북한 권력엘리트 内部의 정책노선 갈등에서 조심스럽게나마 개혁·개방을 주창하는 세력들이 우세한 현상의 결과물들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최근 북한전문가인 '서대숙'교수가 북한권력핵심세력을 30명 内外로 보고 이들을 빨치산系(김일성, 박성철, 김철만, 전문섭, 서철, 백학림 등)로 위의 분석틀에서 보면 대부분 軍에 권력기반을 둔 김일성 빨치산系로 연령으로는 70代들이며「專」이 아니면「紅」그룹에 속하는 자연도태(死亡및 지명등)현상이 가장 빠른 그룹들이다. 친인적 그룹으로는 지난 4월 死亡한 허담(고종 4촌매부), 朴成哲(외종매부), 김중린(친동생 김영주의 처가 인척), 楊亨燮(종매부), 강희원(외척)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일 친위·추종세력으로는 오극렬, 김강환(군참모장겸 당군사위원), 金鍾喆(해군사령관겸 당군사부장), 崔相旭(중장·당군사위원), 李奉遠(중장·당군사위원), 金斗南(당군사위원), 백학림(당군사위원)등 이른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만스로브는 오극렬이 인민총참모장직에서 '88년 2월 해임된 것은 吳(1931년 만주 吉林省 出生)가 군사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주목된다.⁽⁸⁾ 그에 의하면 '오극렬'의 해임을 그가 군대를 군사화·전문화·비정치화하는 한편 정치와 경제를 민간화하려는 그의 군

(8)만스로브의 글, 세계일보(1991년 4월 9일자)참조.

사개혁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개혁의 목적이 군수산업과 군사 비용을 줄이고 북한을 비무장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부문을 분리시키면서 군인들을 각급 정치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의 군사문제에 대한 간섭도 없애고 인민군에 대한 노동당과 산하기관들의 비중과 역할을 줄이려는 데 그 개혁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⁹⁾

경제·행정분야의 이른바 專門官僚系로는 姜成山(정치국위원), 徐允錫(정치국위원), 계용태(정치국위원, 경제담당비서), 全炳浩(정치국위원, 경제담당비서), 4월 死亡한 허담(정치국위원), 徐寬熙(농업담당비서), 崔泰福(교육담당비서), 玄俊極 로동신문 책임주필, 黃長燁(국제담당비서), 洪成南(정치국후보위원)등이다. 더욱 세분해서 외교관계 전문그룹(김영남, 김용순, 윤기복 등), 사상(황장엽), 지방당 출신(서윤석, 강희원, 조세웅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¹⁰⁾ 최근 만스로브는 원로군부지도자(전문섭, 오진우, 최광, 金奉律, 金龍淵, 金光鎮)들의 퇴진가능성을 시사⁽¹¹⁾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또 그가 북한 권력핵심엘리트를 지방관료파(李根模, 洪成南, 徐允錫, 趙世雄, 康希源, 尹基福), 黨書記派(연형묵, 전병호, 이선실, 최태복, 서관희), 경제기술 관료파(강성산, 한성룡, 현무광, 김환, 김복신 등)⁽¹²⁾로 나누는 것도 재미있다.

요컨대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권력핵심엘리트 갈등구조의 內在的 顯在的 현상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로 이 글에서 만들어 본 갈등구조들에서 나누거나 만스로브와 같이 지방

(9)위의 글

(10)서대숙, "조선노동당의 지도체제" 동화연구소주최 발표논문(1991년 4월 18일)

(11)만스로브의 글, 세계일보(1991년 4월 23일字)참조.

(12)위의 글(1991년 4월 26일字)참조.

관료파, 당비서파, 경제기술관료파 등으로 분류하거나 간에 같은 인물이 이들 분류기준에 하나 둘 내지는 더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康希源(1937년생)의 경우, 김일성의 인척(외척)이며 현 정무원부총리로 정부관료계이면서 지방지향파(함북)로도 분류된다. 金永南의 경우도 黨政治局正委員으로 黨官僚派이자 오랫동안 정무원 외교부장을 지낸 外交기술관료이자 金日成의 친척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권력기반은 권력갈등이 현재화할 때 투쟁의 힘의 원천이 되고 정책노선갈등은 투쟁의 구실 또는 쟁점이 되는 것이겠다.

둘째로 분석틀에서 보는 바와같이 권력기반갈등은 크게 군부(빨치산잔류元老 세력 對 신진세력 특히 만경대혁명학원출신), 당관료(중앙 對 지방파), 행정관료(외교경제등 국제파, 치안·정보등 국내파)등으로 구분되며 앞으로 이들이 체제수호-체제개혁, 폐쇄-개방등을 놓고 권력투쟁과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세째로 김일성 有故時(死亡, 自意他意에의 한 권력으로부터의 은퇴, 持病은퇴 등)金正日권력승계의 成敗전망이다. 현권력기구틀에서 보면 金日成有故時 돌변 사태가 없는 한 일단 金正日이 公式的으로 승계하거나 李鍾玉, 朴成哲등 현부주석을 形式的 주석으로 놓고 일단 최고실력자로 일시적으로나마 군림할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전망은 실령 金正日이 승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短期, 短命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 거의 一致된 결론이고 필자도 이러한 短期, 短命論에 동의한다. 필자는 김일성을 타이어에 들어있는 바람으로, 김정일을 타이어로 비유해 보기 때문에 金日成에 不在한 金正日是 마치 바람이 빠진 타이어처럼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전문가인 梁好民선생은 金日成은 "太陽"으로, 金正日是 그 自體로는 빛을

내지 못하고 오직 太陽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는 "달"로 비유, 태양 없는 달의 암흑적 현상의 末路를 시사한다.⁽¹³⁾

金昌順선생은 金日成과 金正日을 一身區兩頭-몸은 하나인 데 머리만 두개인 괴물-체제로 보고 김일성 머리는 자꾸 줄어지고 낮아지며, 김정일 머리는 자꾸 커지고 높아지는 비유로 현 김일성-김정일체제를 비유하면서 아들이 승계하더라도 2년도 채 못도는 빠른 時日內에 붕괴된다⁽¹⁴⁾고 본다.

넷째로 설령 金正日체제가 金日成有故로 등장해서 쉽게 붕괴되어 다른 권력엘리트에 의해 장악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북한 현일당독재체제의 몰락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권력핵심엘리트들의 권력투쟁이 有血, 無血형태로 전개되고, 새로운 實力者가 등장할 때까지 불안정이 권력상층부에서 表面化 또는 표면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아가서는 이러한 권력엘리트간의 투쟁이 인민봉기와 연결되거나 되지않거나 간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까지 축적해 온 북한권력기구와 제도가 그 제도와 기구를 장악하려는 인물들의 부침(부상과 침몰)과는 달리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권력엘리트가 만들어 놓은 제도(Institutions)의 생명이 이를 둘러싸고 권력투쟁을 벌이는 술한 엘리트들의 개인적 운명(Individuals)보다 훨씬 긴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체험이 없다. 해방 후 김일성 一人一黨 공산전체주의 독재체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李氏王政등 臣民文化, 권위주의 정치전통이 고작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문화적 배경에서 金日成-金正日체제의 붕괴, 새로운 실력자의 등장이 곧 현 남한의 정치경제 체제와 상응하는

(13) 양호민, 위 동화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에서 발언(1991년 4월 19일)

(14) 김창순, 상동.

상용성을 갖는 체제로 빠른 時日內에 변신·변형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남북의 현기본들을 깨지말고 그 틀속에서의 변화·변신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역사에도 정치에도 항상 돌발, 돌변이 즉 전문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와 사건 그리고 그러한 사태의 진전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되는 북한의 정치, 작게는 북한 권력엘리트의 권력갈등 형태와 향방도 그 예외는 아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나타난 모형들-루마니아형, 중국 모택동 後期體制型, 폴란드型, 동독型, 베트남型, 알바니아型, 유고型등-은 그 나라들 숫자만큼이나 다 각기 다른 형태로 그 변화변신의 모습과 속도가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도 북한의 특유의, 고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IV. 맺는말

이 글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구조를 분석의 틀을 나름대로 짜서 설명해 보았다. 그에 앞서 북한 金日成 一黨一人체제의 耐久力(Durability)를 도전, 침식, 침해하고 있는 국내외 요인과 여건들을 점검해 보고 공산전체주의 共有의 특징들이 이러한 내구력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주목했다. 나아가서 변형수정된 형태로서의 북한체제의 내구력의 요인들 또는 북한 특유의 내구력의 요소들을 분석해 보았다.

끝으로 김일성 有故時 金正日 집권의 短期·短命論을 들춰보고 앞으로 북한체제의 行路, 권력엘리트間的 권력투쟁의 양태, 기준, 내용,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한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아직도 북한정치-북한권력엘리트의 분석엔 전문가의 예측이 불가능한 많은 돌발, 돌변 사건과 사태가 도사리고 있다는 한계-불가예측성, 불확실성-의 겸허한 인정이다.

2. 北韓經濟의 改革과 開放

李 喜 相(위스칸신州立大)

目 次

I. 머릿 말	49
II. 숨겨진 내부개혁: 8月3日인민소비품 생산운동.....	51
III. 숨겨진 대외부문 개혁: 합영투자사업	61
IV. 숨겨진 대남한 교역 개방.....	69
V. 숨겨진 산업: 국제관광사업	73
VI. 전 망	78

I. 머릿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요약해보면 북한이 現政權下에서 어떠한 經濟改革과 開放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의 해답은 지금 어느때 보다 긴급하다. 그 이유는 1991年 5月 28日 북한이 UN가입결정을 발표함으로써 經濟政策分野에서도 일대 전환이 있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외부에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질문해답의 방법에 있어 1984年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제한된 改革施策을 다시 살펴서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 보겠다. 그러한 北韓式 改革의 전형적 특징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改革이 있겠나 예측해 보겠다. 다만 김일성의 사망 같은 政權次元의 변동이 있기 전의 상황임을 가정하겠다. 예상되는 對日關係 개선이 북한경제에 미칠영향이 클 것이다. 그 기회를 계기로 어떠한 經濟政策 변화가 있겠나 豫測해 보겠다.

돌이켜보면 1984年이 북한에 개혁의 발판을 조성해 주었다. 그해에는 스탈린식 중장기 經濟發展計劃 하나가 실패로 끝을 냈다. 그 실패의 정도는 북한정부가 실패의 뒤처리를 2年이나 한 후 1987年에야 次期계획인 第3次 7個年計劃(1987~1993)을 시작한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2차 7개년계획의 실패는 계획이 끝나는 전해인 1983년에 인구당 國民總生産이 마이너스 成長率을 기록할 정도였다.⁽¹⁾ 북한정부는 이러한 經濟危機를 당하여 사회주의경제의 대내, 대외 양

(1) United State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6 edition, p. 39.

부문을 망라하는 改革施策을 시작한 것이다.

외부세계는 1984年 9月 8日에 公布한 대외부문 개혁인 合營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이 법이 몇가지의 改革施策을 이끌어 냈는데 그들은 본 論文 중간부분에서 고찰하겠다. 合營법에 비해 외부에서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은 合營법 발표 이전인 1984年 8月 3日에 착수한 국내 부문의 한 개혁시책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물의 이름을 발족한 날짜를 따서 짓는 경우가 많다. 이 國內經濟改革도 그렇게 하여서 “8月 3日 인민 소비품 생산”운동으로 불린다. 이 운동을 첫번으로 고찰하겠다.

1984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동유럽 두나라에서만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었다. 蘇聯은 1985년에 착수하였다. 북한이 1984년에 改革을 도입한것은 이른편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오늘까지 위협성이 깊은 근본적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은 社會主義 崩壞時代를 맞이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II. 숨겨진 내부 개혁: 8月3日 인민소비생산운동⁽²⁾

북한이 시도하는 經濟改革의 전형적 특징의 하나는 8月 3日 人民消費品生産運動 이라는 불투명한 명칭하에 내부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여느 정부나 개혁을 하면 대단치 않은 것도 크게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 북한 정권은 8·3운동에 관해서 改革要所부분은 가리고 傳統的要所 부분만 상기 시키고 있다.

8·3운동에는 두가지 改革 요소가 있다. 하나는 市場原則의 商店制度이며 또 하나는 中央執權計劃制度 밖에서 生必需品 일부를 제조하는 측면이다. 또한 8·3운동에는 自立自存과 대중운동과 같은 북한의 전통적 이념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북한정부는 상점을 직매점으로 부르고 생필품의 脫計劃 생산은 거기에 동반되는 전통적 요소만 부각시켜 8·3운동의 개혁성을 숨기고 있다. 8·3운동은 1984年 평양시에서 있는 輕工業製品 전시장에서 발단되었다. 전시장에 진열된 제품중에는 평범한 옷, 신발, 식기, 가구, 학용품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한 생필품들이 전시장에 진열된 이유는 그들의 원료가 廢設物이나 副產物이며 제작에는 가정이나 기업소에 있는 遊休人力을 작업반으로 조직 동원했다는 特秀性에 있었다. 전시장에는 김정일 자신이 소위 현지지도를 하였다. 그는 특히 내부예비(폐설물, 부산물 혹은 지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뜻하는 북한용어)를 총원하여 제작한 질 좋고 맵시있는 생필품을 높이평가하고 두가지 지시를 내렸다.

(2) See, Hy-Sang Lee, "The August Third Program of North Korea: A Partial Rollback of Central Planning", *Korea Observer*, Vol. 21, No. 4, Winter 1990, pp. 457~474.

(1) 앞으로 家內 作業班을 더욱 많이 組織하여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는 생필품들을 많이 만들 것.

(2) 家內 作業班 활동이 강화되는데 맞게 평양시내 각 구역마다 直賣店들을 꾸려 일용품에 대한 시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 시킬 것.

이와같은 기사가 1984年 8月 4日자 로동신문에 실렸고 그리하여 8月 3日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후 북한의 기관지들은 8·3운동을 점차 열렬히 찬양보도하였다. 아래에는 8·3운동에 관한 기사 형태가 전형적이고 내용도 비교적 충실한 신문보도를 하나 소개한다. 8·3운동의 3주년이 되는 1987年 8月 3日에 로동신문은 사설과 함께 3개 기사를 그 운동에 할당했다. 그리고 제3면 꼭대기에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8月 3日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라는 구호를 크게 실었다. 3개기사의 하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오늘 8月 3日是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시 경공업제품전시장을 실무 지도하신 때로부터 3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내놓으신 대중적 인민소비품 생산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체인민이 높은 혁명적 열의를 안고 투쟁해온 나날들을 자랑스럽게 돌이켜보고 있다...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금속공장, 기계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잘 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설물로 여러가지 일용잡화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가두 인민반들에도 가내작업반을 조직하고 일용잡화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전국의 근로자들은 떨쳐나섰다... 한해동안에 1

만 9천여개의 가내작업반 부업반들이 새로 생겨났으며 700여개의 생필품 직장, 작업반이 더 꾸려져 1985년 상반기에만 해도 그 전해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137%이상 성장하였다... 지난해 5월 13日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또다시 평양시 8月 3日인민소비품 직매점 사업을 실무지도 하시었다... 전국적으로 8月 3日인민소비품 생산이 벌어진 때로부터 2년동안에 생산량이 5배로 늘어났다.”

북한신문에는 8·3운동에 관한 이와같은 보도를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8·3운동에 관한 사실내용 정보는 많지 않고 부분적이며, 주로 김정일과 노동당의 역할을 讚揚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8·3운동이 中央集權 社會主義制度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규모에서 어떻게 運營되는지의 세부정보에는 言及을 피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 정보를 끌어모아 분석 할 수 밖에 없다. 아래에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는 기사 2개를 소개한다.

“지난 5년동안에 선교구에서는 8月 3日 인민소비품 생산을 수십배로 높이고 품종수를 6,000여종(물건종류 뿐 아니라 크기와 색깔등까지도 계산한 숫자)이 나 더 늘였다. 지역구당 위원회의 지도하에 구역에서는 8月 3日 소비품 생산 대열을 1만 수천명이나 늘였고 국가로부터 지재를 받지 않고 구역안에서 만든 1000여대의 생산설비를 270여개소나 더 꾸린 생산기지에 공급하였다. 구역당 책임비서 최인덕동무는 구역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꾸리고 운영하여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결부하여 기술혁신과 창의창발성을 제고하고 하였다. 그리 하여 구역안의 한 제약공장에서는 알콜페수를 정제하여 살결물을 생산하였고 한 편직공장에서는 거기서 폐부산물로 나오는 압착테트론으로 올해 여름 그렇게 인기를 끈 중절모자를 만들었다. 구역안에 있는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는

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려 양말기계를 천여개나 다량생산하여 구역안의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 봉사단원들에게 공급하여 8월 3일 소비품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게 하였다. 구역안의 직매점 봉사일꾼들은 제품생산단위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주문봉사, 이동봉사도 조직하고 구역안의 매 세대들에 필요한 소비품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였다.”⁽³⁾

“8월 3일인민소비품 공급사업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평청구역과 선교구역 직매점 일꾼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었다. 감사문은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높은 혁명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8월 3일인민소비품 생산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주문제에 의한 공급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들이 요구하는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더 값싸게 생산하도록 생산자들과 연계를 강화하며 직매점의 물질기술 토대를 더 잘 꾸려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주부로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⁴⁾

이와같은 기사들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8·3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운동은 못쓰거나 안쓰던 재원으로 단순한 일용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 (2)운동은 생산의욕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앙집권계획제도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의욕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지역당과 행정레벨에

(3) *Rodong Sinmun*, November 10, 1989.

(4) *Rodong Sinmun*, July 23, 1989.

부여하였다.

(3)지역적 생산의욕 장치는 직매점의 설치로 제도화 되었다. 직매점은 중앙집권계획관료의 생산지표, 매상 및 가격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지역주민에게 직접 팔게 함으로써 지역자율과 생산의욕을 제도화하였다.

(4)운동에 있어 창작과 결정은 지역당과 행정요인들이 하고있다. 그들은 정치권좌를 누리는 과정에서 기업인 노릇을 하게 됐다. 그러나 지역자율 생산과 소비제도는 8·3운동에게 중앙집권계획부문을 잠식하여 탈 계획생산 부문을 확대시키는 자체추진원동력을 부여한다. 이 상황은 마치 북한의 200여군과 도시구역 하나 하나에 독립된 다종목 소비품생산회사 하나씩을 설립한 것과 같다.

(5)운동은 유희재원만 쓰도록 되어 있지만 중앙집권계획하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자재를 점점 많이 빼들려 쓰고 있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8·3운동은 탈계획 운영뿐 아니라 중앙계획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빼들려 생필품을 증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 받고있는 제도가 됐다.

이러한 특징들은 8·3운동의 實情을 敘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실정을 사실대로 국민이나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다. 반대로 8·3운동에 관하여 主體思想에 결부되는 측면들만 부각시키고 그 운동이 실질적으로 回避하는 대상인 中央集權計劃制度를 벗어나 格下시키는 측면들은 숨겨온 것이다.

8·3운동 측면 중에서 가장 강력해 부각시킨 것은 폐설물 사용에 있다. 이 측면은 자립갱생이념과 잘 부합되며 중앙계획제도를 나타나게 격하하지도 않는다. 물론 중앙계획제도가 폐물을 변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8·3운동이 필요하다

는 간접적 부정상은 염도에 두지 않을 것이다. 8·3운동의 또하나 강조해온 측면은 조금이라도 빈 땅이 있으면 경작하여 씨를 뿌려 식료나 섬유제품 원료를 재배하는 것이다. 이 측면 역시 자력갱생에 결부되며 중앙계획에 부정적이 아니다. 셋째로 8·3운동의 근로자들의 창발성 발휘를 부각해 왔다. 이 측면 역시 북한 주체사상에 결부된다. 끝으로 8·3운동에 관해 줄곳 강조한 것은 대중적 측면이다.

이들 4개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북한정권은 8·3운동이 主體式中央集權經濟體制의 창조적 자연 연장으로 부각시켜온 것이다. 그리하는 과정에서 이 운동이 中央計劃하의 投資材나 消費材 생산에 쓸모있는 기술인력과 자재를 점점 많이 빼들려 직매점에서 판매할 일용품을 생산하는 것은 숨겨온 것이다. 중앙계획부문으로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 8·3운동의 실질적 역할인 것을 숨겨온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改革의 必要性 인정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8·3운동을 계속 推進해온 것은 그 운동이 보장하는 생필품의 추가 공급이 긴급하며 동시에 그 운동을 전통적 경제체제와 융합시킬수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종합해보면 숨겨진 측면과 융합되는 측면이 8·3운동의 특징으로 부상하였다. 그러한 특징들이 북한이 시도하는 다른 개혁시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가 관찰해 보겠다.

그러기 전에 우선 考察해야 할 것은 소위 북한 改革施策의 특징에 뜻이 있으려면 8·3운동이 改革措置라는 개념에 信憑性이 있어야 하며 개념상 신빙성이 있다해도 그 운동의 규모가 미미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점이다. 여기에 관하여 이제 서류입증을 제공하겠다. 서류의 하나는 8·3운동이 中央計劃 밖에서 운영되는 것과 그 운동의 全體的 규모를 알려준다. 또하나 서류는 그 운동에 관한

북한 정권의 理想的 설명을 제공하며 셋째 것은 8·3운동이 최근에 있어서도 꾸준히 推進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로동당의 월간지 “근로자”의 1990年 1月号에 실린 文獻 한편이 8·3운동의 중요한 내용을 몇가지 알려주었다. 문헌의 저자는 최인덕, 그는 그 운동에서 模範性을 인정받아 중앙당의 감사장을 받은 평양시 선교구의 당 책임비서인 것이다. 비교적 直線的 글을 통하여 그는 8·3운동이 中央執權計劃 밖에서 운영되는 것을 確認해 주었다. 운동의 초기에는 지역의 黨과 行政要員 일부가, “8月3日 인민소비품생산이 국가의 계획지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여도 法的 追窮이나 企業活動에 지장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消費品의 양과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로되었다.” 이렇게 敘述함으로써 그 확인을 해준 것이다. 그는 이어 8·3운동이 대규모 中央工業 및 중소규모 地方工業과 더불어 제3의 소비품 생산부문을 이루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최씨의 문헌은 8·3운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나 되며 직매점 판매유통액이 전국 국영상업망 소비품 유통액의 9.5%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씨 자신의 선교구에는 8·3소비품 생산이 구역공업총생산액의 12%이며 구역상품유통액의 28%를 차지한다고 하였다.⁽⁵⁾

로동당의 이론적 月刊誌에 평양시의 한 구역 黨責任秘書가 출판한 문헌에서 알려진 정보인만큼 거기서 확인해준 탈계획운영, 그리고 전국적으로 8·3인민소비품 판매량이 국영상업망 소비품판매량의 9.5%로 1989년까지 성장했다는 것은 신빙성있는 사실로 받을 수 있겠다. 또 9.5%의 숫자는 8·3운동이 공급하는 소

(5) Choe In Duk, “Our District Party Committee’s Political Organization Works for the Increased Production of People’s Consumer Goods Through a Mass Movement,” *Kulloja*, No. 1, January 1990, pp. 80~85.

비품이 미미한 존재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뿐 아니라 로동신문의 1989年 10月 24日字 사설에는 8·3운동의 이념적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6차 전회의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 혁명을 일으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제16차 전회의의는 일용품생산을 가까운 몇해 사이에 2.5배로 늘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여기서 기본은 지금 있는 일용품공장들에 만부하를 거는 것이다...그러나 돈 뭉이 큰 제품만 생산하여서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비록 이윤은 적어도 근로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당의 요구이며 인민적인 입장이다. 모든 일용품공장들에서는 계획지표를 철저히 지키며 이미 정해진 일용잡화를 기본으로하여 세소일용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몇몇 경공업 공장등에서만 생산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일용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당에서 밝혀준대로 균중적인 일용품생산투쟁을 통해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당은 이미 8月 3日 인민소비품 생산을 비롯하여 일용품생산을 균중적 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천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다.”

이 社說은 누구를 오도할려는 목적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내부주민을 향해 8-3운동의 正當性과 必要性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필요성은 두가지 隘路를 시인하고 있다. 하나는 일용품을 생산하는 中央管理 輕工業 工場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工場들이 중앙집권계획의 생산지표 壓力 때문에

(6) See,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28, No. 12, December 1988, pp. 1271~1279 for the Joint Venture Law and the nature of the Korea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Genral Company.

다량생산을 할 수 있는 일용품에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인은 教條的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며 따라서 8·3운동이 타산적으로 시행하는 개혁조치임을 말해 준다.

1991년 5월 13日字의 로동신문은 8·3운동의 近況을 평양시 평천구역의 실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5년동안에 평천구역에서는 8월 3日인민 소비품 생산액을 4.8배이상 성장시켰고 기본품종은 1,400종, 확대품종은 4,600종을 더 늘이었다.… 오늘이 구역에서 8월 3日 인민소비품 생산액은 구역공업 총생산액에서 13%에 이르렀고 지방예산 납부액에서 8월 3日 인민소비품에 의한 몫은 25%에 달하고 있다.

구역 당책임비서 안필흠동무를 비롯한 이곳 책임 일군들은…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廢副産物의 종류와 그 수량,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등을 타산하여 해당한 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끈기 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최근 년간에 종이, 판유리, 판성냥, 도금광택제, 수지연필심, 석고, 알루미늄, 탄산가스, 비누, 토기제품, 생산기지등 460여개의 기지를 새로 꾸렸고 8월 3日 인민소비품을 계열생산하고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역에서는 생산기지를 꾸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화하였다.… 그것은 폐설물을 리용하는 못생산기지를 현대화하는 과정을 놓고 말할 수 있다. 초기에는 는 단순설비로 여러공정을 거쳐 못을 생산했었다.… 오늘은 소재만 물리면 설비가 저 혼자 못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에 발명권을 받은 것만도… 전자시계용전지약…을 비롯하여 48건이나 된다.… 생산기지를 현대화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서...주방기구, 소형선풍기등 30여종 제품의 질이 높아졌다...”

이와같은 최근 기사는 8·3운동이 1991年에도 계속해서 技術水準을 올리고 있으며 중앙계획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 인력과 자재를 점점 많이 쓰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8月 3日 人民消費生産運動은 북한 중앙집권계획제도의 일부를 改革하는 施策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지역적 자율소비와 자율생산이 야기하는 生産意慾과 自體成長 原動力을 지니고 있다. 북한정권이 中央計劃制度를 내놓고 격하시킬 각오가 없는 한 이 운동의 의의와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의 숨겨지고 融合되는 양대 특징이 북한의 다른 改革施策들과 공통점을 찾게 되면 다른차원의 意義를 제공할 수가 있다.

Ⅲ. 숨겨진 대외부문 개혁: 합영투자사업

북한은 1984年 9月 8日에 經濟改革事業의 하나로 합영법을 선포하였다. 이 시책은 동반자인 8·3운동과는 달리 전 세계에 광고됐으며 外資誘致가 목적인 만큼 그리할 수 밖에 없었다. 김일성 자신도 유력한 일본 사업가 하나를 초대하여 점심까지 나누면서 日本資本誘致協調를 당부하는 등 對外 廣告事業에 참여하였다.⁽⁷⁾

그러나 國內에서는 합영법의 존재를 되도록이면 가려두었고 現代 事業家들의 개방된 생활양식과 투명한 決定過程要求를 의식한 환경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합영법이 있어도 외자도입은 별로 없었고 약간 도입된 외자의 대부분은 재일조선인연합회 즉 朝總聯에 속하는 친북한 재일동포로부터였다. 북한은 스탈린式 閉鎖經濟와 民間投資와는 상극임이 입증됐음을 외면하고 단순히 조총련계 투자를 주도하는 對外부문 구성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북한에는 거의 자율적이면서 잘 숨겨지고 사회주의 경제에 원활히 融合된 海外經濟 部門이 생겼다.

朝總聯 중심의 합영투자사업은 1986年 8月 8日 朝鮮國際合營總會社를 設立함으로써 시작하였다⁽⁸⁾. 이회사는 1백 20만 달러라는 자그마한 자본금을 조총련과 반반 出資하는 형식으로 설립했다. 名稱은 會社고 자본금도 마련했으나 국제합영총회사의 目的은 製品生産에 있지않고 조총련 기관산하의 資金을 出資하거나 조총련계 事業家를 說服시켜 북한에 합영기업들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합영총회

(7)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Asia and Pacific*, September 17, 1985, pp. D14~D15.

(8) *The People's Korea*, December 5, 1987.

사의 정책상 중요성은 간부들의 위치에서 나타났다. 회장에는 당시 북한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김복신을 앉혔으며 두자리로된 부회장에는 김송환이 무역부 부부장과 전연식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회장을 각기 임명했다. 後者들은 아직도 합영총회사의 같은 직분에서 활약하고 있다. 설립후 1년후에 합영총회사는 15개의 합영기업을 설립할 합의를 완성했고 들째해에는 소형엔진, 자동 시동기, 피아노 등 제품을 생산할 합영기업체 36개를 창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986年 12월에 설립한 모란봉 합영회사는 합영총회사의 초기 成功 謝禮의 하나이다. 모란봉 회사는 평양시에 두개 공장을 운영하는 男性衣類 제조업체이다. 1989년의 생산량은 남자양복 400,000벌, 셔츠 800,000벌, 그리고 쉘타 000벌이었으며, 대부분이 日本, 西歐, 蘇聯에 수출되었다. 일본시장에서 판매사업을 맡고 있는 “아쇼”주식회사가 1989年 2月 21~22일에 동경의 케이오 푸라자 호텔에서 모란봉제품 展示會를 개최한 바가 있다. 여러가지 종류의 기성복과 접퍼를 비롯하여 80여종목이 진열되었으며 백화점과 의복상사들을 대표하는 구매인이 500여명이나 모였다는 보도가 있었다.⁽⁹⁾

비교적 좋은 業績을 첫해에 냈고 들째해 사업계획을 야심있게 세운 합영총회사는 들째해인 1988년에 이르러 어려운 사업환경에 봉착했다. 원인의 하나는 1987年 11월에 있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있었다. 이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조총련동포도 일부 실망하게 되어 對北韓 투자 說得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나 合營總會社에 대한 핵심적 도전은 스탈린식 북한경제의 뼈저리게 어려운 投資環境이었다. 북한에 충성하는 조총련계업자들까지도 북한에서 사업하기

(9) *The People's Korea*, March 11, 1989.

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조청련 산하 조선문제연구소 소장대리인 이남주는 “북한의 核心問題는 偏見性과 非效率性에 있다.”⁽¹⁰⁾과 말하였다.

북한에 가장 호의적인 해외사업가들도 설득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북한은 민간업체의 관심사에 적응하기에 이르렀다. 보도된 적용의 한 사례는 소유권과 경영권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企業經營權에 관해 입장이 분명치 않았었다. 1984년의 합영법 자체는 海外投資인데 株式 過半의 所有, 따라서 單獨 경영권을 허용하는듯이 보였다. 합영법 제7조는 “회사주식지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¹¹⁾

이와같이 유연한 합영법 조항이 실제로는 1985年 3월에 제정된 합영법 施行細則에 의해 바뀌었었다. 시행세칙 제28조에는 “합영회사 이사회는 출석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결정하도록”되어 있다.⁽¹²⁾ 이 만장일치 조항은 完全所有가 아니어서 소수나마 북한측 理事를 지명한 합영기업 이사회는 북한측 同意없이 經營決定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所有持分과 經營權에 관한 북한의 양보는 조총련계에서 북한기관의 참여없이 합영업체 하나를 1989年 2月 24日 설립한 것을 북한 중앙방송국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신진회사와 혜성무역회사를 비롯한 조총련계 기업들만이 합자하여 신흥합영회사를 창립했다는 보도였다. 신흥 합영회사는 자전거, 모터싸이클, 전자

(10) *North Korea Quarterly*, Nos. 52-53, Spring-Summer, 1988, p.111.

(11) Chin Kim, “North Korea Joint Venture Law”,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9, No. 2, 1988-89, p. 206.

(12) *op. cit.*, p. 215.

계산기, 컬러TV, 비디오 녹음기기, 통신기기, 전지 등 多數製品業體라고 보도되었다.⁽¹³⁾

필요하다고 느끼는 對外部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조총련계에 100%소유 합영업체를 허용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이 개발창구를 수락할 수 있겠다는 조짐이기도 했다. 조총련 동포들은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 주민에 가장 버금가게 主體思想 주입을 받아왔다. 따라서 閉鎖된 북한 경제를 조총련 동포를 통하여 資本主義 세계로 개방하는 것은 北韓住民思想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제한된 開放일 것이다. 북한에 충성하는 그들이 북한에서 투자하고 공헌하는 것은 북한의 자립자존 사상에 가장 미약한 反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총련계 업자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동안 現정권에 否正的인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해외로 돌아가면 북한내의 어려운 상황을 가장적게 전달할 것이다. 즉 조총련 同胞를 통한 對外開放은 對內影響에 있어 숨겨진 開放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합영업체 공장이나 상점들은 주민들이 작업하거나 드나드는 곳에 있다. 그들 회사 이름에는 반드시 합영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수의 북한 주민들이 合營業體들의 存在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海外事業人들 중에 조총련 同胞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합영제도의 대외의존이 自立自存 主體思想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권이 일관 지속적으로 국제 합영총회사의 활동을 합영법의 機能과 거의 동일시해온 것을 이해할 수 있다. 現政權의 일관된 슬책은 조총련 동포가 해외에 거주하지만 북한에 충성하며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공헌에 자기들 몫을 하기를 열망

(13) *North Korean News*, No. 465, March 6, 1989, p. 4.

한다는 概念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1年 4月 20日字 노동신문에 보도된 상황을 소개하겠다. (신문내용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서술하여 생생한 입증을 시도하겠다). 1991년 4月 19日 김일성은 조총련 합영제품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김정일을 비롯하여 당과 정부의 高級官僚 전부가 동행하였다. 전시회장에서는 한덕수의장등 조총련 간부들이 영접하였다. 노동신문 제1면 하반부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대형 사진에는 김일성과 수행원들이 진열된 남자구두(14켈레)를 보고 있는 광경이었다.

그림의 배경에는 어느회사의 고급남자셔츠 陳列臺가 보였고 또 평양골프연습장과 스타엔진이라고 記名이 돼있고 제품사진들이 붙어있는 揭示板 2개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사진의 김일성 오른쪽에는 조총련의 한덕수의장이 있었다. 사진의 위에 있는 기사 헤드라인과 사진 밑에있는 사진설명이 똑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 및 국가지도 간부들과 함께 총련 합영제품 전시회장을 돌아 보시였다”고 되어 있었다.

사진 위와 옆에는 짙막한 설명기사가 있었는데 절반은 수행원들의 이름과 직책 30개를 나열하는데 총당했고 나머지 지면에서 제공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4가지였다.” (1)4월의 名節에 즈음하여 開幕한 전시회장에는 지난 5년간 總聯동포 商工人들이 조국인민들과의 經濟 合榮, 合作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수백종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2)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 경공업, 농수산, 약전, 봉사를 비롯한 여러부문의 전시품들을 돌아보시면서 總聯 商工人들이 조국인민들과 경제합영, 합작을 잘하여 질좋은 製品들을 많이 生産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滿足을 표시하시였다. (3)위대한 수령 김일

성 동지께서는 在日同胞商工人들과 합영, 합작 부문의 일국들가 勤勞者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 시킴으로써 합영, 합작 사업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1991年 4月 20日字 로동신문 記事를 이렇게 길게 복사를 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시회가 표면상으로는 朝總聯 중심의 합영사업에 관한 것이지만, 그 사업을 주로 조총련 상공인들의 애국과 충성심의 표현으로 부각시키고, 사업실적에 대한 정보는 거의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합영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북한당국이나 조총련이 해외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 찾아야 한다.

조총련이 발간하는 英文字 週刊誌 “피플스 코리아”가 위에서 길게 敘述한 場面을 똑같은 사진과 함께 1991年 5月 4日字에 보도하였다. 그 記事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었다. (1)전시회는 4月 13日 평양시 동부에 있는 中央青年會館에서 開幕되었다. (2)전시회는 김일성이 1986年 2月 28日에 조총련 同胞들과 합영 사업을 벌리도록한 지시의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3)합영사업에 관한 展示會는 이번이 처음이다. (4)진열된 商品數는 基本品種이 240개이고 擴大品種은 2,140개 이었다. 끝으로 (5)전시회에 참여한 電子工業에서 16개, 농수산분야에서 13개, 그리고 용역부문에서 16개였다. 이 기사에는 김일성과 수행원들이 남자구두를 보고있는 장면, 陳列品이 없는 전시회장 前面의 사진, 그리고 개량한 한국 고전적 결혼의상을 입은 남녀 모델등 3장의 사진도 있었다.

“피플스 코리아”보도는 몇가지 뜻있는 정보를 준다.

첫째, 북한내에서는 그나마도 合營事業에 관해 처음 있는 전시회였다. 둘째, 전시회는 합영법 제정일도 아니며 국제합영총회사 설립일도 아니고 다만 김일성이 합영총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조총련 중심의 합영사업을 김일성과 結付시키는 것은 筆者의 推定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부는 조총련 상공인들의 忠誠心을 浮刻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끝으로 報道는 합영사업의 규모와 구성 정보를 제공한다. 모두 69개 企業이 참여한 것은 한두개 기업이 참여를 안했다고 가정하면 조총련 합영사업규모가 현재 약 70개가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숫자는 북한의 合營工業部가 발표한 것과 맞물린다. 합영공업부는 1989년에 設立됐지만 1990년에는 합영공업총국으로 격하되었다. 격하되기전 1989년 중엽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100개의 합영업체들이 生産段階에 들어갔고 그중에 70개는 朝總聯系였다.⁽¹⁴⁾ 여기서 한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은 1989년 중반에서 1991년 초까지 조총련 합영사업에 成長이 없었던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의 요점은 조총련 동포와의 합영사업이 1984年の 합영법에 의해 조성된 對外改革部門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북한주민에게는 對外開放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개방부문이 거의 自律的이며 북한 社會主義 經濟에 圓滑하게 융합돼 있다는 것이다. 自律性은 합영기업들이 市場原理에 의해 운영되어 일종의 共同體를 형성하여 나타난다. 융합은 합영회사들이 북한경제안의 공급자들과 원활한 거래 관계를 맺고 북한 경제에 공헌하는 역할을 말한다.

이와같은 상황은 北韓의 영문자 월간지 “외국무역”에서 소개한 조선락원 금융합영회사의 존재와 역할에서 볼 수 있다.⁽¹⁵⁾ 이 회사는 1987년에 1,000만 달러 자본금으로 조총련계와 設立한 銀行企業體이다.

(14) *The People's Korea*, May 4, 1991.

(15) *Foreign Tra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89, p. 12.

이 은행은 합영회사들에게 短期 혹은 長期資金을 원貨나 外貨로 融資하고 있다. 동시에 이 銀行은 4년 계약까지의 예금을 원貨나 外貨로 받고 있다. 예금이나 용자의 이자는 국제금융시장율에 의한다. 락원금융합영회사는 고객들을 위해 모든 국제금융업무를 이행해 주고 있다. 豫算 年度 1988년에 락원금융은 前年 1987년에 비하여 預金을 2배나 늘이고 融資는 5배나 늘였다.

락원금융합영회사는 다른 합영기업들을 고객으로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資本主義式 銀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합영기업들이 社會主義 原則의 북한 경제의 統制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서 운영되며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락원 금융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合營會社들은 공급자들과 순조롭게 거래하려 生産과 輸出에 종사함으로써 북한 경제와 融合돼 있는 것이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朝鮮合營銀行이라는 또하나 금융기업이 1989年 4月 20日에 창설된 보도가 있는 것이다.⁽¹⁶⁾ 이 은행 역시 합영기업들을 상대로 國內外 金融業務를 수행한다고 한다. 자본금 액수나 다른 細部情報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전련식이 銀行長 직책을 맡고 있다. 이 사실은 조선합영은행이 락원금융보다도 重要할 수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씨는 앞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朝總聯 中央常任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服務하고 있다. 전씨의 貫祿과 複合職分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 개혁부문은 중앙지도 역할을 하는 또하나의 권위있는 資本主義型 은행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中央執權計劃官僚들을 대신하여 資本主義 은행들이 財源分配 역할을 맡고 있는 북한 對外開放部門은 아직 소규모이기는 하나 북한주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 社會主義 經濟와 융합되어 자율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16) *The People's Korea*, June 3, 1989.

IV. 숨겨진 對南韓 交易開放⁽¹⁷⁾

北韓이 단행한 改革事業의 일부는 對南韓 交易開放에 있다. 이 經濟的 개방은 상품교역과 자본투자 두가지 側面이 있다. 후자는 네번째의 改革部門을 이루고 있어 아래에 따로 考察하겠다.

여기서는 商品去來만 考察하겠는데 이 部門의 核心的 특징은 북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숨기는 術策은 남북한 교역의 시초부터 볼 수 있었다. 교역 발생은 40kg 정도의 북한산 조개가 1988년 11월 21일에 부산항에 도착함으로써 이루어졌다.⁽¹⁸⁾ 감상적인 남한주민들은 그 뉴스를 접하여 흥분의 폭발을 이르켰다. 반대로 북한은 남북교역 움직임을 反統一 陰謀라고 非難했다. 몇개월 이전에 남한정부가 南北 交易을 誘發하기 위하여 行政措置를 취했을 때부터 북한은 그 움직임을 “교역을 한다고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영구분단을 노리는 분열주의 책동”이라고 糾彈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이면에서는 南韓 貿易商社들과 활발한 貿易相談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1월 3日には 두번째의 남북교역이 성사되었다. 동양화, 도자기, 돌 및 木工藝品을 비롯하여 북한의 藝術工藝品 621점이 부산항에 도착한 것이

(17) See, Hy-Sang Lee, "Patterns of North Korea's Economic Transactions With the South," *Asian Pacific Review*, Vol. 1, No. 1, Korean trade up to February, 1989.

(18)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3, 1988.

(19) *The People's Korea*, July 23, 1988.

다.⁽²⁰⁾ 따라서 1989년 초를 계기로 남북한 교역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때까지 무역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남한정부에 북한상품반입 신청을 제출한 무역상사의 수가 10개나 되었다. 반입신청 총액수는 4천만달러에 이르렀다.⁽²¹⁾

그러나 南北交易의 존재를 숨기려는 북한의 술책은 중지되지 않았다. 두번째 남북한 교역으로 역사에 기록된 공예품 선적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제3국인 홍콩을 經由한 후에 부산에 들어왔다. 그 후에 있는 거래에도 석탄과 같이 무거운 물자를 선적할때 남북한간의 짧은 수송에도 최소한 第3國 國籍船 이용을 고집하였다.⁽²²⁾ 대남 교역 개방으로 경제적 실리는 추궁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교역의 존재를 가리는 防牌를 요구해 왔으며 그 방패의 궁극적 대상은 북한 주민인 것이다.

1989년 초부터 오늘까지 남북교역은 태풍이 강한 바다를 航海해 왔다. 정치적 태풍이 북과 남에서 불어와 商船의 돛은 거의 접고 있었다. 교역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남한정부는 1990년에 남북협력기금을 창설하였다.⁽²³⁾ 이 기금은 商品交易, 資本投資, 共同環境保護事業, 文化, 學問, 人道主義 各분야의 南北交流를 보조할 목적으로 세웠다. 1991년 현시점에 남북협력기금은 남쪽의 쌀과 북쪽의 광산물의 교환을 보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20) *Korea Newsreview*, January 21, 1989, p. 13.

(21) *Hankuk Ilbo*, January 18, 1989.

(22) *Joon-ang Ilbo*, February 4, 1989.

(23) *Hankuk Ilbo*, February 6, 1990. The Present author is the originator of the proposal to establish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See Hy-Sang Lee, "Economic Dimensions of Inter-Korean Interactions and Cooperation," in Republic of Korean Runification, Los Angeles, California, July 6~9, 1989,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9, pp. 103-121.

남한의 천지무역회사와 북한의 금강산무역진흥회사는 남쪽쌀 5,000톤을 國際價格에 의하여 동등한 가치의 북한산 석탄 및 시멘트와 교환하기로 1991年 3月 29日에 합의를 보았다. 合意에는 交換을 남한 쌀 100,000톤까지 擴大할 것도 기대하는 내용이 있었다.⁽²⁴⁾ 남한정부는 1991年 4月 11日에 이 합의를 허가와 동시에 발표하였다.⁽²⁵⁾ 몇일후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천지무역이 쌀 교역에서 보게될 손실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남한에서 過剩生産되는 쌀은 二重穀價로 인해 國際價格보다 높아 손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원래 남북협력기금운용 규정에는 損失額의 90% 범위내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었다.⁽²⁶⁾

남한에서는 정부나 언론이나 쌀교역합의가 公開的 남북직교역의 첫사례라고 評價, 喝采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防牌와 결부해보면 직교역의 공개성은 약간 늘었을 뿐이다. 얼마전 1990年 7月에 북한은 남한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 걷은 “사랑의 쌀”일부를 수락한 일이 있었다. 그 사실이 12月에 남한에서 공개되었는데 그때 북한은 그 쌀을 돌려보내겠다 할 정도로 불쾌한 반응을 표시하였다.⁽²⁷⁾ 그일에 비추어 보면 쌀교역 합의를 公開하기로 한 것은 남북교역의 공개성에 進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진전은 어디까지나 南韓住民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각이다.

심지어 南韓政府가 한 쌀교역합의발표에도 쌀의 輸送은 第3國 輸送船으로 한다는 조건이 언급되었었다. 북한의 부두근로자들이 쌀 실어온 배가 남한에서 출발한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북한에 보낼 쌀을 포장하는

(24) *Hankuk Ilbo*, April 17, 1991.

(25) *Hankuk Ilbo*, April 11, 1991.

(26) *Hankuk Ilbo*, April 15, 1991.

(27) *North Korea News*, No. 575, April 22, 1991, p. 5.

데 있어 생산지 표시는 안하도록 되있는 조건은 남한정부 발표에 포함되 있지 않은것이다.⁽²⁸⁾ 북한 소비자들이 쌀자루를 받을 때 그 쌀이 남쪽 農民들의 産物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은 交易初期부터 남한 생산지표시 제거를 요구해 왔다. TV같은 제조품 경우에는 북한상표를 불히도록까지 요구해 왔다.⁽²⁹⁾

쌀 교역 公開性에 대해 한가지 더 지적해두겠다. 금강산 무역진흥회사가 북한에 籍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회사의 소유자 박경운은 南韓出生 美國市民이다. 그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조총련계 인사도 아니다. 박씨는 또 한걸의 방패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28) *op. cit.*, p. 4.

(29) *Hankuk Ilbo*, January 12, 1989.

V. 숨겨진 산업: 국제관광사업⁽³⁰⁾

北韓의 改革部門의 마지막 경우로 관광사업 개발을 초점으로 한 대남투자 개방을 고찰하겠다. 이 부문도 대남경제 개방의 일부이지만 중요한 측면들이 있어 따로 다루는 것이다.

첫째로 국제관광은 북한에는 가장 타당치 못하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관광은 개발된 나라의 현상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國內旅行의 자유도 주지 않는 閉鎖國이다. 그러한 나라에서 국제관광이 盛行하면 국내사상면에서 상당한 개방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광사업의 성공은 관광객수와 정비례되며 외국 관광객들은 선진국의 價値觀과 生活樣式을 막을 수 없이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의 觀光産業 개발은 남한이 오래 추구해 온 점진주의적 統一政策에 유리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이 제목을 따로 고찰하는 이유가 된다.

둘째로 북한의 국제관광산업 추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이다. 그 이유를 캐보면 본 논문에서 찾고 있는 北韓經濟改革의 典型的 특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고찰에는 북한의 끈질긴 관광산업 추구하고 그 이면에 있을 이유에 초점을 둔다.

북한은 '70년대까지 觀光産業은 낭비적이며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는 비 생산

(30) See, Hy-Sang Le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alities and Possib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Korea in the 1990: Prospects for Reunification, co-sponsored by The Claremont Institute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for Pacific Nations at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 California, February 24, 1990, for the early development of tourist program in North Korea.

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³¹⁾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 그러한 시각에서 전환을 하여 관광사업 추구에 나섰다. 결정적 전환은 1984년 합영법에 나타났다. 合作投資를 지망하는 상업분야 5개를 지적했는데 제조, 건축, 교통, 과학기술과 더불어 관광을 명시한 것이다.⁽³²⁾

그 후 북한은 강력한 노력을 쏟아 왔다. 때로는 거대하고 때로는 가련한 그 노력은 연 깊은 좌절과 실패에 봉착하였으나 오늘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련한 노력은 외국손님 유치 선전물에 북한사람들에만 뜻 깊은 觀光資源을 강조하는 것에서 볼 수 있었다. 수출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英文月間紙 “외국무역”지는 1985년 12月号에 실은 광고에 평양시내의 식당으로 옥류관과 청류관 들을 내놓았고, 평양시와 直航路를 유지하는 외국도시로서 북경, 하바라보스크, 모스크, 이렇게 셋을 내놓았다.⁽³³⁾ 1987년에 설립한 북한정부의 관광총국이 제공한 선전자료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시중호 진흙치료”와 무용가들이 15년이나 걸려 연구했다는 “무용표시법 배우기”등이 있다.⁽³⁴⁾ 거대한 기념비적 努力이 가련해진 경우는 객실 3,000개를 자랑하는 105층 류경호텔에 있다. 동양에서 제일 높고 “매끈한 피라미드의 이륙직선상”⁽³⁵⁾으로 선전하는 이 고층건물을 북한은 1987년초에 시공했으나 1991년 末인 오늘까지 완공을 못하여, “웅장한 흰 코끼리” 신세로 전락해 있다.⁽³⁶⁾

(31) *Joong-ang Ilbo*, September 15, 1990.

(32) Chin Kim, *op. cit.*, p. 175.

(33) *Foreign Tra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1985, pp. 20~21.

(34) *The People's Korea*, October 7, 1989.

(35) *The People's Korea*, August 26, 1989.

(36)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6, 1991.

외부세계의 대북한 관광은 1987年 10월에 시작되었다.⁽³⁷⁾ 그 한달동안에 약 130명의 일본관광객들이 9개의 단체여행으로 북한관광을 마치고 왔다. 그러나 그 다음달인 11月에는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관계로 日本政府는 대북한 여행을 금지하였다. 이 조치는 1989年 10月 까지 지속되었었다. 그러한 사정하에 북한은 남한을 향하여 觀光事業 추구를 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분단후 처음으로 남북교역이 1988年 11月에 발생하였다. 북한의 방패요구 때문에 교역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거래한 상품을 한번더 주문한 단계도 없었고 3·8선 양쪽에서 최소한의 사업신용을 構築한 상업동반자 한쌍도 없었다. 이렇게 미숙한 交易環境에 북한은 불쑥 세계수준관광시설을 공동개발하자고 한 것이다.

1989年 1月에 남한의 유력한 자본가 鄭周永을 초청하여 금강산과 원산을 연결하는 넓은 지역에 걸친 대규모 開發計劃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 관광개발에 남한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남한에는 금강산-원산 지역을 한반도 자연풍경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과 경험이 있다. 더욱이 남한의 참여는 南韓 觀光客 유치에 유리할 것이다. 남쪽 주민들의 다수의 北韓旅行은 정치선전과 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 것이다.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관광개발에 남쪽참여를 끌어들이지 못했다. 理由는 남쪽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더 컸기 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 개발 합의를 들은 鄭氏를 환송하고 얼마 안된 후 남한의 在野人士 문익환 목사를 환영하고 정치문제를 토의함으로써 남한 정부를 곤란케했다. 잇따른 남북한의 政治的 冷却은 觀光開發計劃도 동결시켰다. 그후 북한은 觀光開發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

(37) *The People's Korea*, October 7, 1989.

는 사업들에 열중하였다. 1989年 7월에 평양시에서 개최한 世界青年祝典 준비를 계기로 관광관련 시설을 많이 건설하였다. 그뿐 아니라 위에서 소개한 박경윤으로 하여금 관광관련 업체들을 설립하게 하였다. 그 業體의 하나는 북한의 호텔 종업원훈련에 종사하였다.⁽³⁸⁾ 그 여인은 북한과 홍콩, 일본 및 미국 사이 전세기 취항을 위한 교섭에 나섰다. 홍콩까지의 전세기 취항교섭은 성공하여 1990年 1월에는 시범비행을 완료했고 그해 4월에는 정규취항을 개시하기로 하였다.⁽³⁹⁾ 그 여인은 또 1990年 1월에 日本에 가서 나고야-평양 전세기 노선을 추진하였고 진전을 보았다는 보도가 있었다.⁽⁴⁰⁾

北韓의 觀光事業 추진은 또 한번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90年 4월로 정해놓은 홍콩-평양간 첫 취항에는 관광객 모집이 10명에도 달하지 못하여 취항을 무기연기 할 수 밖에 없었다.⁽⁴¹⁾ 이와같이 잇따른 失敗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拋棄하지를 않았다. 결국에가서 1991年 5月 17日에는 박 여인은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1年 7月 부터는 나고야에서 그후부터는 니이가타와 후쿠오카에서 정규 전세비행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⁴²⁾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일본간의 외교교섭을 고려하면 북한이 오랫동안 추진한 관광산업이 이제는 발판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끈질기게 추구했는가?

북한은 국제관광사업이 북한에서 개발할 수 있는 外貨獲得産業으로 상당히 긴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38) *The Korea Times Chicago*, June 17, 1989.

(39) *Hankuk Ilbo*, January 18, 1990.

(40) *Joong-ang Ilbo*, January 18, 1990.

(41) *Joong-ang Ilbo*, September 15, 1990.

(42) *Hankuk Ilbo*, May 18, 1991.

(43) *Joong-ang Ilbo*, May 21, 1991.

북한의 생각으로는 금강산, 백두산, 원산의 백사장을 비롯한 자연자원을 토대로 또한 만경대, 묘향산의 전람관, 판문점과 같은 정치문화 자원을 토대로하여 국제 관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국제관광이 초래하는 開放效果가 사상적 오염을 끼치는 위험은 명확히 인식하지만 다룰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루는 방법으로 案内員 制度를 기술있게 활용하면 思想汚染을 위험선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고 본다. 또한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北韓住民들은 여행자들 일부와 접촉을 하게 되도 그렇고 觀光客들의 옷이나 신발이 좋아보여도 그렇고 외부사람들을 향하여 정신적 방패를 견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관광사업은 주민들에게 적절히 가리면서 북한의 社會主義 經濟에 원활히 융합시킬 수 있는 외화획득 산업으로 간주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VI. 전 망

위에서 관찰한 經濟改革 4個部門은 현북한 정권이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지금 1991年 6월에 본 논문을 마무리하는 도중에도 북한은 UN이나 원자력시설 사찰문제에 관해 획기적 轉換을 하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한 전환은 멀지않아 일본과 또는 미국과의 外交樹立으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展望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북한의 改革과 開放을 어떠한 형태로 이끄나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考察이 시사하는 답변은 北韓改革의 근본적 형태는 과거 7년동안에 조성돼 왔으며 그것이 그것을 조성한 현정권의 최고인사에 변화가 없는한 미래 改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근본적 노선은 외교적 돌파가 마련하는 모든 자원과 기회를 숨김과 融合戰略에 따라 활용하여 주체식 사회주의 경제의 生産能力을 강화하는 것이다.

숨겨지고 융합되는 改革戰略은 두가지의 相互 補完하는 정책노선을 야기할 것이다. 이 전략과는 관계없이 쉽게 예상도 할수 있는 정책 하나는 일본 배상금의 일부를 소련과 중국이 더 이상 보조안해주는 기름과 식량의 수입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긴박성이 북한으로 하여금 日本에 접근하도록 하는 큰 이유의 하나로 널리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는 것은 배상금의 또한 부분을 투입하여 日用品生産工場들을 통째로 수입하여 중앙집권계획하에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수입해간 공장들의 불행한 결과들

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높은 비용의 공장수입방법에 역점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숨겨지고 融合되는 改革戰略은 외교돌파로 장만한 자금을 좀더 창의적이고 낮은 비용의 방향으로 투입하는 정책의 두가지를 시사해준다. 그들은 기존하는 생산구조의 生産性을 강화하고 따라서 주체식 사회주의 경제와 현정권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인 것이다.

그러한 政策의 하나는 기존의 경제개혁 4개 부문을 국내에서 눈에 띄는 정도와 思想의 汚染性이 심해지지 않는 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미 국제관광사업을 강력히 밀고 있는 조짐이 있다. 북한 로동당 대표들과 일본정당대표들이 몇일간의 정치협상을 마치고 본국정부에게 국교정상화를 촉구한 1990年 9月 28日 共同聲明書에도 일본 여권에 명시되어있는 북한여행규제조항의 삭제와 북한 취항 허용을 권고한 바가 있다.⁽⁴⁴⁾ 일본은 이미 이 두개 사항을 實踐했으며 言及한 바와 같이 7월부터의 북한 취항이 계획되어 있다. 사실인즉 1991年 6月 1日자 “피플스 코리아”에 의하면 첫 전세비행기가 6月 10日에 뜨기로 된 것이다. 북한의 관광총국의 대리점으로 지정된 東京의 “주가이”여행사가 일본의 다른 여행사 두개와 공동 주관하는 團體旅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53명의 관광객들이 5박 6일의 여정으로 각기 285,000엔(\$2,000)을 지불한다고 하였다. 그 신문기사가 “주가이”여행사를 인용한 바에 의하면 북한여행에 관해 이미 700여명의 문의자가 있었다 한다.

合營事業도 다시 성장도상에 오를 것이다. 일본기업들이 광산업과 인력집약형 輸出製造業에 투자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조총련계 인사들을 合作株主

(44) Hong Nack Kim,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urrent History*, April 1991, p. 166.

나 대외업무 간부 자격으로 합류시켜서 日本人들이 주민의 눈에 띄는 것을 최소화 할 것이다.

즉 자율적인 對外改革 部門의 성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숨겨지고 融合되어야 하는 限界를 예상할 수 있다.

對南韓 經濟開放도 주로 남한 주민시각에서만 그렇겠지만 좀더 넓어져서 상품 교역과 투자가 增加할 것이다. 제일먼저 惠澤을 받을 사업의 하는 금강산-원산 관광개발계획일 것이다. 북한은 南韓物件에서 상표와 생산지표시를 가릴수 있는 한 점차 많은 남쪽 물품을 유리한 조건하에 들여 갈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대북 상품거래보다 대북자본기술투자 선호해 왔다.)⁽⁴⁵⁾

8·3運動이 받을 간접적 도움은 숨겨지고 융합되는 개혁전략이 시사하는 또한 나의 정책과 결부된다. 이 정책은 배상금의 일부를 기존사회주의 산업시설을 개량하는데 충당하는 것이다. 물론 改良事業에 투입되는 해외자금의 역할은 최대한으로 숨기는 술책을 예상하는 것이다.

북한의 농업과 수산업을 위시한 社會主義 産業들은 시설면에서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거나, 단순히 선진과학을 내포하는 특수 원자재를 收入, 投入하여 生産性を 올릴 수 있는 사례가 不知其數 일 것이다. 아래에 한가지 사례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기존 北韓經濟의 생산성을 단 한번만이지만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경우이다.

이 事例는 북한에서 끊임없이 격고있는 電力不足에 관한다. 현재 소련과 중국이 기름공급을 줄여서 야기된 전력부족현상 이전에도 북한은 심한 電壓變動과

(45) See, Hy-Sang Lee, "Economic Program Conducive to Korean Unif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New York, NY, December 28~30, 1988.

수시로 일어나는 전력차단에 의한 전력의 공급난을 겪어왔다. UNDP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그 문제는 주로 고성능의 푸우즈, 회로차단기, 자동스위치, 변압기 등 電力配送網 부품들의 저질에 기인한 것이다.⁽⁴⁶⁾ UNDP가 권고한 바와 같이 그러한 송전부품부품들의 디자인, 제조, 그리고 실험검사에 관한 技術移轉을 받으면 電力供給 사정이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질과 양으로 개선된 전력공급은 8·3運動이나 밀중앙집권계획하에서 제조되는 모든 일용품의 질과 양을 向上시킬 것이며 농수산물의 양과 질도 높일 것이다. 이 사례와 같은 여러가지의 개선책들은 숨겨지고 융합되는 개혁전략이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생산성과 따라서 現政權의 지속성을 상당히 강화할 것으로 본다.

대국적 차원의 결론으로 끝을 맺겠다. 북한의 숨겨지고 融合되는 改革戰略은 위험천만한 근본적 改革을 회피하면서 경직된 社會主義 경제가 技能退化症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며 時間을 벌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하나 전략의 존재는 金日成-金正日 政權이 외부에서 추측하거나 희망하는 것보다는 오래유지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4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Second Country Programm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CP/DRK/2, February 1987, pp. 11-12.

3.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朴 京 愛(프랭클린&마샬大)

目 次

I. 序 文	85
II. 改革潮流에 대한 北韓의 反應	86
III. 經濟改革, 自由化 그리고 民主化	92
IV. 北韓社會의 自由化와 民主化	102

I. 序 文

1990년 美國政治學會에서 행한 基調演說에서 Adam Przeworski 教授는 東유럽에서의 共產主義 몰락은 政治學의 豫測力을 크게 상실시킨 事件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共產主義가 얼마나 弱化되어 있었으며 그저 단순히 몰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¹⁾고 하였다.

政治學에 있어서 무엇을 예측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非改革 共產主義 國家들 중의 하나인 北韓이 과연 改革이라는 歷史의 潮流를 따를것인가에 대한 研究들이 많이 있어왔다. 東유럽의 諸國家들이 共產主義를 포기하고 後期 共產主義를 향한 새질서 確立에 奮闘하고 있는 반면 北韓, 中國, 쿠바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國家들은 世界의 潮流에 편승하려는 단호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이다.

本 論文은 北韓이 과연 自由主義(自由와 人權伸張으로 定義될 수 있는)수호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民主體制 確立)를 통하여 市民社會를 確立하기 위한 種類의 社會改革을 실시할 可能性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에 그 目的이 있다. 具體적으로 본 論文은 최근 東유럽의 改革運動에 대한 北韓反應, 經濟改革과 한 社會의 自由化와 民主化와의 연계, 北韓의 경우 그러한 연계를 弱化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장애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北韓社會의 自由化와 民主化에 대한 展望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PS :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March 1991, p.21.

II. 改革潮流에 대한 北韓의 反應

東歐 共產主義의 몰락이후 北韓은 계속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강화시켜 왔으며 어느 정도는 效果的으로 外部世界로부터 자신의 體制를 지켜왔다. 1990년 신년사에서 金日成 주석은 帝國主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國民들에게 北韓의 社會主義를 와해시키려는 帝國主義의 어떠한 음모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革命鬭爭을 더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東歐에서 일고있는 改革의 바람에 관하여 그는 北韓식대로 살아야만 할 것을 강조하며 “우리는 勞動黨과 黨의 지도적인 役割을 더 한층 강화하고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구호 아래 사회전반에 걸쳐 主體思想을 確立해야 한다”⁽²⁾고 강조하였다.

1990년 전반에 걸쳐 北韓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르조아 文化와 理念”이 社會에 침투하여 靑少年과 지식인들을 물들이는 것을 防止하기위해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더 한층 강화시켜왔다. 1989年末 1,700여명의 동구유학생을 소환한데 이어 北韓은 1990年 11月 약 1,000명의 소련 유학생도 소환하였다.

동시에 지식인들의 思想教育을 위한 일환으로 당은 무엇보다도 부르조아 文化에 젖어들기 쉬운 지식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이 강조되었다.⁽³⁾ 1,460,000여명의 지식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면서, 노동신문은 부르조아 個人主義의 유산을 아직도 떨구지 못하고 있는 노장 지식인들이나 아직 資本主義의 착취를 경험치 못하여 성숙하지 못한 소장의 지식인들 모두가 다 아직 思想教育을

(2) 평양 타임즈, 1·1, 1990.

(3) 노동신문, 11·10, 1990.

더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金正日 또한 “이단문화”가 유포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이단적인 요소들이 黨體制內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였다.⁽⁴⁾ 그는 1990年 1月 각 文化界 代表들에게 직접 서한을 내보내어 그들이 資本主義 文化를 배척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의 改革運動에 관하여 北韓은 “修正主義者들과 改革主義者들에 의해 수행되는 잘못된 政策”으로 인하여 그들 社會全體가 혼란에 빠져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나라들을 크게 비판해왔다⁽⁵⁾

“共產主義 建設을 향한 대로에서 부딪치는 난관을 克服하기 위한 勞力을 있어서 요즘의 수정主義者들과 改革主義者들은 아무런 구제책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革命의 원리와 共產主義 理念教育을 강화하려는 勞力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은 資本主義 방식을 도입하였다...”

金日成은 또한 네팔의 기자와 행한 한 인터뷰에서 이들 나라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다른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은 옛 행태의 社會主義를 받아들였거나 각 나라의 社會的 특성이나 정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도력과 지도 이념이 없이 다른나라의 社會主義 방식을 기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의 社會主義 建設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⁶⁾

그는 北韓의 社會主義는 主體思想에 입각한 독특한 형태로 지도력과 지도 理念을 결여한 동구의 社會主義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념교육의 강화는 1991년에도 계속되었다. 신년사에서, 金日成 주석은 北韓

(4) 근로자, October 1990.

(5) North Korea News, December 31, 1990.

(6) North Korea News, December 24, 1990.

스타일의 社會主義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社會主義가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帝國主義者들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社會主義는 온 世界가 경탄해 마지*않을 만큼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7)라고 말했다. 北韓의 言論들도 쉬지않고 體制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國民들이 “自由에로의 潮流와 資本主義에 현혹되지 않도록”(8) 계속 國民들을 경고하고 있다. 동시에 理念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努力과 병행하여 北韓은 改革主義者들에 대항키위해 中國, 그리고 쿠바와 동맹관계를 더 한층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中國의 江澤民 총서기와 李鵬총리가 1990년과 1991년 각각 평양을 친선 방문하였고 1991年 3月 中國의 楊尙昆 주석은 “이 지구상에 어떠한 강풍이 불더라도” 두나라는 교섭의 폭을 넓히고 “끝까지 社會主義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하며 中國과 北韓간의 우호증진을 다짐하였다.(9) 또한 北韓은 社會主義를 수호하기위해 쿠바와 손잡고 싸울 것을 맹세하였다. 1990年 金日成은 Fidel Castro의 生日을 축하하기 위해 平壤駐在外國大使館에서 열린 생일축하 연회에서는 처음으로 쿠바 大使館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北韓과 소련간의 關係는 악화일로로 걸어왔으며 두나라의 言論 들은 言語들은 言論戰爭을 방불케하는 상대비판을 서슴치 않고 행해왔다. 北韓은 소련의 改革政策을 비난해 왔고 최근에는 1991年 4月20日에 있었던 盧泰愚 大統領과 고르바초프 大統領간의 頂上會談을 “돈만을 위한 음모”라고 혹평하였다.

이와같이 1989年 동구사태 이후, 北韓은 체제를 “修正主義”의 강풍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중적인 理念教育 프로그램이 필수 불가결임을 강조해 왔다.

(7) 평양 타임즈, 1·1, 1991.

(8) North Korea News, April 8, 1991.

(9) North Korea News, March 18, 1991.

政治·經濟改革을 단행하고 있는 다른 社會主義 國家의 指導者들을 修正主義者, 改革主義者들로 몰아세우며 北韓은 國民들에게 “우리식대로 살자”, “金正日同志의 발자취를 따르자”, “黨의 決定은 무엇이든지 따르자” 등과 같은 구호들을 따르도록 要求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北韓의 이 같은 努力이 어느정도는 效果的으로 자신의 體制를 다른나라에서 일고 있는 改革의 물결과 이단문화의 理念으로부터 보호해오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밖에서 일고 있는 改革의 물결에 대한 北韓의 저항은 北韓으로 하여금 특히 外交政策과 南北關係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융통성과 전술적인 적응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金日成 주석 자신도 1990년의 新年辭에서 變化하는 環境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적응력의 必要性을 내포하였다: “社會主義에 도의 길은 아직 인적 미담의 길이다…社會主義의 建設 方法은 계속 改善되어야 하고 變化하는 環境에 적응하면서 완성되어야 한다.”⁽¹⁰⁾ 동구의 옛 동맹國家들이 서둘러 南韓과 關係를 正常化시킴에 따라 北韓은 日本과 美國과의 關係改選을 통한 “南方政策”으로 이에 對應하였다.

北韓과 日本은 1991年 1月 關係 正常化를 위한 회담을 시작했으며 이는 北韓이 오랜동안 완강히 거부해온 두개의 韓國 政策을 수정한 것이라 보겠다.

北韓은 또한 美國과 參事官級 對話를 재개하여 지금까지 18차례의 會談을 진행해오고 있다.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北韓은 南韓과 접촉범위를 넓히며 융통성을 보여오고 있다. 1990年 9月 南北이 갈라진이래 처음으로 北韓의 연형묵 總理와 南韓의 강영훈 總理간의 첫 總理會談이 서울에서 열렸다. 또한 北韓은 1991年 2月 처음으로

(10) 평양 타임즈, 1·1, 1990.

世界 탁구선수권 대회와 世界 靑小年 축구대회에 韓國 단일팀을 보낼 것에 동의 하였다. 그리고 1991年 4月 北韓은 第85次 國際議會聯盟總會에 참가하는 25명의 南韓代表들의 入北을 許可하였고 그들은 南北分斷이후 北韓을 처음 방문하는 代表團이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것은 北韓이 그동안 주장해온 1國家 2政府에 의한 高麗 民主 聯邦制의 수정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의 報道에 의하면 國際議會聯盟 總會중 가진 記者會見에서 최고인민회의 統一政策審議 委員會 委員長인 윤기복 勞動黨 書記는 南北韓의 2개 政府가 잠정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의 외교와 軍事權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히었다. 이 구상은 그동안 外交와 軍事권은 하나의 國家에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던 종래 北韓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南韓의 韓民族共同體 方案에 일층 근접한 것이라 보겠다. 北韓이 마침내 두개의 韓國政策에 완강히 反對하는 입장을 포기했다는 점은 1991年 5月 南韓과 유엔 동시가입신청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드러났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北韓이 전술적인 調整을 통하여 外交政策과 對南政策에 있어 實用主義 노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 보겠다.

요컨대 北韓은 한편으로 資本主義 문화의 오염을 방지하고 社會主義의 우월성을 住民들에게 불어넣기 위해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강화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外交政策에 있어 실용주의 要素들을 확장시켜왔다. 이 두개의 모순되는 사안들은 北韓이 現在 크게 궁지에 몰려 있음을 시사한다. 두 상치되는 정책들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의 北韓의 向方을 가늠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論文은 自由化와 民主化를 向한 北韓의 社會改革 可能性을 分析해보고자 한다. 여기에 한가지의 가정은 앞으로 머지않아 權力承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경우 크게 심각한, 權力移讓 節次에 있어서의 위기는 기대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즉, 金正日은 시민봉기나 군사혁명과 같은 組織的인 反對勢力에 의해 크게 도
전받지 않고 무난히 權力을 이양 받을 것이라는 前提⁽¹¹⁾하에 社會改革 可能性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1) 이 제안에 대한 개괄적 논의는 Dae-Sook Suh, "Leadership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Paper presented to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 Seoul, Korea, April 18-23, 1991 참고.

Ⅲ. 經濟改革, 自由化 그리고 民主化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自由化 그리고 民主化 問題는 經濟改革問題와 불가분의 關係에 있기 때문에 먼저 北韓의 經濟事情에 관한 간략한 고찰을 해 보자 한다. 오늘날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問題는 악화일로로 걷고있는 經濟問題라 하겠다. 北韓의 무역량은 1988年 52億弗에서 1989년에는 48億弗 그리고 1990년에는 45億弗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계속 증가되는 무역적자로 외채는 1987年の 47億弗에서 1989년에는 67億弗로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經濟成長率은 계속 떨어져 1987年 3.3%에서 1988年과 1989년에는 각각 3.0% 그리고 2.4%로 떨어졌으며 1990년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成長律을 기록했다.⁽¹²⁾ 金日成 자신도 北韓住民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¹³⁾ 이 같은 北韓의 낮은 生活水準과 식량난 그리고 消費財 결핍현상으로 인해 北韓은 1989年을 “輕工業의 해”로 制定하였고 '90年度 速度創造 運動을 宣言하기 이르렀다. 그러나 北韓 經濟는 現在 그 어느때보다도 위기에 봉착에 있고 더구나 1991年 1月부터 北韓은 소련과의 무역을 바터제에서 硬化決濟로 바꾸어야만 했으며 中國도 1992年부터의 硬化決濟를 이미 要求한 것으로 報道되었다.⁽¹⁴⁾ 소련과 中國과의 硬化決濟는 北韓의 經濟難을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12) 세계일보(미주판), 4·6, 1991.

(13) Mainichi Shimbun과의 인터뷰, April 19, 1991, North Korea News, April 29, 1991.

(14) 세계일보(미주판), 5·17, 1991.

이와같은 狀況하에서 北韓은 生必需品 부족과 “빈곤속의 平等”問題를 해결키위해 經濟改革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經濟的인 성취業績이 아버지와 달리 정통성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金正日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Diamond, Linz 그리고 Lipset이 주장하듯이 진정한 正統性이 부족한 政權은 “現在의 經濟業績에 더욱 좌우되며 經濟的 社會的 혼란기에는 쉽게 몰락할 수 있는 취약성”⁽¹⁵⁾을 안고 있다. 비록 김정일이 그에게 正統性의 理想的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主體思想의 實現者로 간주되고는 있지만 正統性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經濟業績을 통해 住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生活水準의 向上 또는 적어도 악화를 防止하는 것이 金正日政權의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이다. 北韓의 “8.3 人民消費品”運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運動은 1984年 8月3日 金正日이 유휴 勞動力을 동원하여 日用品 生産을 증대하도록 지시한데서 비롯되었다. 로동신문에 의하면 1988년에는 수많은 勞力동원팀에 의해 50,000개 이상의 日用品이 生産되었고 이는 北韓에서 販賣되는 全體가치의 9.5%에 해당되었다고 한다.⁽¹⁶⁾ 日用品生産 증대를 金正日의 업적으로 돌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의 업적에 근거한 正統性을 높여주는 結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형태로던지간에 金正日 執權 기간중 經濟改革에는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全體的인 經濟構造의 개편이나 완전한 市長經濟로의 이행은 主體思想 실현자로서의 金正日의 理想的인 위치를 弱화시키기 때문에 그에게 커다란 위협이

(15) Larry Diamond, Juan Linz, and Seymour Lipset, “Introduction : Comparing Experiences with Democracy,” in Diamond, Linz, and Seymour eds,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p.10.

(16) 로동신문, 8-3, 1989.

될 것이다. 金正日이 現在 처하고 있는 곤경을 서로 배타적인 正統性의 두 근거들, 즉 統制되고 폐쇄된 社會體制內에서 效果的으로 유지될 수 있는 理想的 근거와 좀더 開放的인 體制內에서 向上될 수 있는 經濟的인 근거⁽¹⁷⁾, 이 두 근거들간의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야만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金正日是 자신의 體制內에 Larry Diamond가 일컫는 소위 “특유의 취약성⁽¹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體制上의 내재한 모순으로 인하여 北韓에서는 전반적인 經濟改革보다는 선택적인 改革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經濟改革이 통제되고 제한적이며 점진적인 성격의 經濟改革이라 할지라도 多元的이고 자발적인 市民社會를 향한 北韓社會의 自由化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學者들은 말하기를 經濟改革이 政治의 다원화와 民主化를 위한 압력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예를 들어 Samuel Huntington은 經濟的인 變化는 “政治意識을 고취시키고 政治的인 要求를 다양화시키며 政治참여를 증대시킨다”⁽¹⁹⁾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經濟改革은 政治的 목소리와 表現을 要求하는 새로운 利益집단을 창출한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다원화의 制度的 政治에 대한 要求는 점차적으로 自由化와 民主化에로의 길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

(17) 北韓에 적용되는 이 두가지 정통성의 근거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Han Shik Park and Kyung Ae Park, *China and North Korea: Politic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Hong Kong: Asian Research service, 1990)참고.

(18) Larry Diamond, “Beyond Authoritarianism and Totalitarianism: Strategies for Democratiza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12(1), Winter 1989, p.150.

(19)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5.

어느 學者는 知識人들과 專門家들을 經濟改革 過程에 참여토록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自由化 (自由스러운, 지적이고 사적인 活動에 대한 보장증대)가 꼭 必要하며 이는 政治的인 要求를 포함한 그들의 여러가지 要求들이 自由롭게 表現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그러므로 經濟改革은 社會를 좀더 다원화시키고 國民들로 하여금 人權意識과 정부에 대한 자신들이 要求할 수 있는 權利를 크게 깨닫게 하여 줄 것이다. 國民들이 억압적인 政權에 대해 점차적으로 參與성을 잃어가게 되면 그 政權은 할 수 없이 開放的인 變化를 모색하게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經濟改革과 한 社會의 自由化(궁극적으로는 民主化)와의 연계가 진정으로 妥當성이 있다면 이 명제가 權威主義 政권에 내포하는 바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그것은 經濟改革 그 자체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Larry Diamond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²¹⁾

“그들 (權威主義政權들)은 캐치-22 적인 正統性的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 그들에게는 업적이 유일한 權力의 正當化 수단이기 때문에 업적이 없으면 그들은 正統성을 상실케 된다. 그러나, ... 그들이 社會經濟 發展에 업적을 남길때는 國民들의 熱望은 政治參與와 政治的인 목소리를 要求하게 되고 權威主義 政權들은 자신들의 政權刺自體를 몰락시키지 않는 한 國民들의 要求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더 한층 나아가, Alexis de Tocqueville의 패러독스를 자신의 “政治機會構造”

(20) Nina Halpern,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 Communist Systems: 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Summer/Autumn, 1989, p.140.

(21) Diamond, p.150.

의 개념에 적응시킨 Peter Eisinger가 관찰한 바와같이 國民들은 사태가 가장 악화되었을 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여러가지 機會들이 막 열려질 때 政府에 반기를 들게 된다.⁽²²⁾ 그러므로 經濟改革이 政治參與에로의 機會를 열어주기 시작할 때에 政權은 軍중 동원운동에 직면케 될 것이다. 만약 이 命題가 타당하다면 어느 權威主義的인 정권도 國民들의 원하는 바가 바뀌고 그들의 要求가 表出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統治 裝置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체제는 결국 내재하는 “특유의 취약성” 때문에 中國에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南韓이 現在 北韓社會의 開放을 유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 명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北韓 體制의 붕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명제에서 提示된 바와같이 北韓 社會는 經濟改革 이후 中國에는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 社會主義 國家에서 經濟改革의 새로운 要求를 창출해 내고, 政治의 다원화와 國民들의 集團的인 政治行爲를 증가시켰지만 北韓은 동구나 또는 심지어는 中國이 영향을 받은 영향도 받지 않는 양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北韓 경우, 經濟改革과 社會의 自由화와 民主化 간의 연계를 弱化시키는 몇가지의 特殊性이 있음을 銘心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앞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金正日의 正統性은 經濟業績 뿐만이 아니라 主體思想에서도 기인된다. 經濟業績이 金正日 權力의 유일한 正當化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金正日是 政治的으로 可能的한 면에 있어서 主體思想을 보호해야만 하는 곤경에 처해있다. 더욱이 金正日 政權은 되도록이면 업적에 기초한 正統性을 강조하지 않아야만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 理由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열등감을 되도록이

(22) Peter Eisinger,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C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 1973.

면 인정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經濟業績에 기초하여 正統性을 찾아온 것은 南韓쪽이며 앞으로도 계속 南韓은 業績面에 있어 北韓을 능가할 것이다.

만약 北韓이 經濟業績面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면 正統性 問題에 관한 南韓에 비해 우월성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은 계속 理念의 純粹性을 보호하기 위하여 政治機會構造를 닫아 놓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여겨진다.

北韓의 경우 전술한 命題에서 提示된 연계를 弱化시키는 두번째 要素는 폴란드의 Solidarity나 체코의 Civic Forum과 같은 組織된 民衆집단이 北韓에는 거의 존재치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東歐 國家들은 1차대전 이후 社會主義 體制 이전에 社會의 다원화를 경험하였고 그리하여 教會와 같은 다소는 獨立的인 民衆次元의 組織들이 民衆동원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韓國人들은 전 歷史를 통해 유아적인 民主主義 조차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따라서 組織的인 行動을 통한 參與의 가치를 획득해 볼만한 機會를 가져보지 못했다. 이면에 있어서는 中國人들 조차도 北韓 住民들 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놓여 있는 듯하다. 中國의 學生들, 知識人들 그리고 大衆들은 때때로 공건한 共產黨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고무되었었다. 그들은 白話運動期間—비록 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思想, 表現, 그리고 發表의 自由를 許諾받았었다. 또한 文化革命 기간중 學生들은 정권을 비판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許諾되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에게 參與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였다.⁽²³⁾ 그러나 北韓에서는 그와같은 機會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우기 동구나 中國의 住民들과는 달리 北韓의 國民들은 政府가 뉴스나 情報

(23) 文化革命의 “民主化” 效果에 관해서는 Halpern, 참고.

의 출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通信이 두절된 상태에서 生活하고 있다. 그러므로 民衆組織을 유발시킬만한 어떠한 外部의 압력이나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1990年度부터 실시하려면 國內여행 제한 완화 措置가 갑자기 取消되었는데 이는 그러 措置가 外部로부터의 情報의 유입과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에 北韓은 최초로 두개 교회를 세웠다. 北韓 當局에 의하면 北韓에는 10,0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全國에 수백개의 家內 教會들이 몇개의 사찰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宗教團體들은 黨에 의해 완전히 統制를 받기 때문에 反政府 民衆運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北韓에는 100,000명이상의 政治犯이 全國에 걸쳐있는 12개의 . “포로 수용소”(北韓 當局에 의하면 “教育場所”)에 수감되어 있다. 이중 4개의 수용소는 1982年 이후 약 6,000내지 15,000명의 反 金正日 세력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진다.⁽²⁴⁾ 이들 政治犯들 또한 전혀 組織化될 수 없기 때문에 생존력있는 反政府세력으로 成長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날 北韓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住民을 核心層(25%), 動搖層(55%), 그리고 敵對層(20%)⁽²⁵⁾으로 區分하는 階級制度를 갖추고 있다. 이 制度와 요즘 새로 강화된 5家口 監視制度 등을 통해 政府는 住民을 완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진정한 意味의 그 어떤 大衆동원도 실제로 不可能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經濟制度의 開放後라도 社會를 自由化시키려는 民

(24) Department of State, Report submitted to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 Practices for 1989(Washington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879.

(25) Vantage Point, 13(9), September, 1990, p.12.

衆으로부터의 움직임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에는 政權에 도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人物”⁽²⁶⁾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것이다.

經濟改革과 自由化·民主化의 聯關關係를 저해하는 또 다른 要請은 北韓에는 民衆동원만이 매우 취약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로부터의 어떤 組織的인 도전도 權力構造上 별로 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政治機會構造는 權力 계층간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확장된다.⁽²⁷⁾ 예를 들면, 中國에서조차도 政權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러 權力 과벌들이 존재해 왔으며 그런 과벌주의는 끊임 없는 권력투쟁을 야기시켜왔다. Halpern은 1970年代末의 華國鋒과 鄧小平間의 권력암투가 등소평으로 하여금, 화국봉의 지도력을 침식시키는데 효과적이란 판단하에 1978-1979년의 民主化 運動을 적어도 처음에는 지지하도록 했다고 관찰한다.⁽²⁸⁾ 즉, 등소평은 모택동이 직접 택한 후계자라는 화국봉의 正統性의 주요 근거를 달성시키기 위해 自由化 경향이 있는 民主化 運動을 묵인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 경우, 주요한 과벌논쟁은 몇차례의 權力투쟁을 거친 후 1958年以後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權力투쟁을 통해 金日成은 그의 權力 위상을 弱화시켰을 수도 있는 다른 주요 지도자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동란이후 사라진 과벌주의는 權力 엘리트로부터 組織的인 政權도전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최근 朝鮮 中央放送은 黨內에 反黨·反革命 分子들이 존재해 있음을 시사하

(26) Guillermo O'Donnell and Philippe Schmitter, "Opening(and Undermining)Authoritarian Regimes," in O'Donnell,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Prospects for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27) Sidney Tarrow, Democracy and Disorder: Protest and Politics in Italy, 1965-1975(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Chapter 2.

(28) Halpern, 참고.

는 듯한 報道를 한 적이있다. : “우리黨은 主體 血統을 방해하려는 모든 이단적인 시도를 적시에 정체를 벗기고 분쇄시키는데 성공해왔으며 따라서 主體血統의 순수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오고 있다.”⁽²⁹⁾ 그러나 “이단적인” 시도가 조직적인 정권도전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요약하면, 經濟改革이 多元主義와 自由化와 民主化를 향한 압력을 招來한다는 명제는 北韓議 경우 大衆차원의 反政府세력의 결집과 權力엘리트간의 암투의 결여로 인해 그 타당성이 손상된다고 보겠다. 北韓의 경우 이 명제에 도전하는 또 다른 要素는 南韓과 美國으로 부터의 威脅意識이라 하겠다. 南韓은 北韓 住民들에 의해 4萬餘名에 이르는 美軍과 고도의 무기에 힘입어 軍事的으로 北韓을 붕괴시킬 만한 野望과 能力을 갖춘 國家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意識은 反政府勢力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을 正當化시키는데 쓰여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 北韓 社會의 自由化를 향한 努力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北韓의 共產主義가 自生的이라는 點도 위의 명제에서 提示된 經濟改革의 自由化 效果를 弱화시킬 수 있게 된다. 소련에서 이식되어온 東歐의 共產主義와는 달리, 자생적인 北韓 共產主義는 經濟改革의 自由化 效果와 연달은 共產主義 파산이라는 도미노 現象에 강력히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가 東歐에 있어서 대 변혁을 야기시킨 政治機會構造를 확장시킨 반면, 北韓의 共產主義에는 거의 파급效果를 몰고 오지 못했다. 經濟改革에 관한 지난 10年間의 中國의 提言조차도 北韓에서는 그리 열렬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主體思想에 입각한 北韓의 共產主義는 經濟改革의 自由化 效果때

(29) North Korea News, February 18, 1991.

문에 쉽게 붕괴될 것으로는 展望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된 이 모든 要靑들은 상당한 정도의 經濟體制 개방이후에도 北韓의 自由化와 民主化의 장래에 커다란 구속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IV. 北韓社會의 自由化와 民主化 展望

위에서 分析된 바와같이 여러가지 저해 要素로 인하여 經濟改革의 自由化 效果는 北韓에서는 기대되지 않는다. 위의 명제에서 기대되는 自然的인 다원주의의 發生이나 政治的인 政權 붕괴대신에 北韓에서는 社會開放·社會自由化 努力의 주도권이 위해서부터 발휘될 것으로 展望된다. Alfred Stepan은 民主主義에 도달하는 方法에 대해 쓴 한 에세이에서 權威主義政權이 民主的인 통치에로 옮겨가는 열가지의 서로 다른 行路를 分析했다.⁽³⁰⁾ 처음의 세가지 方法은 國際的인 戰爭과 占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³¹⁾ 이들은 北韓의 경우 일어날 可能性이 거의 없는 方法들이다.

다음의 세가지는 權威主義的인 政權內에서 야기되는데 이 경우 民間政權에 의한 경우, 軍事政權에 의한 경우, 그리고 制度裝置로서의 軍部に 의해 일어나는 경우 등 세가지의 多樣性이 있다.

마지막 네가지 行路는 여러가지 反對세력에 기초를 두는데 예를 들면 社會全體가 이끄는 方法(Society-led), 政黨間的 協定, 폭력적인 반란, 그리고 맑스主義的인 革命戰爭 등에 의한 것이다.

위에서 論議된 바와같이 北韓에서는 民衆계층에서건 엘리트 계층에서건 “시민

(30) Alfred Stepan, "Paths toward Redemocratiz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in O'Donnell, Schmitter, and Whitehead.

(31) 세가지의 方法은 다음과 같다. "internal restoration after external reconquest," "internal reformulation," and externally monitored installation."

사회의 힘”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마지막 네가지 方法에 의한 民主化 建設의 可能性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다. 두번째 그룹을 볼 때 北韓의 政權은 軍事政權이 아니므로 軍事政權에 의한 方法은 北韓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또한 軍部に 의한 民主化로의 전환도 있음직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보아진다. 北韓의 軍部가 政權 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北韓에 가장 가깝게 관련된 方法은 지도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方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tepan이 관찰하듯이 이 경우에는 市民社會로부터 民主化 要求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세력내의 온건파들이 民主化 過程이 필수 불가결의 制度的 要請이라는 點을 강경파들에게 說得시키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制度化된 民主主義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民主化가 아닌 自由化인 것이다. Larry Diamond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Stepan에 同意하고 있다.⁽³²⁾

“전형적으로 權威主義나 완전치 못한 民主主義 형태의 政權들의 지도계층 내에는 “강경파”라고 일컬어지는, 效果的인 政權이양에 강력히 反對하는 要所들이 존재해 있다... 市民社會로부터의 밀로 부터의 압력이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밖으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 없이는 그들의 저항은 克服되어질 수 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民主化에로의 轉換過程은 시작되어질 수조차 없는 것이다.

결국, 北韓의 경우 市民社會의 힘이 매우 미약하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民主化가 이루어지기는 극히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經濟體制 開放과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32) Diamond, pp.147-148.

展望되는 開放的 外交政策으로 미루어 볼때 北韓 政權은 政權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自由化 措置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지도층은 自由化 措置를 위한 어느정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러한 措置들이 權力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住民들로부터의 압력을 덜어줄 수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O'Donnell과 Schmitter가 주목하듯이 人權은 權威主義이양이나 지도세력의 교체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政權의 생존에 크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 브라질과 스페인과 같은 歷史的인 라틴 아메리카 케이스들이 보여주듯이 이들 政權들은 反政府세력들이 組織化되어 있지 않고 매우 힘이 약한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自由化 措置를 주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³³⁾ 이와같이 위에서 부터 조심스럽게 주도되는 단편적인 自由化 措置는 北韓의 경우에도 상당히 크다고 보겠다. 특히 經濟改革에 의해 꼭 필요하고 政治 부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분야에서부터 自由化努力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동구에서와 같이 體制의 몰락을 가져올 體制 變革이나 소련의 共產黨 統治 종식과 같은 體制內에서의 근본적인 民主化 改革은 北韓 맥락에서는 可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北韓에서는 급격한 改革政策은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있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點을 명심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社會全體가 參與하는 급격한 改革政策이 꼭 民主主義를 도래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Juan Linz가 주장하듯이 “前 政權과의 완전한 단절은 오직 革命이나 잠정

(33) O'Donnell and Schmitter, p.19.

적으로 革命的인 상태에서 만이 可能할 뿐이다.”⁽³⁴⁾ 그러나 革命的인 體制變革을 통한 權威主義와의 완전한 단절은 民主化 過程의 수립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可能性도 있다. 그것은 몰락한 前 政權과 비슷한 또 다른 非民主主義 政權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는 革命政府나 軍事政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역사적인 전례들이 보여주듯이 社會 全體에 의해 이끌어지는 급격한 改革運動은 民主主義에로의 길을 보장해 주지만은 않았다.⁽³⁵⁾ 비록 市民 社會의 힘이 民主主義에도의 전환 過程에 필수 불가결의 要素이기는 하나 “社會全體에 의해 이끌어진 政權沒落”의 결과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北韓과 같이 民主化 경험이 결여된 나라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北韓에서는 점진적이고 上向式 형태의 自由化 過程이 좀더 可能性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民主主義에로의 可能的 길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方法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장기적인 전환 過程이 급격한 전환 過程보다 北韓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民主主義 수립에 더욱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Linz가 역설하듯이 “體制의 급격한 變化를 초래할 수 있는 혁명적인 騷擾를 피하고 安定되기 위해서 후기 全體主義 사회는 全體主義 유산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버려나가야 할 것이다.”⁽³⁶⁾ 이러한 過程은 나약한 北韓의 社會

(34) Juan Linz,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egimes to democratic Systems and the Problems of Consolidation of Political democracy,”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okyo, March 29–April 1, 1982, P.34, cited in Diamond, pp.144–145.

(35) 이점에 관해서는 Stepan, and Juan Linz, “Transitions to Democracy,” The Washington Quarterly, 13, Summer 1990. 참고.

(36) Juan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Fred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3: Macro Political Theory (Mass: Addison–Wesley, 1975), p. 342, cited in Diamond, p.159.

세력이 정립되고, 組織化되고 그리고 중국에는 “政府와 市民社會의 경계선”⁽³⁷⁾을 그을 수 있게 될 여유를 줄 것이다.

또한 이過程은 이러한 社會세력들이 타협과 양보와 같은—특히 권위주의 정권과의—여러 民主主義的인 관행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일단 공고한 市民 社會가 형성되고나면 이것은 기존의 自由化 措置들을 확장 시키는데 뿐만이 아니라 民主主義 形成을 위해서도 하나의 원동력으로 크게 作用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北韓의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政策은 權力이양을 동반하지 않고 통치 엘리트의 權力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그리하여 政府가 그 폭과 시기와 진행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政府 주도 自由化 過程이라고 보겠다.

(37) Diamond, p.149.

第 2 分科 '90年代 北韓의 對外關係

4. 北韓의 對美·日 政策

金 鴻 洛(웨스트버지니아大)

目 次

I. 序 論	111
II. 北韓과 日本關係	113
III. 北韓·日本 國交正常化 會談	124
IV. 北韓과 美國關係	128
V. 結 論	137

I. 序 論

東歐羅巴 共產政權들의 몰락과 소련의 加重하는 經濟危機와 마르샤바條約機構의 解體 등 共產圈의 붕괴가 加速化되는 反面, 獨逸의 統一과 걸프灣戰爭에서 美國 및 友邦國들의 決定的 勝利는 國際政治體制에 變化를 이르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美蘇和解를 促進하였고 歐羅巴에서의 冷戰의 종식을 가져왔으며 東西關係에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패턴”을 낳게 하였다.

“冷戰의 最後의 氷河”⁽¹⁾라 할 수 있는 韓半島도 이러한 和解와 受容의 世界的인 추세에서 完全히 벗어날 수는 없다. 南韓은 소련 및 大部分의 東歐圈國家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으며 中國과도 經濟關係를 擴大하는 한편 貿易事務所를 雙方의 首都에 設置하게 되었다. 또한 “그라스노스트”(開放)의 孤兒”⁽²⁾로 指目되는 北韓마저도 歐羅巴 및 亞細亞大陸을 휩쓰는 變化와 和解의 물결을 完全히 외면할 수는 없다. 北韓은 最近에 몇가지 重要的 外交政策에 관한 決定을 發表하였다. 첫째, 日本과 全面修交를 할 것을 決定하였으며(1990年9月末), 또한 三次에 걸친 南北韓總理會談에 參與하였다. 뿐만아니라 1991年5월에 북한은 約30年間に 걸쳐 反對해 왔던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을 받아들이기로 決定하였으며 6月에는 國際原子力機構와 핵안전協定에 서명할 것과 北韓의 原子力施設에 대한 國際査察을 받아드릴 意向을 發表하였다. 또한 6月에는 韓國戰爭에서 戰死한

(1) Richard H. Solomon, “The Last Glacie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t Cold War Era,”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February 11, 1991. p. 105.

(2) Michael J. Mazarr, “Orphans of Glasnost: Cuba, North Korea, and the U.S Policy,” Korea and World Affairs, Spring 1991, p.58.

11名의 美軍유해를 美國側에 반환하였다. 이러한 重要的 政策決定은 日本 및 美國 그리고 韓國에 대한 北韓의 態도와 政策에 相當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을 表示하고 있다.

本論文의 目的은 日本과 美國에 대한 北韓의 새로운 政策을(1988年 여름부터 現在까지) 檢討 分析하는데 있다.

北韓의 새로운 對日本 및 美國政策(소위 “南方政策”)은 南韓의 北方政策의 成功的인 展開로 因해 입은 外交的 損失을 挽回하려는 意圖와 또한 北韓의 停체된 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해 必要的 外國資本 및 技術을 導入해야하는 必要性에 의하여 주로 形成 및 展開되고 있다고 보는것이 本論文의 要旨中の 하나다.

II. 北韓과 日本關係

北韓의 對日政策은 東西冷戰과 특히 南北韓對立의 배경속에서 形成되어 왔다. 日本은 北韓의 最大의 敵인 美國의 同盟國이며 또한 南韓에 대해 強力한 經濟的 政治的 支援을 하여온 國家이므로 北韓指導者들이 갖고있는 日本에 대한 認識은 1990년에 여름말까지 基本的으로 良好하지 못했다. 平壤政權의 公式用語에 의하면 日本은 東亞細亞에서 美國 “帝國主義”의 最大의 協力者이며 “大東亞共榮圈”을 復活시키기 위하여 再武裝을 하고 있다고 묘사되어 왔다. 北韓의 公式見解에 의하면 第二次大戰의 帝國主義國家인 日本이 亞細亞를 支配하고 北韓의 意向에 맞는 北韓의 統一을 防止하기 위하여 韓國戰爭의 “帝國主義國家”인 美國과 同盟을 맺었다고 간주하고 있다.⁽³⁾ 또한 1980年代에는 北韓은 日本이 美國과 南韓과 새로운 韓國戰爭을 準備하기위해 “三國同盟”에 가담하고 있다는 非難을 되풀이하였다.

北韓의 強한 反日宣傳에도 不拘하고 北韓지도층은 日本과의 유대를 形成해야 하는 重要性을 간과하지 않았다. 北韓은 政治的으로 日本과 韓國과의 이간책을 通해서 韓國關係를 弱화시키려 하였고 또한 日本이 “親南韓·反北韓政策”을 止揚하고 等距離 政策을 채택하기를 希願했다. 經濟的으로 北韓은 日本과의 貿易關係를 擴大하기를 願했다.

그 理由는 日本은 北韓이 원하는 優秀한 商品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提

(3) Denny Roy, "North Korea's Relations with Japan: The Legacy of War," Asian Survey, December 1988, p. 1282.

供할 經濟能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北韓은 日本社會黨 지도자들과 一部 左傾人士 및 一部 保守的 政客 및 實業家들에 대하여 1970年初부터 환심을 보이면서 포섭하려는 努力을 경주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까지 다음과 같은 理由로 인해 對日政策은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했다.

첫째, 1965년 韓日國交正常化 以後 日本의 自民黨 지도자들은 南北韓의 對立이 해소되기보다 격렬해짐으로 인해 北韓과의 外交關係樹立의 可能性을 排除하게 되었다. 即 南北韓이 平和共存이나 平和統一의 方案에 合意할 수 있을때까지 北韓에 대한 外交的 承認을 하는 것은 賢明하지 않다고 보았다.⁽⁵⁾ 反面, 南韓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重要함을 認識한 日本 自民黨 政府는 南韓에 대한 政治的 經濟的 援助를 提供하였다. 따라서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은 美國의 對韓政策의 影響을 어떤 意味에서는 反映하였다고 볼 수 있다. 即 美國은 北韓에 대해서 不承認政策을 固守하면서 南韓에 대해서는 韓國戰爭 以後 安保를 保證하여 왔다. 日本과 南韓의 유대가 強化되는 것이 北韓支配下의 統一에 支障이 된다는 認識下에서 北韓지도자들은 1965年 韓日條約을 非難하였을 뿐만아니라 폐기할 것을 日本에 要求하였다. 그러나 日本의 保守黨지도자들은 韓日間의 安保가 直結된 點에 留意하고 北韓의 壓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5a)

(4) Ibid., p. 1286. See also, Robert Scalapino, "North Korean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Robert A. Scalapino and Jun Yop Kim(ed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Press, 1983), pp. 335-336. See also, Hong N. Kim, "Japan's North Korea Policy since 1965," Korea and World affairs, Winter 1983, pp. 656-676.

(5) Tsuyoshi Yamamoto, "Hakusho: Nitcho Fuseijo Kankei," Sekai, May 1988, pp. 118-119

(5a) Hong N. Kim, "Japanese Korean Relations in the 1980s," Asian Survey, May 1987, pp. 497-514.

둘째로, 1970年代 中盤부터 北韓은 日本이 南韓과 美國과 共謀하여 四大強國의 南北韓 “交叉承認”과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을 通해서 韓半島 分斷의 永久化를 企圖하고 있다고 憚란하여 왔다. 同時에 北韓은 日本과의 國交正常化가 南韓, 美國 및 日本이 共謀해서 推進하고 있는 “交叉承認”을 이롭게 한다는 理由에서 日本과의 外交關係樹立의 可能性을 排除하였다.⁽⁶⁾

셋째로, 日本과 北韓關係는 北韓의 對日 무역債務 不履行으로 因해 惡化되었다. 1976年末까지 北韓은 日本에 대해 三億六千萬弗의 負債를 지게 되었으며 期限이 지난 滯拂額이 年中 一億二千萬弗에 達했다. 日本의 債權者들은 1976年, 1979年과 1983년에 三次에 걸쳐서 北韓의 債務償還時限表를 修正하여 주었지만 1984년에 北韓은 一方的으로 對日 무역 債務償還을 中斷하고 말았다.

따라서, 北韓의 對日 무역 債務는 日貨一兆円(約 6億弗)에 達하게 되었다.

1986년에 日本通商省는 北韓의 債務不履行으로 因해 被害를 입게된 日本債權者들에게 政府의 輸出 保險을 適用하여 300億円(日貨)을 支拂하였다.⁽⁷⁾

同時에 日本通商省은 北韓에 대해서 輸出保險制를 停止하게 되었다. 따라서 日本과 北韓間의 무역은 現金 決濟로 하게 됨으로서 이러한 規制下에서 무역去來額은 보다 감축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事態로 因해 北韓의 信用度는 低落되게 되었다.

넷째로, 1980年代에 日本-北韓關係는 北韓의 工作員들이 南韓에 대한 “테러” 行爲를 자행함으로써 더욱 惡化되었다. 1983年10月 량군에서 北韓이 장치한 시

(6) Yamamoto, op. cit., pp. 139-140.

(7) Hong Nack Kim,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Problems and Prospects,” Korea and World Affairs, Winter 1990, pp. 649-670, esp. 651-652.

한쪽탄에 의해서 四名의南韓 閣僚를 포함해서 17名이 暗殺 당하게 되자 日本은 北韓에 대한 制裁措置를 채택했으며 이 措置는 1985年1月に 解除가 되었지만 1987年에 北韓이 KAL機를 시한폭탄으로 空中爆發하여 115名을 殺害하게 되자⁽⁸⁾ 다시 制裁措置가 取해졌다.

이러한 北韓側의 暴力行爲는 北韓의 이미지를 크게 損傷시켰을 뿐만아니라 北韓-日本間의 關係를 惡化시켰다.

다섯째, 北韓-日本關係는 1983年 11月に 北韓이 체포 구금한 2名의 日本人 船員들을 釋放하지 않으므로 한층 惡化되었다. 第18富士山號의 船長과 機關長은 北韓兵士 민홍구의 日本密航을 방조하였다는 理由로 체포되었고 그後 이들은 “間諜罪”로 15年の 重勞動刑을 받게 되었다. 이들의 釋放을 위해 日本外交官들은 北韓官吏들과 數次의 交渉을 하였지만 失敗하였다. 理由는 민홍구를 日本에서 送還하지 않는 限 北韓은 이들 日人船員들의 釋放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日本은 閔이 日本에 亡命할 뜻을 分明히 한 理由로 送還을 거부하였다.

北韓과 日本의 關係는 1988年 7月7日에 있는 盧泰愚大統領의 “北方政策”에 관한 特別宣言이 發表된 後부터 漸次 好轉되기 始作했다.

이 宣言에서 盧대통령은 韓國의 友邦國들이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하는 것을 도와줄 意向이 있음을 明白히 하였다. 이러한 南韓의 新政策은 日本에게 고무적이었다. 왜냐하면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試圖하려는 日本의 움직임에 대해서 從前에는 韓國側이 反對하였고 이러한 韓國側의 反對가 日本의 對北韓政策에 壓力으로 作用했기 때문이다.

“7·7宣言”직후, 日本은 北韓에 억류중인 日人船員의 釋放을 前提條件으로 北

(8) Ibid., p. 652.

韓과의 交渉을 提案하였으나 北韓은 이 提議를 거절하였다. 뿐만아니라 1989年 1月11日에 發表한 演說文⁽⁹⁾을 통해 北韓外交部는 日本의 對北韓 敵對政策을 非難하였을 뿐만아니라 北韓-日本關係의 重要障害物을 제거할 것을 要求했다.

即 日本은 “親南韓 反北韓”政策을 포기하고 “交叉承認”과 “交叉接觸”등을 통한 兩韓分斷 “음모”에 가담하지 말 것과 “朝總聯”에 대한 탄압을 中斷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1965年의 韓日基本條約과 日本이 韓國을 “唯一合法”政府로 認定(同3條)한 것을 신랄하게 비난한 후 이러한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는 限 日本과의 對話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主張했다.

끝으로, 日本이 植民地時代에 자행한 韓國인들에 대한 만행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이 없었음을 힐난하고 日本은 北韓에 대해서 賠償을 해야할 義務가 있다고 結論을 지었다.

約1週日後에 發表된 聲明書를 통해 日本外務省은 北韓이 主張한 日本의 對北 敵視政策은 誤解에 基因한 것이라고 說明한 후 아무런 前提條件없이 兩國間의 懸案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 北韓과 交渉할 意向이 있음을 明白히 했다.⁽¹⁰⁾ 그러나 北韓側의 反應은 否定的이었다.

北韓과의 關係 改善의 意向을 表示하기 爲해 1989年 3月30日 竹下登 總理大臣은 韓半島의 모든 韓國人에게 日本이 過去 植民支配로 그 저지른 行爲에 對해서 “깊은 反省과 유감의 뜻”을 表明하였고⁽¹¹⁾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의 關係改善을 希願하는 日本政府의 意向을 再確認한 바 있다. 日本 總理大臣으로

(9) For a Japanese text of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s statement, see jGendai Korea, April 1989, p. 68.

(10) Asahi Shimbun, January 21, 1989.

(11) Asahi Shimbun, March 30, 1989(evening edition).

서 北韓의 正式國號를 呼稱한 것은 竹下가 처음이었다. 竹下 發言에 대한 北韓側의 反應은 好意的이었다. 金日成은 “日本의 약간의 官吏들이 前向的인 發言”을 하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表明하였고⁽¹²⁾ 또한 金丸信을 단장으로 하는 自民黨代表團의 1989年 9월에 北韓訪問을 환영할 뜻을 表示했다. 그러나 竹下內閣이 리쿠르트事件으로 인해 1989年 5월에 總辭職하게 됨으로써 竹下の 對北政策도 水泡化되고 말았고 그후 1990年 여름에 이르러서야 日本과 北韓은 關係改善에 대한 關心을 다시 表示하게 되었다.

1990年 6月24日 北韓政府의 副主席 李鍾玉은 日本社會黨副委員長 欠保亘(구보 와다루)에게 北韓은 日本自民黨과 社會黨代表의 北韓共同訪問을 환영하겠다는 意向을 傳했다. 이러한 北韓의 態度變化를 이르기게 한 많은 理由⁽¹³⁾中 첫째는 日本自民黨이 1990年 2월에 있는 總選舉에서 餘裕있는 過半數議席을 차지하게 되자 (512席中 286席) 北韓은 自民黨과 去來하여야할 必要性을 認識하게 되었다. 1990年 7월에 있는 參議院選舉에서 리쿠르트事件 등으로 因해 自民黨이 慘敗하게 되자 北韓은 日本社會黨이 主導하는 聯合政權이 樹立될 것을 期待한 바 있다.

둘째, 韓·蘇頂上會談이 샌프란시스코에서 1990年 6月4일에 開催된 것은 北韓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盧-고르바초프의 劇的인 會談은 南韓과 蘇聯과의 外交關係 樹立이 임박하고 있음을 強力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와 서울의 和解로 因해 생긴 外交的 損失과 打擊을 만회하기 위하여 北韓 日本과 和解를 하기로 決定했다.

(12) Hong Nack Kim,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urrent History, April 1991. p. 165.

(13) Ibid., p. 165.

셋째, 다른 한가지 重要한 理由는 北韓의 경제적인 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外國의 資本과 技術이 必要했기 때문이다. 即 北韓의 經濟가 2% 内外의 成長率로 정체하고 있고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外國의 資本과 技術이 必要하지만 經濟적으로 困難한 소련이나 東歐圈國家들로부터 經濟援助를 기대할 수 없고 또한 中國 역시 經濟적으로는 相當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利用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案이었다.

久保를 통해서 傳해진 北韓의 提案에 대한 日本側의 反應은 好意的이었다. 왜냐하면 日本지도자들은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해야 한다는 意見이 漸次 強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0年 6月15日 海部俊樹(가이후 도시키)總理大臣은 “아무런 前提條件없이 北韓과 接觸하고 싶다”⁽¹⁴⁾는 意向을 表明했으며 金丸信이 인솔하는 自民黨 代表團이 早速히 北韓을 訪問하게 되기를 願한다고 言明했다. 이러한 海部內閣의 對北韓 積極姿勢는 다음 몇가지 理由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첫째, 6月4日에 開催된 소련과 南韓의 頂上會談은 이러한 急激한 關係進展을 豫期치 않은 日本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盧大統領이 1990年 5月24日에서 26日까지 日本을 訪問하면서도 海部總理에게 이 問題에 관한 事前協議가 없었기 때문에 日本側은 충격을 받았으며 비록 公式적으로는 韓蘇頂上會談에 대해서 歡迎의 뜻을 表明했지만 日本은 韓國側의 外交的 缺禮에 대해서 內心不滿스러워 했다.

둘째, 日本지도자들은 韓國이 취한 外交的 이니시아티브로 因해 外交的인 面에서 機先을 잃게되고 不利한 立場에 놓여졌다고 느끼게 되었다. 1956년부터 소

(14) Asahi Shimbun, June 16, 1990.

(15) Kim,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n-Japanese Relations: Problems and Prospects,” pp. 656-657.

련과 平和條約 체결을 위한 交渉에서 별로 進展을 보지 못한 日本으로서는 韓國이 對蘇 外交成功을 부러워하는 것은 當然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日本의 國際的 威信과 영향력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日本도 外交的 分析措置를 取해야 할 必要性이 있었다. 이 點에서 北韓과의 修交가 必要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北韓과 修交問題는 二次大戰後의 戰後問題處理에 있어서의 마지막 宿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地理的 近接성과 歷史的 文化的인 유래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日本과 外交關係를 맺지않은 唯一한 나라이다. 또한, 北韓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되면 日本은 南韓과 北韓과 同時에 紐帶를 갖는 利點을 享有하게 되며 이러한 利點을 소련이 획득하게 될 것이 時間問題로 明若해진 時點에서 北韓과의 和解는 日本에게 必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日本지도자들은 北韓과의 接觸과 交流가 增加되면 北韓으로하여금 外部世界에 대한 보다 現實的인 實相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또한 四大強國의 南北韓 “交叉承認”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있었다. 그들은 北韓으로 하여금 國際社會의 무대에 參與케 誘導하는 것이 北韓을 고립화시키는 政策보다 韓半島의 긴장완화에 賢明한 方案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認識은 소련共産圈國家들의 政治 및 經濟的 危機로 인해 冷戰이 終熄되게 됨으로 인해 보다 強해졌다고 볼 수 있다.

金丸信이 인솔하는 自民黨代表團과 田邊誠(다나베 마코도)를 團長으로 한 社會黨 代表團은 1990年 9月24日에 평양에 到着했다. 日本代表團과의 第一次會談에서 北韓 勞動黨의 國際問題담당 金容淳 書記는 北韓과 日本間의 關係正常화를 위해서는 日本의 植民地支配에 대한 謝過와 補償이 무엇보다 重要하며 戰後

45年間の 非正常的 關係에 대한 日本側の 責任是認이 必要하다고 強調하였다. 만약 이러한 問題들이 解決된다면 다른 問題들은 早速히 解決될 수 있다고 金容淳은 강조했다.

謝過에 관해서는 金丸은 平壤到着即後에 있는 歡迎宴會에서 日本의 植民地統治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金丸은 海部 總理가 自民黨總裁資格으로 金日成에게 쓴 植民地統治에 대한 사과文을 갖고 왔으며 金日成에게 傳達했다.⁽¹⁶⁾

賠償問題에 관해서, 金丸은 “外交關係 樹立與否와 關係없이 日本은 배상문제를 解決할 責任이 있다”고⁽¹⁷⁾ 前提한 후 비록 日·北韓間에 外交關係가 樹立되기 전이라도 一部補償을 해야한다는 見解를 表明했다.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兩國間の 協議機構設立問題에 관해서 金丸은 1970年中盤부터 北韓이 “교차승인”에 直結된다는 理由로 日本과의 國交正常化를 反對해온 點을 감안해서 東京과 平양에 連絡事務所를 수립할 것을 提案할 計劃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北韓側の 豫期치 않은 政策變化로 因해 金丸의 계획은 大幅修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日本과의 國交正常化를 하겠다는 北韓側の 決定은 9月27日에 있는 日·北韓 政府官吏會談에서 北韓側の 代表에 의해서 認識이 되었다. 그러나 그 具體的 理由는 金容淳이 金丸와 田邊과의 會談에서 說明함으로써 明白해졌다. 金에 의하면 國交問題에 關한 北韓側の 態度變化는 첫째 國際情勢의 變化와 둘째 北韓이

(16) Ibid., p. 659.

(17) Japan Times, September 26, 1990. See also, Asahi Shimbun, September 26, 1990.

日本과의 外交關係樹立交渉에 應하지 않는 限 賠償問題는 고려할 수 없다는 日本側의 態度등에 의해서 不可避했다고 解明했다.⁽¹⁸⁾ 따라서 國交正常化에 대한 北韓의 態度變化는 主로 經濟的理由(即 日本으로부터 補償을 받기 위한)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國際孤立을 벗어나려는 外交的 側面外에)

日本側代表들은 金日成을 包含한 北韓지도자들과의 會談을 통해서 마련한 共同宣言⁽¹⁹⁾을 1990年 9月28日에 發表했다. 8項目에 達하는 共同宣言에 依하면 三黨代表들은 北韓과 日本의 國交樹立과 함께 日本은 과거 식민지 36年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戰後45年間 朝鮮인민에게 미친 손실에 대해 公式謝罪하며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두나라간에 존재하는 非正常的인 상태를 해소하고 되도록 빠른 시기에 國交를 수립해야 하며 양국간의 懸案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간 교섭을 '90年 11月중에 개시하도록 각각 自國政府에 강력히 “중용”한다는 것을 다짐했다. 또한 ‘조선은 하나이고’ 南北對話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달성되어야 하고 日本旅券의 북한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衛星 通信을 연결하며 항공편을 직접 運航하는데 合意를 보았다.

共同宣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억류중인 日船員 2명은 10월초에 석방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10月10日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및 사회당 대표와 함께 日本으로 귀국했다.

日本의 自民黨과 社會黨은 共同宣言을 환영했지만 一部有力한 지도자들과 言論界에서 金丸의 訪北外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18) Asahi Shimbun, September 28, 1990.

(19) For a text of the joint declaration, see Asahe Shimbun, September 29, 1990.

즉 북한방문을 통해서 金丸은 북한의 두터운 장벽에 “바람구멍”을 뚫겠다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가 北韓측과의 교섭과정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영합하고
無理한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한데 대해 많은 비판과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²⁰⁾

日本外務省을 비롯해서 日本의 一部지도자들은 賠償問題와 관련 “전후45년”
을 포함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日本은 法的으로 전후 45년에 대해 보상해야 할
하등의 이유나 責任이 없다고 보고 있다.⁽²¹⁾ 또한 많은 日本人들은 戰後의 양국
간의 비정상적인 關係는 冷戰과 같은 국제정세 때문이며(일본이 強制할 수 없
는) 日·北韓關係의 惡化에 대한 責任은 北韓측의 非友好的이고 無分別한 行動
에 起因하는 點이 많은 만큼 北韓에게 日本보다 더 큰 責任이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도 日·北韓正常化와 관련해서 發表된 공동선언에 명시된
條件과 條文들에 대해 不安感을 表明했다.⁽²²⁾ 즉 한국인들은 日·北韓國交 正常
化가 남한의 安保에 던지는 위험성에 대해 不安感을 느끼고 있다. 만약 日本이
제공하는 莫大한 배상금과 경제원조가 北韓의 軍事力 강화에 使用되게 된다면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한국에 불리하게 깨뜨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 역시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南韓과 미국은 일본의 보상금이 북한의 원자핵무기 개발에 사용될까 봐 우려
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미국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IAEA) 核安全
協定에 서명할 것을 主張하도록 要請했으며 日本은 北韓과의 正常化 會談에서
이문제를 提起할 것에 同意하였다.

(20) For a detailed analysis, see Kim, op. cit., pp. 662-663.

(21) Yomiuri Shimbun, September 29 & 30, 1990.

(22) For a detailed analysis, see Kim, op. cit., pp. 664-667. See also, Hong Nack Kim, “Ilbon eui kwasok pukhan cheupkun,” Dong-A Ilbo, October 16, 1990.

Ⅲ.北韓·日本 國交正常化 會談

1990年 가을에 三次에 걸친 豫備會談을 통해서 議題와 本會談 開催日字 場所에 合意를 본 후 第一次本會談은 평양에서 '91年 1月30日에서 31日까지, 第二次本會談은 東京에서 3月10日부터 11日까지 開催되었지만 몇가지 主要問題에 關한 兩國間의 見解의 差를 좁히지 못했다.

첫째, 北韓은 日本이 第二次大戰 以前에 韓國을 植民地로 支配한데 對한 賠償을 要求하였으며 賠償을 要求하는 근거로 1910年에 韓日合邦이 있는 以後 韓國과 日本은 “交戰”상태에 있었다고 主張하였다.⁽²³⁾ 또한 北韓은 戰後45年에 關해서도 日本이 韓半島分斷에 責任이 있고 또한 韓國戰爭에서 “美軍의 補給基地 修理基地 및 攻擊基地로서 役割을 遂行했기 때문에 보상을 要求한다고 主張했다.^(23a) 日本이 지난 45年間 사과나 보상을 北韓에 대해서 하지 않았음을 強調하면서 北韓의 外交部 副部長 田仁徹은 戰後에 日本이 “北韓人民에게 准 政治的 經濟的 損失은 莫大하다”⁽²⁴⁾고 主張했다.

北韓과의 關係 改善의 意向을 表示하기 爲해 1989年 3月30日 竹下登 總理大臣은 韓半島의 모든 韓國人에게 日本이 過去 植民支配로 한반도에서 저지른 行爲에 對해서 “깊은 反省과 유감의 뜻”을 表明하였고

그러나 日本은 北韓側主張을 拒否하였고 日本側首席代表인 中平立(나카히라 노보루)는 “평양側의 主張은 國際法上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斷言했다.⁽²⁵⁾ 또

(23) Pyongyang Times, February 2, 1991 & March 30, 1991. See also, People's Korea, February 2-9, 1991 and March 30-April 6, 1991.

(23a) Pyongyang Times, February 2, 1991

(24) Ibid.

(25) Yomiuri Shimbun, March 12, 1991.

한 中平는 “朝鮮”이 第二次大戰에 參戰한 聯合國의 一員이 아님을 지적하고 日本은 植民地時期에 韓國人에 대해 끼친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할 意向이 있지만 戰後의 非正常的 關係에 대해서는 보상해야할 法的근거가 없다고 確言했다.

둘째, 兩國間的 妥協을 어렵게한 다른하나의, 장애물은 北韓의 原子核施設의 國際查察問題였다. 日本側은 正常化會談이 兩國間的 外交關係 正常化는 물론 東아세아의 平和와 安定을 增進시켜야 한다는 視點에서 北韓이 원자핵시설을 國際核擴散條約에 의거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查察에 應할것을 宗용하였다. 第二次會談에서도 日本은 北韓이 국제사찰을 受容할 것을 再次 宗용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핵시설의 國際查察은 正常化會談에서 論議할 性質의 問題가 아니며 이 問題는 北韓과 美國間에 討議되어야 할 問題이라고 反論을 제기했다. 그 理由로 美國이 南韓에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국제사찰을 美國의 핵무기에 관해서도 行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만약 이 핵무기의 위협이 除去된다면 우리는 IAEA와 即時 핵안전 協定에 서명하겠다”고 田仁徹은 言明했다. 또한 美國이 北韓에 대해서 핵武器를 使用하지 않겠다는 法的確約을 하는 경우에는 핵安全協定에 서명할 것이라고 宣言했다.⁽²⁶⁾

셋째, 1991年 봄에 접어들면서 北韓의 法的관할권(管轄權)의 範圍도 日·北韓 會談의 하나의 큰 이슈(問題)로 부각되게 되었다. 日本은 北韓의 領土的 管할권이 韓半島에 있어서 미치는 範圍를 北韓側이 明示하지 않는 限 國交正常化條約을 체결할 意思가 없으며 따라서 領土的 管할권의 범위를 明示해 줄 것을 要求했다. 北韓은 日本側의 要求를 拒絶하면서 “관할권의 범위에 關해서 質問할 必

(26) Pyongyang Times, February 2, 1991 & March 30, 1991.

要件 없고 北韓과 日本은 國際慣例에 따라 相互主權을 承認하고 關係를 수립하면 된다”고 主張했다.

또한 北韓側은 “만약에 管轄권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은 國內的 問題의 性質을 띠므로 南北韓이 解決할 問題이지 日本의 判斷을 必要로 하는 問題가 아니다”⁽²⁷⁾ 라고 강변했다.

따라서 北韓側은 北韓의 管轄권이 한반도의 休戰線北方에 限定되어 있다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으려 했고 이를 否認함으로써 韓半島의 政治的 現實을 무시하고 “唯一合法”政權으로서 그들의 管轄권이 한반도 全體에 미친다는 主張을 하려고 했다.

1991年 5月20日에서 22日에 北京에서 개최된 第三次 本會談에서도 北韓과 日本은 핵사찰문제와 戰後보상문제에 대한 見解의 差異를 좁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管轄권의 範圍에 관해서는 北韓의 法的管轄권이 한반도의 “半”에서만 有效하다는 點을 是認하게 되었다.⁽²⁸⁾ 이러한 양보를 함으로써 北韓은 日本과의 外交關係를 먼저 正常化한 후 보상문제와 핵사찰 문제를 後에 討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日本側은 北韓의 修正案을 拒絶하였다. 中平大使에 의하면 北韓이 핵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 限 外交關係 正常化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日本은 南北對話의 進展과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을 願하고 있음을 分明히 했다. 왜냐하면 日·北韓國交正常化는 이 地域의 平和와 安保에 기여하여야 하며 現存하는 日本과 南韓과의 關係를 손상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27) People's Korea, March 30–April 6, 1991. See also, Pyongyang Times, March 30, 1991.

(28) Yomiuri Shimbun, May 22 & 23, 1991. See also, Yomiuri Daily, May 24, 1991; and Pyongyang Times, May 25, 1991.

說明했다.

그러나 다음會談의 日時를 定하지 못한 채 第三次會談이 끝나게 된것은 “이은혜”라는 別名을 갖춘 日本女子問題때문이었다. 이 行方不明이된 日女는 日本 경찰이 보내온 사진을 通해서 KAL機事件의 犯人이었던 김현희가 北韓에서의 그녀의 日本語교사였다고 證言하고 나섰으며 김이 제공한 “이은혜”의 背景과 1978년에 行方不明이된 田口人重(다구찌야에로)라는 日本女子의 배경이 일치됨으로서 이 女子에 관한 情報를 日本側이 北韓에 要求하게 되었다.⁽²⁹⁾ 그러나 北韓은 이의 要求를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會談에 임할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日本과 北韓의 正常化會談은 日本이 支持해야 할 보상액수에 대한 현저한 認識의 差異로 인해 相當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日本外務省은 1965년에 南韓에 對해서 提供했던 5億弗과 同一한 額數를 생각하고 있는 反面, 北韓과 가까운 消息通에 依하면 그동안의 인프레와 日本 韓國에 제공한 경제 원조들을 加算해서 約 50億弗 내지 100億弗(戰後 45年分을 포함시켜)을 要求하게 될 것으로 推測하고 있다.

이러한 認識의 差異를 감안할 때 相互가 받아들일 수 있는 妥協額을 算出해 내는 것은 容易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北韓側이 91年11月까지 國交正常化를 할 것을 希望하고 있지만 正常化會談은 相當한 기간 지연될 可能性이 크다.

(29) Hankuk Ilbo, May 17, 1991. See also, Asahi shimbun, May 16, 1991.

IV. 北韓과 美國關係

1988년 가을부터 北韓은 美國과의 關係改善에 關心을 보이기 始作했다. 例를 들면 1989年 5월에 北韓은 韓國戰爭에서 行方不明이된 5名の 美國兵士들의 유해를 반환했고, 最近에는 美國의 저명한 學者 및 퇴역將星등을 北韓에 招請했으며 1991年6月에는 行方不明이 된 美軍兵士 11名の 유해를 반환했으며 앞으로도 美國과 이 問題에 關해서 協力할 意向을 밝혔다. 또한 美國과 北韓은 1988年 겨울부터 北京에서 外交官의 接觸을 가져왔으며 北韓은 이러한 對話도 大使級水準으로 格上할 것을 希望하고 있다.

1948년부터 北韓은 美國을 最大의 敵으로 간주해 왔다. 金日成政權은 美國이 韓半島를 共產黨支配下에 統一하려는 目的을 妨害하는 最大의 장애물로 간주해 왔다.

共產黨支配下의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40餘年을 努力하고 있지만 北韓의 野望은 韓國戰爭에서 美國의 介入으로 좌절되었고 休戰協定이 1953년에 체결된 이후는 韓國과 防衛條約과 美軍駐留를 통해서 韓國의 安保를 保障하고 있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北韓은 南韓에 駐屯하는 美軍을 그들이 推求하는 共產化 統一의 最大의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美軍의 撤收없이는 南韓에 있어서의 革命政權 수립이나 共產化統一이 不可能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南韓에서의 美軍 撤收는 北韓外交政策中에 最優先課題로 策定되어 왔다.⁽³¹⁾

(30) Kim,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pp. 167 & 180.

(31) Young C.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February 1985, p. 9. See also, Ralph Cloug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Jae Kyu Park et al. (eds),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7), pp. 255-268.

1977년부터 1981년까지 駐韓美軍基地等を 철수하려고 한 카-터行政府의 政策에 의해서 北韓은 美軍撤收의 目的을 거의 達成할 뻔 했다.

그러나 美議會지도자들과 美國防省의 反對와 美情報機關들이 포착한 北韓의 軍事力增強實態로 인해 카-터의 撤軍계획은 79年 여름에 中斷되고 말았다.

1981년에 취임한 레이건大統領은 撤軍計劃을 폐기하고 말았다. 비록 부시大統領은 43,000名の 駐韓美軍中 7,000名을 감축하기로(1993년까지) 決定하였지만 韓國에 대한 美國의 安保公約은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시行政府의 對韓政策의 三大目的은 ①韓國의 安保는 經濟的 복지를 유지하고 ②南北對話를 권장하며 ③모든 韓國人이 受容할 수 있는 條件下의 韓國統一을 돕는 것이라고 宣言한 바 있다.⁽³²⁾

비록 北韓의 目標은 根本적으로 變하지 않았지만 策略面에 있어서는 '83年の 望谷事件 以後 對決에서부터 交渉과 接觸에 重點을 두게 되었다. 卽 '84年以後 北韓은 美國 및 南韓과 直接對話를 갖기를 強調하게 되었다. 勿論 美國과의 直接對話를 갖고 平和條約을 체결하자고 北韓은 1974年에 提議한 바 있지만 南韓을 排除한 이러한 對話에는 응할 수 없다고 美國이 거절함으로써 成事가 되지 못했다. '84年 1月에 北韓은 南韓하고 同等한 資格으로 參加하는 “三者會談”을 美國에 제의했으며 이 三者會談은 ①美國과 北韓이 平和條約교섭을 하고 ②南北韓은 不可侵宣言을 채택하고 이러한 平和條約과 不可侵宣言이 체결된 이후 南北韓은 統一問題를 다루기 위한 對話를 갖는다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다. 그리고 平和條約의 체결과 함께 美軍은 南韓에서 撤收하게 되어있다.⁽³³⁾

(32) Solomon, op. cit., p. 105.

(33) Young C. Kim, op. cit., p. 10. See also, Clough, op. cit., pp. 263 & 269-70.

그러나南韓이三者會談에同等한資格으로參加하게 된다고名目上으로는主張하지만北韓이實質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保證이 없다. 예를 들면美國과北韓間의平和條約 교섭에南韓의參與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美國과韓國은北韓의三者會談提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美國과北韓의外交官들이非公式 접촉을北京서 갖기始作한 것은1988年 가을부터였다. 이러한接觸을 갖을意向을美國은그해10월에國務省이發表한美國外交官들의行動指針에서“北韓官吏들과의中立地帶서實質적인討議를 가져도 좋다”⁽³⁴⁾고한文書에서엿볼수있다. 이와비슷한指針은1983年9月과87年3월에發表된적이있지만北韓의“테러”行爲로因해取消되고말았다. 새로운政策指針에 의하여北韓과의 무역은禁止되어 있지만人道的次元에서制限된一部商品の輸出은경우에따라許可할方針이라고表明했다.

美國이 이러한 새로운外交措置를取하게 된 것은南韓의對北韓接近을支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即美國은노태우대통령이北韓과和解할 것을提議하고南韓의友邦國들에게北韓에게對決과暴力政策을지양하고孤立에서 벗어나도록誘導할 것을支援해달라는要請을한點에留意하고노대통령의北方政策을支援하기 위해서北韓과의接觸을提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國의提案에 대한北韓의反應은 긍정적이었으며 '88年12월에美國과北韓은北京에서對話を 갖게 되었고 이 모임에서北韓側은金永南外交部長이 슬츠國務長官에게 보낸書信을 전달했다.⁽³⁵⁾ 第二次會合은 /89年 1月24일에 있었고

(34) "Review of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 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anuary 1989, p. 17. See also, Nayan Chanda, "Now the Carrot Again," Far Eastern Economic Review(cited hereafter FEER), November 10,

35) Robert Delfs, "Delicate Dialogue," FEER, February 9, 1989.

이 회담에서 美國은 金永南의 書信에 대한 答信을 전달했고 그후 13회의 회담을 가졌다.^(35a) 이러한 빈번한 接觸을 가졌지만 美國은 北韓과 公式的 惑은 非公式的 外交交渉을 하는 것은 回避했으며 주로 兩國間의 關心事에 대해서 意見을 교환하는데 局限했다. 同時에 美國은 北韓과의 關係改善에 必要한 事項에 대해서 北韓이 肯定的인 措置를 取하면 美國側에서도 相應하는 措置를 取할것을 시사했다. 美國이 제시한 5個事項은 ①南北對話의 進전, ②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 ③한국전쟁에서 戰死한 미군유해의 송환, ④군사신뢰조치(CBM), 및 北韓이 테러 行爲를 하지 않겠다는 保障⁽³⁶⁾등이다.

또한 美國은 北韓이 악랄한 反美선전을 中止할 것도 촉구했다. 이러한 分野의 進展이 와싱턴과 평양간의 관계개선에 필수불가결하다고 美國側은 보고있다.

1990年 5月28日에 北韓은 한국전쟁에서 行方不明이 된 5名의 美軍兵士의 유해를 송환했다. 이러한 措置는 北韓의 對美政策과 態도의 變化를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從前에 北韓은 美國에 北韓을 테러國家의 名單에서 除外시켜 주지 않는 限 美軍유해를 반환하기를 거부했었다.⁽³⁷⁾

물론 이러한 措置가 관계개선에 重要한 第一歩임에는 틀림없지만 美·北韓關係 正常化를 위해서는 다른 懸案問題들의 解決이 必要하다는 것을 美國은 北韓에 대해 分明히 밝혔다.

북한의 好意的 措置에 대한 相應하는 조치로 北韓學者가 와싱턴의 學術會議에 참가하는 것을 許容했다.

(35a) Solomon, op. cit., p. 107.

(36) Ibid. See also, Susumu Awanohara, "Comfort to the Enemy," FEER, June 21, 1990. pp. 22~23.

(37) Jae Hoon Shim, "Change of Hearts," FEER, May 24, 1990.

1990年 봄부터 北韓은 상호신뢰구축 문제에 관해서도 美國과 판문점의 休戰·軍事委員會(MAC)에서 論議하는데에 參與하게 되었고 美國측이 提示한 自己 조치들에 대해서 관심을 表示했다. 즉 ①비무장지대 內의 宣傳文들을 철거함으로써 긴장완화 하고 ②共同安全地帶에서의 호위병들의 무장을 없게하고 ③休戰協定 위반사항에 관한 共同 업저버 팀에 의한 調査制度의 채택 및 ④大規模 軍事演說에 대한 상호통고 및 관찰⁽³⁸⁾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0年 9月 北韓이 日本과 國交正常化를 할 것을 決定하고 또 91年5월에 UN 同時加入을 決定하게 되자 北韓이 美國과의 國交正常化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推測이 무성해졌다. 美國과의 관계정상화는 韓·蘇의 和解로 因해 생긴 外交損失을 만회하는데 必要하고 또한 駐韓美軍 병력의 감축과 핵무기 철수를 위해서도 必要하며 또한 北韓-美國關係의 改善이 없이는 日本과의 外交關係正常化가 相當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이 美國과의 外交關係를 正常化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重要한 懸案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안된다. 美國務省 次官補인 리차드 솔로몬(Richard Solomon)에 의하면 北韓이 南北對話와 핵사찰 問題에 관해서 긍정적이고 前向的인 措置를 취하게 되면 美國도 이에 相應하는 措置를 취할 것이라고 說明한 바 있다.

이 두가지 問題가 分明히 美國에게 가장 重要한 것이며 또한 北韓으로서는 양보를 하기가 가장 困難한 問題⁽³⁹⁾이다.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한 滿足스런 進展이 없이 北韓-美國關係에 획기적 變化를 기대할 수는 없다.

(38) Awanohara, op. cit., p.23.

(39) Ibid., p. 23.

北韓의 핵시설에 대한 國際査察問題는 北韓이 핵불확산조약에 1985년에 서명加入하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므로써 커다란 國際問題로 부각되고 있다. 美國情報 전문가들이 寧邊에 있는 핵연료재처리시설이 早速히 建設되고 있음을 確認하므로써 北韓의 핵무기개발계획에 관한 美國政策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있다. 現狀態로 進展되는 경우 北韓은 1990年代中盤까지 핵폭탄을 제조할 能力을 갖게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北韓의 테러 및 暴力行爲에 관한 皮문은 過去의 記錄에 비추어 미국은 北韓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防止하려는 決心이 確固하다. 또한 北韓의 핵무기개발은 韓半島의 세력균형을 南韓에 不利하게 變化시킬 것이며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核不擴散의 原則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美國은 北韓이 핵안전조약에 서명하고 국제사찰을 수용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美國側의 要求에 대해 미국이 南韓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하고 北韓에 대해 핵무기를 使用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하기 前에는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버티어 왔다.

이러한 方法을 통해서 北韓은 미국이 이문제를 討議하기 위해 交渉에 應하도록 하려는 作戰을 펴왔다. 그러나 美國은 北韓의 핵사찰문제와 美軍의 핵무기는 關聯이 없는 別個의 문제라고 보고있으며⁽⁴⁰⁾ 核不擴散條約에 서명한 北韓은 핵안전협정에 무조건 서명과 국제사찰을 받아들여야 할 義務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南韓에 저장되고 있는 핵무기에 관해서 미국은 肯定도 否定도 하지 않는 政策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핵문제에 관해서 北韓과의 交渉을 할 생각이었으며

(40) Solomon, loc. cit.,

北韓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限 北韓과의 對話를 格上시킬 意向이 없다. 또한 美國은 日本이 北韓과의 關係正常化에 앞서 北韓에 핵시설의 國際査察을 받아들이도록 主張하도록 壓力을 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사찰 문제가 日·北韓正常化회담의 커다란 障害物이 되고 있다.

'91年6月7日 北韓은 IAEA와 핵안전 협정에 서명할 意向을 通告했다. 또한 協定文案에 약간의 修正을 하기 위해 北韓의 전문가들을 7月 中旬에 召見하고 수정된 協定이 國際원자력기구총회의 인준을 받는대로 署名할 意向임을 6月13日의 IAEA理事會에서 北韓의 駐美大使가 說明하였으며 協定에 서명하는대로 국제사찰을 받아들일 것도 再確認한 바 있다.⁽⁴¹⁾ 同時에 陣大使는 美國이 남한에서 核武器를 撤去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美國의 핵무기철거가 핵안전협정 조인의 前提條件인지의 與否는 分明히 하지 않았다.

이러한 北韓의 決定에 대한 美國의 反應은 긍정적이었고 美國務省의 代辦人은 “北韓이 핵안전협정을 調印하고 성실히 준수한다면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고 聲明했다. 그러나 그녀는 로스앤젤스 타임스紙에 報道된 美國이 北韓의 핵무기 개발을 中斷시키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핵무기를 撤去할 것을 고려중이라는 것에 關한 論評은 회피하였다. 다만 미국은 핵무기가 어느 特定地域에 있고 없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않는 것을 政策의 原則으로 하고 있다⁽⁴²⁾”고 만 附言했다.

非核國家에 대한 核武器使用에 관해서는 朴正熙政府는 이미 기존의 政策을 명백히 한 바 있다. 即 美國은 國際核不擴散條約에 서명한 非核國家에 대해서는

(41) Yomiuri Shimbun, June 14, 1991. See also Daily Yomiuri, June 15, 1991.

(42) Daily Yomiuri, June 12, 1991.

그 國家가 美國과 美國의 同盟國에 對해서 核保有國과 協力하여 攻擊을 하지 않는 限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核戰力保有國인 中國이나 소련과 協力해서 美國이나 美國의 同盟國에게 공격해 오지 않는 限 美國은 핵무기를 使用하지 않을 것임을 明白히 했다.⁽⁴³⁾

北韓은 美國의 핵무기의 철거를 핵안전협정 조인의 前提條件으로 삼지는 않기로 決定한 것 같다. 北韓의 駐蘇大使 손성필에 의하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핵무기에 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핵철거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說明한 바 있다.⁽⁴⁴⁾ 그러나 미국측의 核武器不使用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은 되풀이했다. 그러나 北韓의 金永南外交部長은 와싱턴 포스트紙의 기자인 오버돌과의 會見에서 美國이 핵무기를 남한에서 철거하지 않거나 北韓에 대한 핵무기不使用에 관한 法的保證을 하지 않는 限 핵안전협정에 加入한 後에도 북한은 국제사찰을 받지 않을 것임을 強調함으로써 北韓側의 眞意를 노출시키고 있다.⁽⁴⁵⁾ 反面 金日成은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받을 의향을 갖고 있음을 中國外相에게 傳達한 것으로 報道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立場이 아직 多少 流動的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은 北韓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滿足할 수 없다는 立場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협정조인후에도 사찰조항을 기피하는 방법으로 핵무기개발계획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防 副次官인 폴 윌포워츠는 北韓이 핵시설을 全部 파기할 것을 願하고 있으며 그 理由는 “이러한 시설이 平和的 目的을 위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說明했다. 뿐

(43) Solomon, loc. cit.

(44) Hankuk Ilbo, June 18, 1991.

(45) Washington Post, June 7, 1991.

만 아니라 월포위츠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査察을 願할 뿐 아니라 원자핵무기를 生産하게 될 어떤 施設도 파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明白히 했다.⁽⁴⁶⁾

北韓과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해서는 南北韓關係의 相當한 改善이 必要하다고 본다. 南北韓이 계속해서 對決하고 있는 限 美國과 北韓의 和解나 美軍의 南韓으로부터 完全 撤收는 있을 수 없다. 이 南北韓관계에 관해서도 北韓은 최근 兩韓의 平和共存을 위한 重要한 움직임을 보였다. 卽 南北總理會談과 南北韓의 U.N加入 受容등을 들 수 있다. 日本과의 全面修交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러한 政策決定이 南北韓이 존재하는 韓半島의 政治的 現實을 받아들이는 方向으로 變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北韓은 1957년에 소련이 提案한 南北韓 UN同時加入을 받아들인後 처음으로 南北韓이 共存하고 있는 事實을 認定한 셈이다. 이러한 北韓의 政策變化는 소련이 南韓의 單獨加入을 支持하게 되고 中國도 南韓의 加入申請에 대해 拒否權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등 국제 정세가 北韓에 대해 不利하게 變한데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一連의 政策變化를 通해 北韓은 사실상 “交叉承認”과 “UN同時加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決定은 南韓과의 和解에 필요한 初步관계에 不過하며 南北韓의 和解를 위해서는 南北間의 基本條約 체결 및 南北間의 政治·經濟 文化 交流에 대한 制度的裝置가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變化는 北韓의 外交政策의 重大한 變化를 알리고 있다는 點에서 過小評價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46) Daily Yomiuri, June 7, 1991.

V. 結 論

上記 分析을 土臺로 몇가지 結論을 算出해 보기로 한다.

첫째, 최근에 일어난 北韓의 日本 및 美國에 대한 政策의 變化는 南韓의 “北方政策”의 성공적인 展開로 인해 입은 外交的 損失을 挽回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중국과도 경제관계를 확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 및 美國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해졌고 그런 體面유지 조치가 없이는 外交分野의 北韓의 失敗를 補完할 方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北韓의 對日政策의 變化는 日本으로부터 大規模의 경제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것과 聯關性이 크다. 北韓의 낙후된 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日本의 經濟援助가 필요하며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북한은 核査察, U.N同時加入 등에 관해서 양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은 北韓과 國交正常化를 서두를 필요성이 없으므로 日本은 北韓과의 國交正常化 교섭에서 北韓측의 양보를 받아내도록 하고 있다.

北韓이 IAEA의 사찰을 받고 UN에 同時加入할 것을 決定함으로 인해서, 北韓과 日本의 關係正常化의 展望은 밝아졌다고 하겠다.⁽⁴⁷⁾ 만약 北韓이 이러한 決定을 早速하고 성실히 수행한다면 北韓·日本 正常化會談에 急進展이 있을 수 있다.

(47) Yomiuri Shimbun, June 15, 1991.

물론 “이은혜”사건이 하나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문제는 正常化會談에 관한 한 副次的인 問題라 볼 수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장해물”은 南北韓關係의 惡化라고 볼 수 있다. 만약 南北韓關係가 악화되면 日·北韓 正常化會談은 相當히 지연되거나 完全히 失敗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北韓이 發表한 U.N.加入 및 核施設의 국제사찰 受容은 北韓과 美國과의 關係改善에 有益한 效果를 미칠 것이다. 美國은 北韓의 새로운 政策決定을 환영하였으며 北韓이 約束한 事項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대응할 意向을 갖고 있다. 그러나 核安全協定의 서명만으로서 美國과 北韓간의 關係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美·北韓國交正常化를 위해서는 다른 현안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며, 南北對話의 진전, 태리行爲의 포기, 第三世界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중지등에 관한 合意가 必要하다. 여하튼 北韓이 U.N에 同時加入하고 국제사찰을 받아들일 때에는 미국은 北韓과의 經濟 및 文化交流에 대한 規制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과 北韓의 完全한 國交正常化를 위해서 南北韓間의 和解가 必要하다. 現在와 같이 南北이 對決하는 상황에서 美國은 北韓과 外交關係를 正常化해야 할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 美國과 南韓과의 經濟·政治 및 安保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北韓이 南韓과의 關係에 相當한 改善없이 美國과의 關係正常化를 기대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인 態度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바꿔서 말하자면 北韓과 美國關係에 急進展은 北韓이 韓半島의 政治的 現實을 받아들이고 平和的 統一이 可能할 때까지 南韓과 平和共存할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可能하다고 본다.

5. 北韓의 對中蘇關係

李 採 畛(클래어몬트·맥키나大)

目 次

I. 序 論	141
II. 中·蘇和解過程.....	142
III. 外交的 딜렘마	146
IV. 經濟 및 戰略關係	152
V. 結 論	157

I. 序 論

현재 北韓은 여러가지 重要한 이유 때문에 혼돈과 딜레마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冷戰의 종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모든 맑스-레닌주의 국가들이 體制維持와 정책수정이라는 미증유의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은 東歐에서의 통제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분열과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고르바초프 大統領의 야망적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 정책은 성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페르샤만전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소련은 이미 세계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超強國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友邦과 被保護國家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同時에 북한의 또 하나의 동맹국인 中國도 天安門사건 以後에 정치적 안정의 형태를 유지하고 鄧小平의 四個現代化政策을 실현하려고 투쟁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한편 中國과 蘇聯은 兩國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된 不信과 對立의 상태를 극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韓半島와 같은 지역문제들에 관한 그들의 政策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中蘇和解는 북한으로 하여금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두동맹국가들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남한이 소련과 중국을 향하여 시행하고 있는 北方外交에 대항하는데 實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外交, 經濟 및 전략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소련과의 關係를 再調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II. 中 · 蘇和解過程

지난 1989년 5월 北京에서 있었던 고르바초프-鄧小平 頂上會談은 전반적인 중소관계를 正常化하는데 획기적인 계기였었다. 공동성명은 평화공존 五個原則 (주권과 영토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국내문제 상호불간섭, 同等과 互憲, 平和 共存)을 범세계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국간의 관계를 발전 시키겠다고 선언했었다. 양측은 모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피차간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具體적으로 두나라는 국경선에 배치된 서로의 군사력을 최소한도로 감소하고 국경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經濟, 무역, 과학, 기술 및 文化方面에서의 협력을 계획에 따라 증진시키기로 합의했었다. 그들은 平和와 發展이 현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重要한 과제라고 지적했으며 군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는데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비록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 관한 具體적인 言及은 회피했지만 중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사이의 대화를 서로가 희망한것은 分명한 일이다.

1980年代末에가서 중국과 소련이 상호의 관계를 正常化하기로 決定한데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鄧小平과 고르바초프는 이념적인 주장이나 혁명의 열정으로 그들의 對內外政策을 決定하지 않고 改革政策을 實行하는데 實用的이며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적 현대화보다는 정치적개혁에 더 큰 重點을 둔데 반하여 鄧은 정치적 體制改革보다는 경제적개혁을 강조했었다. 두지도자들은 修正主義나 教條主義등 이념적문제에 관한 不尾의 논쟁을 중지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

다. 둘째로 이들은 끝없는 軍備競爭이나 직접적인 군사대결이 극히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소련은 INF, START, CFE, CSCE 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과 군비축소협정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협정과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인 군비축소협정들을 모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中蘇國境地域에서의 상호군사철수 방안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셋째로,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과 소련은 세계문제에 있어서 평화와 발전의 전통적인 重要性을 수용하고 평화공존과 경제적 相互依存의 경향에 따라 兩國關係를 再定立하게되었다. 넷째로 중소양국은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한반도와 같은 지역적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경쟁관계나 견해 차이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한반도에 관한한 중소양국은 북한을 포용하려고 지나치게 경쟁한다던지 한국의 北方外交에 대한 그들의 상이한 對應方案을 서로 비판한다던지 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根本적으로 중국과 소련은 1980年代末에와서는 “두개의 한국”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한반도는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中蘇兩國은 남북한에 대한 그들의 상이한 정책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기 위하여 高位級의 정책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예컨대 1990년 9월1일 할얼빈에서 세바르드나제外相과 錢其琛外長이 만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은 中東위기, 독일통일, 아프카니스탄 및 캄보디아 以外에도 한반도의 정세에 관한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었다. 그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東北亞에서 진정한 安全과 安定을 성취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며 남북간의 대화가 한반도긴

장완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틀림없이 세바르드나제는 머지않아 소련이 한국과 外交關係를 수립할 것이라는 것과 이 決定을 북한에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측에 통고했을 것이다. 아마도 두 外相은 남북한의 UN동시가입문제에 관하여도 상의했을 것이다. 그들 말에 소련과 한국이 외교정상화의 합의를 發表했을 때 中國은 아무런 懷疑的 反應을 보이지 않았었고 북한의 강경한 항의를 지지하지도 않았었다.

페르샤灣戰爭에서 美國이 결정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중국과 소련은 국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美國의 實力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소련으로서는 피보호국인 이라크가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대항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었거니와 중국은 天安門사태 以後에 美國이 취한 경제적제재조치에 관하여 심각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따라서 1991년 5월 Moscow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와 江澤民 총서기는 상호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공동성명에서 그들은 中蘇의 우호친선관계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술, 무역,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友好, 睦隣, 互利合作關係”를 더욱 발전해야한다고 약속했었다. 특히 주시해야할 것은 1989년5월의 공동성명에서는 군사적협력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1991년5월의 공동성명에서는 兩國의 군대사이에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접촉과 교환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양측은 亞太地域의 安全問題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엄존하고 있

다는 것을 表示하였다. 그들은 同地域을 “開放, 合作과 繁榮”의 지구로 발전시키는데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었다. 1989년과는 달리 1991년에는 중국과 소련이 基本的으로 한반도에 관한 조항을 공동성명에 表示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東北亞의 安全에 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인한 다음 한반도의 평화적통일과 南北韓사이의 대화를 지지했으며 “남북한 쌍방이 한반도의 정세나 평화적 통일에 저해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이 마지막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유하거나 경고하는 성명일 것이다. 그리고 江澤民의 소련방문이 끝난지 8일만에 북한이 UN동시가임을 수락하게된 것도 中蘇頂上會談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Ⅲ. 外交的 딜레마

비록 북한은 중소양국과 거의 동일한 軍事同盟과 오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련과 중국은 최근에와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외교적 각축전에 상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1986년 7월 고르바초프가 Vladivostok선언을 발표한 이후로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련의 성명과 행동을 취해 왔었다. 中國의 지도자들과는 판이하게 고르바초프는 1990년6월 San Francisco에서 盧泰愚大統領과 만났으며 그후 4개월만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는 북한의 강력하고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盧大統領을 Moscow로 초청했으며 스스로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의 과감하고 창의성있는 외교형태는 아직도 북한의 입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외교형태와는 확연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소에 대한 등거리외교노선을 지양하고 외교문제에 관한한 결정적인 친중편향을 表示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金泳三氏가 1990년3월 Moscow를 방문했을 때에 고르바초프는 이미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서의 意見을 조정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국으로부터 기대했던 경제원조액수를 타결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金泳三氏가 소련측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소외교정상화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東北亞의 평화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북한은 金泳三氏를 정치적변절자나 정치적매춘부라고 맹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소련이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

립하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두개의 국가가 存在한다는 것을 승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分斷을 고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와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한국은 긴밀한 막후 교섭을 통하여 San Francisco에서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1990년9월초에 평양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는 김영남외교부장을 만나 한소외교정상화결정을 통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바르드나제는 1991년부터는 소련과 북한사이의 무역을 물물교환형식으로부터 硬貨결제방식으로 변경할 것임을 동시에 설명했을 것이다. 소련의 결정에 크게 분노한 金日成은 세바르드나제와 만나길 거절하게 되었다. 더우기 북한은 6개항으로된 비망록을 소련에 보내어 韓蘇外交頂上化의 부당성을 강력히 성토했으며 그 내용을 이례적으로 민주조선(1990년9월19일)에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의 입장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일축한 다음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이 23억불 때문에 동맹국가의 이익을 매도한 외교적배신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물론 소련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고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은 분명하다. 더우기 소련으로서는 두개의 한국이 存在한다는 엄연한 現實을 시인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利益의 균형”-모든 관련으로써 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도 균형있는 역할을 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며 또한 日本의 對蘇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1990년9월 김영남 외교부장과 만난 세바르드나제는 소련은 주권국가로서 어느누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外交問題를 추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련은 북한이 일본 및 미국과 외교교섭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소외교관계를 비

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의 對韓政策을 계속 비난하여 고르바초프가 제주도를 방문한 것도 “몰락하는 집안의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었고 “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된 공모결탁관계는 오래갈 수 없으며 조만간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로동신문 1991년4월27일)

소련, 몽고와 東歐諸國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려고 열성을 올리고 있지만 유독 中國만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려는 한국의 집요한 노력을 등한시하고 북한과의 연대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첫째로 중국은 東歐社會主義 국가들이 멸망하고 소련의 混迷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소련과 東歐에서 불어오고 있는 “부르조아 自由主義”와 “복수정당 多元主義”의 바람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운명공동체와 같은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1989년11월 金日成과 鄧小平은 北京에서 비밀회담을 가지고 공산당의 우월성과 社會主義路線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었다. 1990년3월 金日成과 江澤民은 평양에서 만나 국제공산주의가 당면한 어려움의 根源은 고르바초프의 착오에 있다는 것에 합의했으며 兩國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對內外정책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었다.

둘째로 鄧小平으로서는 天安門사태이후에 美國, 日本, 西歐諸國들이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경제적제재조치를 취했으나 북한은 중국정부를 옹호했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鄧은 金日成이야말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동맹국을 도와주려는 眞正한 친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와 같이 쉽사리 북한을 배반할 수 없게 되어있다.

셋째로 中國은 소련과 달리 한국전쟁에 전면적으로 參戰하여 북한을 멸망으로

부터 구출해주었고 또 많은 人命과 재산의 피해를 당했었다. 이와같은 역사의 유산은 중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전투적인 우호관계를 맺게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다면 한국전쟁이 再發할 위험이 있을것으로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

넷째로 中國은 소련과는 달리 국내의 경제나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 공포나 절망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치불안, 경제부진, 종족갈등과 같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天安門사태이후에 감수했던 경제적 外壓도 거의 해결 했으며 한국과는 外交關係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의원칙하에서 상호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한국과 반드시 외교관계를 수립해야만될 긴급한 이유를 중국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차라리 북한의 위축되고 있는 국제적위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0年 및 1991年동안 中國은 북한과 대를 이어서 전통적인 우의와 혁명적인 신뢰를 계속하여 지켜나갈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오고 있다. 中國은 金日成주석, 延亨默총리, 李鍾玉부주석, 金永南외교부장등 要人들을 초청했으며 중국공산당정치국委員들 (江澤民, 宋平, 秦基偉, 李銑映등)을 평양으로 보냈었다. 中國은 북한에 관계되는 모든기념일들을 성대하게 환영하였고 북한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찬양했었다. 북한 정권 수립 42주년을 맞아 人民日報(1990年9월10일)는 사실을 통하여 북한의 自主路線과 自力更生정책을 높이평가하고 중국과 북한을 함께 社會主義國家로서 “強大的 生命力”을 가졌으며 불가분의 “戰鬪友誼”를 世世代代로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사설은 金日成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방안을 지지하였다.

1991年5월에 평양을 방문한 李鵬총리도 同一한 뜻을 金日成과 延亨默에게 직

접 다짐했었다. 그러나 1990年3월에 방북하여 전투적인 발언을 했었던 江澤民과는 달리 李鵬은 비교적 온화한 발언을 했었다. 그는 美軍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해야 된다는 상투적인 用語도 공식석상에서는 삼가했으며 三者會談의 필요성을 지적하지도 않았었다. 특히 그는 최근에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李鵬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外交的 고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金日成으로 하여금 남북한의 UN동시가입방안을 수락하도록 아마도 설득했을 것이다. 설득의 근거로서 李鵬이 사용했을 듯한 論點을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1) 페르사만전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UN의 중요성이 앞으로 증대할 것이며 특히 한반도와 같은 地域問題解決에 깊이 개입될 것임
- (2) UN의 절대다수회원국들이 보편성의 원칙을 찬성하므로 한국의 단독가입에도 찬성하고 있음
- (3) 大國主義의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UN安保理에서 거부권행사를 일반적으로 사양하고 있으며 특히 절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찬성하는 한국단독가입신청에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움
- (4) 만일 한국만이 UN에 가입하는 것은 북한외교의 失態를 입증하는 것이며 UN에서 한국문제를 토의 결정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 (5) 만일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한다면 북한 정부의 합법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될 것이며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 (6) 북한이 加入하면 UN이나 그 부속기구들로부터 재정, 과학, 기술등 분야에

결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7)독일과 예멘의 경우와 같이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는 것이 한반도통일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

여하간 李鵬총리가 北京으로 돌아온 다음 中國外交部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李鵬이 평양에 있을 동안 남북한 쌍방이 UN에 加入하는 문제를 북한지도자들과 상의했으며 李鵬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하여 이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希望을 表示했다고 시인 했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첫째로 북한이 완강히 거절해왔던 同時加入問題가 양국간에 심각하게 검토되었으며 둘째로 중국은 이문제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것 임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결코 거부권까지 행사하여 문제해결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뜻을 표시 했었다. 그리고 이 발표는 북한이 유엔동시가입방안을 어느정도 수락할 意向임을 암시했었다.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게되면 中國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즉시 수립할지는 분명하지 못하다. 中國은 북한이 교차승인 방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北京會談에서 많은 진전을 보게된다면 중국으로서도 결국 교차승인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미관계가 앞으로 好轉된다면 兩國이 교차승인문제를 두고 흥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鄧小平이나 金日成이 사망하게되면 中國도 對韓外交政策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IV. 經濟 및 戰略關係

북한이 중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외교적인 딜레마를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경제의 침체성일 것이다. 중소양국은 북한이 무거운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반면 한국을 유일한 경제적인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北韓은 그들의 自立經濟體制를 효율적으로 개혁하지도 못하고 개방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을 가졌겠지만 북한의 기술을 현대화하고 경영관리를 合理化하는데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과도한 군비지출과 정치선전활동은 북한의 제한된 자금을 낭비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第3次 7個年計劃(1987-1993)은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으며 수출은 저하되고 외채는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불가피하게 소련과 중국에 경제적으로 依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自體의 경제상황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북한, 베트남, 쿠바와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에 經濟援助를 더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우기 소련은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나 발표문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정책을 맹렬히 비판도 하고 있다. 一部の 소련학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소련과 맺은 무역협정을 45%밖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북한의 1人當국민소득도 4百弗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들은 최근 북한의 공업과 농업의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과 소련은 1990년 11월2일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物物交換方式으로부터 硬貨지불방식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原油를 수입하는 문제도 특히 어렵게 되었다.

반면으로 소련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커다란 希望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소련은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대가”로서 이미 30억불의 차관을 받았으며 양국간의 무역도 증대하여 1995년에는 무역액수가 100억불내지 150억불까지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盧泰愚-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은 한국의 경제가 북한의 경제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여 앞으로도 希望的이라고 평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외교적인 배신과 경제적인 강경책에 분노한 북한으로서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인 中國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90년 9월 세바르드나제가 평양을 방문한다음 金日成은 갑자기 深陽으로 비밀리에 가서 鄧小平 및 江澤民과 회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日成은 다른 문제들보다도 중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했고 원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中國은 제한된 경제적조건이지만 아마도 金日成의 요청에 호의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11월27일 吳學謙副總理와 金達玄부총리는 北京에서 중국의 “經濟援助協定”에 조인했었다. 이 조인식에 參席한 李鵬, 延亨默 兩總理는 양국간의 “傳統友誼”를 또한번 다짐했었다. 더욱이 연형묵일행은 深川에까지 가서 江澤民은 경제特區의 중요성과 발전상을 설명하고 경제특구의 성공은 中國이 한편으로는 對外開放政策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할 수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江澤民은 북한도 사회주의 노선이 와해될까 염려되어 對外開放정책을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한 것이

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증가하는 손실과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貿易赤字를 담당 할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지불의무를 연기해 주거나 그 일부를 대폭적으로 삭감해주고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중국 안에서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고민하고 있으며 북한이 하루 빨리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진정한 自立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감수하고 있는 손실을 한국과의 경제관계의 이익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天安門사태이후에도 한국은 열성적으로 경제협력을 지속했으며 저조된 관광사업도 도와 주었고 北京의 아시안게임도 원조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종료하자 한국과 중국은 貿易事務所交換에 합의하게 되었다. 中國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무역사무소가 民間機關이라는 점을 엄격히 강조하여 오고 있지만 이 事務所가 정부차원의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워진다는지 혹은 소련과 동구제국들이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장하여 그들의 立地條件을 잠식하게 된다면 무역사무소의 성격을 格上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당면한 外交와 經濟的인 어려움 以外에도 항시 安全保障問題에 집착하여 美國이 원자무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공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전쟁발발 4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로동신문(1990년6월25일)의 사설은 안보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요약해서 평화와 긴장완화에 관하여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한반도에는 원자전쟁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위협의 “증거”로서 그들은 팀스프리트 軍事演習을 들고 있으며 이 연습

이야말로 원자무기로 북한을 침입하기위한 준비작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야 美國만이 초강대국으로 남아있고 우월한 군사장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침입의 의사가 없다면 연습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抑止力으로 북한은 그동안 군비확장에 주력을 기울여왔으며 중소와의 相互防衛協定을 중시해왔었다. 소련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양국간의 방위협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도 않고 소련과의 군사협력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소련군부와 연결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며 소련만이 현대적인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은 물론 북한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金日成以後에 있을 수도 있는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軍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고르바초프가 제안하고 있는 아시아 安保會議에는 회의적이며 歐洲安保協力會議(CSCE)를 亞太地域에 적용하려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첫째로 歐洲와 아시아와는 상황이 판이하며, 둘째로 CSCE가 바르샤바조약體制의 붕괴를 초래했고, 셋째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사람들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가 아닌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金日成은 金丸信과의 회담에서 아시아사람들이 협력하여 아시아문제를 해결할 主役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었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보아 북한은 중국과의 군사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실감하고 있는 듯하다.

中國도 북한과의 방위협정을 존중해오고 있으며 군사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과 제안을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배신당하고 고립된다

고 생각함에 따라 중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방위의무를 재확인하여 북한의 불안감을 감소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0년 8월 평양을 방문한 秦基偉國防部長은 金日成, 吳振宇등과 회담하여 피로 결속된 戰友關係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同年 10월에는 中國人民志願軍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4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과 중국은 대대적인 행사를 치루었다. 평양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中國代表團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중에는 李鐵映정 치국원 및 국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前中國人民志願團, 張震國防大學校長을 단장으로 한 前中國人民志願代表團, 耀先北京軍區空軍司令員을 단장으로 한 前中國人民志願軍英模代表團, 胡貴友 少將을 단장으로 한 前中國人民志願軍烈屬代表團, 黃璜寧夏回族自治區黨書記를 단장으로 한 中國人民友好代表團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 중요하게도 人民日報(1990년10월25일)의 사설은 40년전에 미국이 한국전쟁을 시작하여 침입함으로써 “조선인민들이 분기하여 反抗했다”고 주장하고 “鮮血凝成的偉大友誼”를 강조 했었다. 이것은 최근 中國이 한국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하는 문제를 애매하게 취급해 오고 있는 경향에 반대되는 것으로 中國이 북한의 歷史觀을 지지한 셈이 되었다.

V. 結 論

북한이 중소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실시하면서 兩同盟國사이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간 듯하다. 최근 수년동안 중소양국은 점차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증대했으므로 中蘇關係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지역적인 정도로 전략하고 말았다. 중소양국은 북한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이해타산에서 북한보다는 한국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북한과 소련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인 疎遠한 關係는 참으로 특기할만하다. 북한은 소련이 國際社會主義의 이익을 배반하고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超強大國의 위치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으며 소련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몰락과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혹시 소련에서 보수세력, 군부, KGB등이 연합하여 고르바초프정권을 代替하더라도 소련이 과거에 가졌던 힘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북한의 학자들은 予斷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과의 軍事同盟關係를 철폐한다던지 양국 관계를 완전히 訣別하는 것은 삼가하고 있다.

소련과 달리 中國은 외교, 전략부분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정책으로 부터 결정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金日成의 주체사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依存度를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경론자들이 鄧小平以後에도 實權을 유지하고 한국에서오는 외교적공세와 경제적 유혹에 감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만일 中國이 多黨制度,

自由民主主義 혹은 市場經濟體制의 壓力에 완전히 승복하게 된다면 이것은 金日成의 지배에도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自國의 이익을 추구하는 方向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기본적인 이익에 배반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中蘇兩國과의 전반적인 관계가 不安定할 것을 예상하고 패르샤만전쟁 이후에 대두되는 새로운 世界秩序의 등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 어려운 정책적 선택을 해야할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가능한 政策의 선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중국은 연형묵총리를 深川경제특구에 초청한 바와 같이 북한이 개혁이나 對外開放에 관한한 최소한도 中國式 방식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지만 소련은 金日成下에 있는 북한이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극히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소련의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에서 개혁을 시도하면 불가피하게 金日成體制가 무너질 것이므로 개혁의 가능성은 全無할 뿐아니라 金日成을 위시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너무도 편안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마저 느끼지도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基本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江澤民과 고르바초프의 공동성명이 밝혔듯이 중소양국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관계개선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행동은 삼가해줄 것을 경고 했었다. 중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베트남식인 무력통일방안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또하나의 전쟁은 한반도 뿐만아니라 東北亞全域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양국이 한반도에서 獨逸式인 평화적통일과정

을 적극적으로 반대할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平和的으로 共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南方外交”로서 현재 日本과 美國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中國은 북한이 日本과 외교 및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정부차원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해주고 있다. 소련은 북한의 南方外交의 眞意를 다소 의심하는 듯하지만 그것이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UN加入이나 핵시설사찰문제등에 관하여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은 南方外交를 심각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전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와같은 해석이 정확하다면 앞으로 북한이 交叉承認問題에 대한 태도도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하간 북한이 앞으로 어떤 政策的인 선택을 決定하더라도 혼돈상태를 극복하기는 심히 고심스러운 도전이 될 것이다.

6. 北韓의 對南戰略

金 一 平(코네티컷대)

目 次

I. 序 論	163
II. 統一戰線 戰術의 3段階	166
III. 1980年代의 統一戰線戰術	174
IV. 北韓의 UN加入과 統一戰線戰術	177
V. 結 論	180

I. 序 論

北韓이 統一戰線 戰術을 세우는 主要한 目的은 民族統一의 一環으로서 北韓이 願하는 南北統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統一戰線을 理解하고 分析하려면 北韓의 統一政策과 分離시켜서 研究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論文은 1970年代에 展開되었던 南北對話와 南北協商을 統一戰線政策의 一環으로 간주하고, 特히 1960年代의 革命戰略이나 武力統一을 背景으로 하여 본다면 統一戰線政策의 變化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今年 5월에 北韓이 宣稱한 바와 같이 北韓이 國際聯合(U.N.)에 加入하게 되었을 때 北韓의 統一戰線의 方向은 變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하여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統一戰線의 概念은 무엇이며 統一戰線 政策이 어떻게 展開되었는지 歷史的인 考察이 必要한 것이다. 統一戰線의 개념은 소련의 볼셰비키 革命이전부터 레닌이 쓴 革命論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자(팜플렛)에서 그 起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統一戰線의 개념이 理論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政策으로 채택된 것은 1921年 7月12일에 있었던 第三次 國際共產黨 大會에서 「戰術에 관한 테제」를 채택함으로써 實踐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코민테른은 세가지 종류의 統一戰線 戰術을 解明하였는데 첫째는 非共產 者들이 組織한 勞動者 團體와 統一戰線을 形成하는 類型, 둘째, 레닌이 第2次 國際共產主義黨 大會에서 (1920年) 說明한 바 있는 植民地와 半植民地에서의 大民族聯合을 形成하는 類型, 셋째, 레닌이 벌써 지적한 바 있고, 또 코민테른의 總書記 조지 디미트로브가 第7次 國際共產黨大會(1935年)에서 간주한 바 있는 反파쇼 “民衆聯合

戰術”의 유형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統一戰線의 개념이 解放以後 北韓에서 선택하고 政策으로 시행하였을 때 두가지 側面을 볼 수 있다. 그것을 兩面戰術이라고도 한다. 한面은 기존 戰術이나 體制를 軍事的으로 전복시키고 革命政府로 代置시키는 것이고, 또 한面은 民族統一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階級을 초월하여 廣範圍의한 群衆을 朝鮮로동당 주위에다 결속시키고 그들의 支持를 얻는 것이다.

歴史的으로 統一戰線政策이 가장 成功的이었다고 評價를 받고있는 例는 1937年부터 1945年까지 形成되었던 毛澤東의 第2次 國共合作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30年代에 中國大陸을 侵攻하기 始作한 日本帝國主義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中共指導者들은 國內의 敵이었던 蔣介石의 國民黨과 聯合하는 길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에서는 中國의 統一戰線모델을 모방하고 韓半島를 侵攻한 外國의 敵은 美國이 日本을 代置하였으며, 國內의 敵은 南韓의 反動政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統一戰線의 最終目標라고 할 수 있는 祖國統一을 위하여 南쪽에다 親北韓 세력을 부식하고 親北政權이 樹立되어 北韓과 統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의 戰略인 것이다.

北韓의 金日成은 1945년 10월 13일 各道黨 책임 일꾼들 앞에서 한 「새 조선 建設과 民族統一 戰線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統一戰線에 대한 意味와 定義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의 통일전선의 경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있다. 그중 中國의 모델에 대한 연설은 다음과 같다.

“民族統一戰線의 좋은 실례를 우리는 中國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日本 제국주의가 만주를 강점하고 중국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되자 中國

共產黨은 國民黨과 共產黨이 合作하고 민족의 모든 力量을 集結하여 抗日 救國 투쟁에 나설 것을 提議하였습니다. 共產黨의 이 提議는 國民黨 反動派의 完固한 태도로 인하여 오래동안 接수되지 않았습니다. ... 것처럼 完固하던 國民黨 反動派도 民族統一과 抗日救國에 대한 中國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에 못이겨 부득이 公산당의 提議에 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¹⁾

(1) Kim Il Sung, "On the Strengthening of New Korea and the National United Front," in Kim Il Sung's Selected Works, 5 vols. (Pyongyang :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5), 1 : 2-3

Ⅱ. 統一戰線 戰術의 3段階

北韓의 統一戰線 戰略을 分析할 때 대략 3段階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단계는 8.15 解放 이후부터 韓國이 끝나고 休戰協定이 締結된 1953年7月까지로 보는 것이다. 北韓의 김일성은 1945年 10月13日 第1次的으로 共產黨 組織責들에게 한 연설에서 統一戰線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연설은 「김일성선집」제1권의 서두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祖國統一에 있어서 統一戰線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김일성은 : “민주주의 人民共和國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勞動 階級과 農民 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愛國的 민주력량이 참가하는 統一戰線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만 균중을 우리편에 쟁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²⁾

또한 김일성은 現段階에 있어서 革命은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이라고 定義를 내리고 이와같은 革命課業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을 창건하는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그와같이 崇高한 課業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公산당은 조선의 독립과 조국의 통일을 부르짖는 사람은 統一戰線으로 모여서 合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을 것이다.

김일성이 統一戰線에 대한 연설을 한 9개월 후인 1946年7月22日에는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이 組織되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산하에는 民主團體와 모든

(2) Ibid., 1 : 4.

大衆集團이 흡수되었는데 이와같은 조직은 그 當時 南韓에서 U.N.감시하에 단독선거를 1948年5月 실시하지 못하게끔 와해공작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48年 6月에는 南北政黨 및 社會團體代表會議를 開催하고 南쪽에서 單獨政府樹立을 反對하는 金九와 金奎植과 같은 지도자도 參席케 하였으므로 成功리에 끝났다고 評價한 바 있다.

北韓은 公산당원이 아닌 人事들과 또 民主政黨의 各계各층과 聯合戰術을 結成하여 5.10 選舉를 反對하고 單獨政府 樹立을 拒否하고자 하였으나 南쪽에서 國會議員 선거를 U.N.감시하에 무난히 치르고 또 大韓民國 政府를 수립하고, 李承晚博士를 初代大統領으로 추대하였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면 北韓이 시도하였던 統一戰線 戰略과 戰術은 失敗하였는지 한번 檢討하여 볼 必要가 있다.

1949年7月에는 祖國民主主義統一戰線(祖民統)이 조직되었는데 南北의 統一을 희망하는 정치 지도자와 사회단체 지도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社民統은 새로운 統一政策을 發表하고 南北으로부터 外國軍隊를 撤收시킨 이후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한다는 것이 그의 目的이었다. 組民統 中央會는 1950年 6月7日에 聲明을 발표하고 南北에서 總選을 實施하고 解放5周年을 記念하여 最高立法會議를 召集하자는 것이 그의 골자였다. 그러나 南쪽의 지도자는 社民統 中央會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北韓의 平和攻勢은 끝나고 6.25動亂으로써 武力統一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北韓의 統一戰線의 第2段階는 韓國動亂이 끝나고 休戰協定이 체결된 1953年7月부터 1970年代 중반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年代 후반부터 1960年代에 김일성은 “反美救國統一戰線”을 形成하고 駐韓美軍의 撤收를 강력히 主張하며 獨立과 統一政府의 樹立을 주장하였다. 1961年

9月11日에 開催되었던 北韓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中央委員會의 활동보고 중에서 “反美救國統一戰線을 結成하는데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지도하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同盟強化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은 統一戰線의 정치적 사회적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³⁾

南韓에서 張勉總理를 首班으로하는 張勉政權이 무너지고 5月16日 軍事革命이 일어났을 때 北韓은 統一戰線을 포기하다시피하고 南쪽의 軍事政權을 타도하고 朴正熙 大統領을 암살하기 위하여 유격대를 南派하였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또한 反美감정을 高潮시키면서 北韓은 美國의 스파이함정 “푸에브로”를 나포하고 또 美空軍의 偵察機 EC21을 사격하여 격추시킨 바도 있었다. 이때 김일성은

“남조선 人民은 우리 동포를 학살하고 약탈하고 모욕하는 美軍의 강도행위를 철저히 규탄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안되며 침략자들이 마음대로 行動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美침략군에 대한 모든 협력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며 그들에게 쌀 한톨이나 한모금의 물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분노에 불타는 人民의 항쟁 앞에서 침략자를 공포에 떨게하고 그들이 우리 땅에 더 있을 수 없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美침략군을 추방하고 南朝鮮과 美國사이에 체결된 모든 종속적이고 軍事的이고 經濟的 조약을 파기시키고, 미국의 植民地的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⁴⁾라고 말하였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은 南北 對決의 자세를 약화시키고 統一戰線의 개념

(3) Ibid., 3 : 150

(4) Ibid., 3 : 143

으로 돌아와서 南北對話의 길을 선택하였다. 1971年8月6日 캄보디아(캄푸치아)의 노로돔 씨하누코왕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南朝鮮의 民主共和黨을 포함한 모든 政黨과 사회단체와 모든 인사들과 接觸할 用意가 있습니다. 만약 南朝鮮의 執權者들이 南北의 接觸을 거부하고 平和統一을 말로 떠들어대면 人民의 분노와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南朝鮮의 執權者들은 공개적으로 통일문제는 1973년 이후 또는 1970년대 후반 그들의 힘을 키운 이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같이 말하는 동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를 남조선에 충분히 들여오고 共產主義를 제압하여 통일하려는 야심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⁵⁾

北韓의 지도자는 南韓의 民主共和黨의 박정희총재를 비롯하여 모든 政治家들과 接觸하기를 希望한다는 것은 그의 태도의 變化를 여실히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1971년에 미국의 닉슨 大統領은 對蘇정책을 데탕트정책으로 전환시켜서 對蘇 對決을 종식하고 和解時代로 이끌었고 對中關係는 國交正常化로서 긴장완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北韓의 김일성도 긴장완화의 무드를 타고 南北對話의 길을 트고자 힘썼던 것이다. 그것은 北韓의 맹방인 中國과 소련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國際環境의 變化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武力戰術을 포기하고 平和攻勢로 바꾸게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0年

(5) Kim Il Sung, For the Independent,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Pyongyang :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3), p.171.

대의 武力統一을 전환시켜서 平和統一을 追求하는 것은 또한 統一戰線의 戰術의 變化라고 볼 수도 있다.

1970年代의 北韓의 對南戰略의 變化 즉 統一戰術의 戰略은 南韓에서의 “人民民主革命”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70年 11월에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第5次 大會에서 김일성은 南韓의 革命은 民主統一戰線의 개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南朝鮮 革命은 美 帝國主義 침략자를 반대하는 민족해방 革命인 동시에 美 帝國主義의 앞잡이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적관료와 그들의 파쇼지배를 반대하는 人民 民主主義 革命입니다. 이 革命의 基本 임무는 남조선으로 부터 美帝國主義 침략 세력을 몰아내고 식민지 지배를 일소시키고 군사 파쇼 獨裁를 없애고 先進社會制度를 수립함으로써 南朝鮮社會의 民主主義 發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⁶⁾

1970年代에 김일성이 제창한 人民民主主義革命은 中國에서 毛澤東이 제창한 “新民主主義革命”과 비슷한 것이다. 第2次 國共合作 시기인 1930年代와 1940年代에 中國革命은 新民主主義 革命이라고 그 性格을 規定하였던 것이다.

1945年 10月 김일성은 民族 統一戰線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中國의 경험은 한 반도의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데 좋은 교훈이 된다고 말하였다. 中國의 成功的인 戰略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가 만주를 강점하고...(I, p.2-3)

이와같이 김일성은 中國의 統一戰線 戰略과 북한 통일전선전략을 비교하며 反

(6) Kim Il Sung, Selected Works, 5 : 474-475.

日鬭爭은 反美鬭爭으로 변하고, 반동이었던 國民黨은 南韓의 반동정권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南韓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共產黨은 우리나라의 統一獨立을 主張하는 당파와는 서슴치 않고 合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共產黨은 결코 그들의 뒤꼬리를 따라 다녀서는 안되며 더우기 타당에 흡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共產黨은 언제나 그들과 合作하면서 자기의 독자성을 고수하여야 합니다.”⁽⁷⁾고 하였다.

1970年代에 北韓이 선택한 統一政策은 統一戰線 개념에 기반을 두었으며 김일성은 日本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의 편집장과 1972年2月10日에 會見하였을 때 중요한 제의를 하였던 것이다. 한국동란 이후에 체결된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기 위하여 北韓, 中國, 美國등 三者會談을 제의하였고, 駐韓美軍을 철수한 이후에 南北이 不可侵條約을 협상하기 위한 會談을 開催하는 것을 제의하였고, 또 相互間의 減軍문제도 협의하여 동시에 統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南北의 정당과 사회단체 지도자 連席會議를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후에 南北 赤十字會談이 순조롭게 계속되었고 또 南北의 頂上을 代表하여 이후락 정보부장과 김영주부장이 서울과 平壤을 교대하면서 비밀회담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秘密會談結果 1972年7月4日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는데 南北의 수뇌는 [統一3原則]에 合意하였다. 南北韓間에 합의를 본 통일 3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武力行事に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

(7) Ibid., 1 : 5.

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思想과 理念·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원칙은 統一戰線의 概念을 그대로 協商에 適應하여 놓은 것이며 統一3原則은 南北統一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原則에는 合意를 보았으나 그와같이 高尚한 원칙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實施한다는 過程에서 南北間에는 여러가지로 의견의 상충이 생겼던 것이다. 북쪽은 政治問題의 해결을 꾸준히 主張하여온 반면에 남쪽은 이산가족의 결합, 스포츠와 文化交流등 상호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協商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北韓은 무엇때문에 武力統一로부터 統一戰線에 의거한 政策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하여 볼 必要가 있는것이다. 1970年代에 한반도를 둘러싼 國際環境에는 急激한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美소間의 화해, 美中間의 國交正常化, 中日間의 國交正常化는 새로운 國際秩序를 造成하여 놓았던 것이다.

冷戰體制속에서 지속하여 오던 美蘇間의 對決은 平和共存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兩極體制는 多極體制로 變化하게 된 것은 美國이 전통적인 세계모니 개념을 버리고 中國, 日本, 西歐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勢力均衡을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東北亞에 있어서도 美中關係의 改善과 中日 國交正常化는 4強體制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닉슨 行政府가 出帆한 이후 닉슨 독트린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駐韓美軍이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北韓이 오랫동안 統一戰線을 형성하는 일환으로 주장하여온 目標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北韓은 美國이 越南戰에서 失敗한 이후 韓半島에서도 철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北韓은 지난 40여

년동안 駐韓美軍이 南北統一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北韓의 統一戰線 戰略은 南쪽의 愛國民主勢力 즉 남한의 반정부 반체제 세력이 연합하여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南韓政府를 전복시키고 人民民主主義政府를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駐韓美軍 철수는 統一戰線을 성취하기 위한 一部가 實現되고 있다고 北韓은 간주 하였던 것이다.

1970年代에 北韓이 南北對話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의 지도층이 國際情勢變化에 민감하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南韓의 지도층 역시 변화하고 있는 國際情勢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解放25周年을 맞이한 1970年 8月15日 박정희 대통령은 “남쪽은 南北사이에 인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단계적으로 제거시킬 용의가 있다고”말하고 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어느 體制가 더 유리한 것인지 開發, 建設, 創造의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다.

南北對話와 協商은 相當한 期間 지속되었으나 南北調節委員會 北側 대표 김영주 委員長의 일방적인 취소로써 南北은 또 다시 敵對關係로 돌입하게 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南北協商은 1980年까지 별로 진전이 없었다.

1974年부터 1979年사이에 北韓은 朴政權을 타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維新體制를 반대하였으며 남쪽의 反政府運動을 부채질하면서 적극 찬양하였다. 그와 동시에 北韓은 對美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南北關係의 교착상태로 말미암아 큰 成果는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 이후 또다시 南北對話에 응하였고 또 對美 강경자세를 바꾸어서 또다시 平和 攻勢를 취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Ⅲ. 1980年代의 統一戰線 戰術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北韓은 祖國의 統一問題를 해결하는데 統一戰線 政策을 다시 한번 시도하였다. 그것은 南北 協商때는 南北의 政黨 및 社會團體지도자를 참석시켜서 廣範圍한 對話로써 統一問題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反面에 南쪽에서는 政府의 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北韓은 統一戰線 개념 때문에 民衆의 참여로써 문제를 解決한다는 접근방법을 선택한 反面에 南쪽은 엘리트 어프로치(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1980年 10月 조선 로동당 第6次 당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을 때 김일성은 그의 中央委活動報告에서 7.4共同성명을 높이 평가하고, 전두환 정권의 비타협적인 통일정책을 비난하고, 南北統一方案으로써 高麗民主聯邦共和國를 제의하였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南쪽에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고려연방제는 南韓을 共產化시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신랄한 批判을 하고 일축하여 버린 것이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高麗 民主 聯邦 共和國」案은 統一政策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北韓이 내놓은 聯邦制는 3개 부분으로 나누워지고 있다.

첫째 : 聯邦制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

둘째 : 聯邦政府 形成과 運營의 原則

셋째 : 聯邦政府의 10大政策

여기에 설명한 모든 政策을 다 해석하기는 너무도 짧은 페이지에서 힘들지만 高麗聯邦共和國의 重要 目的은 두개의 코리아가 각기 自己들의 이데올로기와 體

制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면서 民族統一은 獨立的이고, 平和的이며 또 民族大同團結 原則에서 이루자는 것이 그의 골자인 것이다. 따라서 高麗 聯邦制는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는 유일한 方法이라고 강조하였다.

高麗 聯邦 共和國를 創設하는 前提條件의 하나는 南韓社會의 民主化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1980年 當時)의 政府를 民主政府로 교체함으로써 民衆의 意見과 利益을 代辨할 수 있는 政府가 먼저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政黨과 社會團體를 合法化하고, 政黨, 社會團體나 個人이 自由스럽게 政治活動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하고, 모든 政治捲을 석방시켜서 自由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과거의 모든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聯邦制의 重要한 骨字는 무엇보다도 南北이 동등한 權利와 義務를 가질 수 있으며, 南北이 獨自性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聯邦政府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聯邦最高會議」를 組織한다는 것이다. 民族聯邦最高會議는 南北에서 동등한 숫자로서 구성하고 聯邦政府의 기능뿐만 아니라 南과 北에 설치되어 있는 두개의 정부도 지도(guide)한다는 것이다. 北韓은 1980年代를 통하여 高麗民主聯邦制를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또 統一을 실현시키는데 유일한 方法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물론 聯邦制 統一案은 南쪽의 一部 학생들과, 지식층과 進歩勢力들에게는 상당한 공감대를 形成하였으며 統一을 희망하는 方便의 하나라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1984년에 北韓은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꿀수있는 三者會談 즉 休戰協定의 당사자인 美國, 中國, 北韓의 會談을 主張하였다. 이와같은 제의는 1963년에도 있었는데 그 當時 北韓의 최고인민회의는 韓半島에서 모든 外國을 철수하고,

南北의 兵力을 10萬으로 감축시키고, 또 外國의 무기와 軍備를 한반도에 도입하지 못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74년에 北韓은 美國과의 平和協定을 제의하였는데 그의 골자는(1) 不可侵과 武力戰爭의 종식(2) 국제연합(U.N.)의 기치하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外軍의 철수 (3) 武力增強의 종식 (4) 南韓에 있어서 外國이 武裝增強하는 것을 즉각 中止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제의는 1974이후 매년 國際聯合機構에 上程시켰으며, 1984년의 제의안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되풀이되는 것이었다.

北韓은 南北韓이 UN(유엔)에 동시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였다. 그러나 1991년 5月 UN에 加入 申請을 내기로 決議하여 北韓을 分析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면 북한이 國際社會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貢獻할 수 있을 것인가?

IV. 北韓의 UN加入과 統一戰線戰術

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기로 決定함으로써 북한은 “하나의 朝鮮”政策을 포기하고, 大韓民國을 하나의 國家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또 統一政策에도 變化가 생겼고, 統一戰線 戰略에도 變化가 생길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朝鮮”政策을 變更하고 연방체제案도 어느정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點에서 北韓은 무엇때문에 이와같은 政策變更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검토하여 볼 必要가 있다.

北韓의 聯邦制 統一方案은 1991年 新年辭를 계기로 金日成의 생각이 바뀌지기 시작한 것이다. 金日成은 新年사에서 全民族의 합의로써 統一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聯邦 構成 政府인 南北韓政府에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으로써 聯邦制의 修正 可能性을 시사한 바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南北 兩政府에게 좀더 많은 自由權을 부여하면서 一民族, 一國家, 二개 體制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의 副總理 정준기는 1991年 4月 8日에 교포통신(共同通信)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南과 北의 政府는 좀더 활발한 外交와 國防政策을 세울수있는 權限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主權行使의 可能性을 말한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은 소련의 聯邦制 즉 고르바초프의 聯邦案과 엘친의 聯邦制(Congedubow)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北韓은 1980年代를 통하여 주장하고 고수하여온 高麗聯邦制안을 어느정도 수정하고, 統一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統一戰線 戰略도 바꾸지 않으

면 안되게 되었다. 그것은 南쪽의 民衆支持를 받아서 그들의 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方便의 하나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國際情勢의 變化로 말미암아 統一의 目標을 達成한다는 것은 現段階에서 不可能하다고 北韓은 생각하고 있다고 分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韓蘇關係의 正常化, 韓中關係向上등으로 中國과 소련은 韓國의 UN加入申請을 한다면 拒否權을 행사할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1991年 가을에 韓國이 UN에 단독으로 加入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北韓은 UN加入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南北韓이 同時에 加入하지 않으면 北韓도 國際社會에서 孤立될 가능성이 相當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北韓이 UN에 加入하겠다는 宣言을 한 이후에 北韓의 지도자는 自己들의 決定을 正當化 또 合理化하기 시작하였는데 外交政策의 變化와 同時에 國際社會에 대한 새로운 關係를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1980年代를 通하여 北韓이 계속 主張하여온 바와같이 統一을 성취하겠다는 目標은 變함이 없으나 統一은 政府의 高位層 회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全人民이 참여하여 決定하는 群衆路線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

UN에다 加入申請을 하겠다고 宣言한 이후 北韓은 또한 聯邦制 統一을 討議하고 協商하기 위하여 南北代表者會談을 開催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정준기 副總理를 비롯하여 北韓의 指導層은 南北韓이 UN에 同時 加入한다고 해서 “하나의 조선” 政策을 完全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문제와 UN에 加入하는 문제는 別個의 문제로 다루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김일성도 統一問題의 해결은 聯邦制를 선택하지 않으면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中國의 外交部長을 6月19日(1991年)에 만났을 때 다시 한번 一民族, 一國

家, 두개 體制의 개념을 말하고 統一은 그와같은 原則下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北韓이 UN에 加入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UN司令部의 解體를 主張할 것은 확실하고, 또 UN을 통하여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치하는 것을 희망할 것이며 同時에 4만 3천명에 달하는 駐韓美軍을 UN의 위력으로 하여금 철수시키도록 힘쓸지도 모른다.

V. 結 論

韓國動亂이 終結된 이후 北韓의 統一戰線 戰術은 첫째, 南쪽의 國民을 설득시켜서 駐韓 美軍의 撤收를 강요하였고, 둘째, 美國이 支持하고 있는 大韓民國政府를 전복시키고 人民이 투표하여 선출한 政府로 代置시키기 위하여 人民民主主義革命을 고취하였다. 그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戰術을 채택하였는데 武力革命, 平和攻勢 또 對話와 協商등의 方法을 교차적으로 使用하여 왔다.

1980年代는 南北對話와 協商을 통한 統一方法을 모색하였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와 同時에 聯邦制 統一을 끈질기게 주장 하였으며, 1984년에는 美國과 中國을 끌어들이는 三者會談을 제의한 바 있고, 韓國動亂을 終結하기 위하여서는 UN 司令部의 해체와 駐韓美軍의 撤收를 지속적으로 主張하여 온 것이다.

統一戰線 戰術은 所期の 目的을 達成하지 못한것은 事實이나 南쪽에 대하여 전혀 영향을 못 끼쳤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學生, 知識層 또는 進歩勢力이 強化되었고 계속 統一문제의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워정자도 이제는 統一문제는 무시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南韓에서도 이제는 反美감정이 고조되고 駐韓美軍의 철수를 主張하는 사람이 점점 增加되고 있다는 사실은 北韓의 統一戰線이 어느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이 主張하는 非核地帶설치는 東아시아에서 相當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北韓이 UN에 加入하여 그와같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가정하면 相當한 수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는것이 一般的인 판단인 것이다. 北韓은 UN에 加入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國際社會에 심어주고 또 孤立狀態에서 벗어나 國際舞臺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戰線의 戰略을 成功시키기 위하여서는 北韓이 合理的이고 또 責任있는 國際機構의 一員으로 行動하였을 때 大多數의 支持를 받을 수 있고, 또 統一戰線의 戰術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第 3 分科 '90年代 南北韓關係

7. 南北對話와 交流

金 漢 教(신시대大)

目 次

I. 序 論	187
II. 南北對話와 交流의 概要	188
III. 問題의 여러次元	196
IV. 展望과 提案	201

I. 序 文

1971.8.20에 南北赤十字社代表가 離散家族의 再會를 돕기 위한 會議의 準備次板門店에서 만났다. 20年以上 南北間에 相互通信이나 接觸이 전반 없었다가 처음으로 兩側代表가 만났던 것이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30年이란 歲月이 다시 흘렀다. 家族相逢이란 單純한 人道的 目的에서 시작된 南北對話는 이 20年사이에 善意와 樂觀의 時期와 敵愾心과 悲觀의 時期를 여러번 겪으면서 오늘에 와서는 여러 “채널”을 통한 接觸과 交渉을 包含하는 複雜한 形態로 發展하였다. 20年은 길다면 긴 歲月이고 그사이에 南北兩側 다 人道面에서나 交渉의 姿勢面에서 여러 變化가 있었다. 여러번 中斷되었다가는 再開되는 式으로 進行되어온 對話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지난날의 經緯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對話에 支障이 되어온 여러가지 問題點을 分明히 알 수 있겠고 이렇게 過去의 記錄을 再檢討함으로써 앞날에 있을 수 있는 일을 豫見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II. 南北對話와 交流의 概要(1971年에서 1991年까지)

이 글의 目的은 南北對話와 交流의 詳細한 年表나 敘述을 試圖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接觸의 方向이나 樣態의 變遷을 좀더 뚜렷하게 記述하는데 있다. 여기서 最近에 있었던 일에 力點을 둔다.

對話와 交流의 頻度, 強度, 其他 重要性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네時期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即 1971年-73年, 1979年-80年, 1984-85年, 그리고 1988年-現在이다.

1. “解凍初創期”(1971年-73年)

板門店에서 赤十字代表가 처음 만난지 數個月 後에 南北經濟의 高位級人士가 極秘裏에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였고 그 結果로 平和統一3大原則을 담은 歷史的인 7.4聲明을 發表하였다. 1972年 초여름부터 始作하여 赤十字代表團과 새로 구성된 南北調節委員會代表들이 DMZ를 넘어서 빈번히 往來하게 되었다. 그러나 接觸開始當時의 興奮과 早急한 期待感이 가라앉으면서 對話의 進度가 떨어졌으며 1973年 中般期에 이르자 會談은 이렇다할 結實도 못이룬 채 中斷되고 말았다. 그리고는 서로 相對方에게 會談中斷의 責任을 따지게 되었다. 어느 經驗 많은 識者의 말을 빌린다면 이 時期는 “對話를 통한 對峙”의 때라고도 한다.⁽¹⁾

(1) 高秉喆, “南北韓交流協力の 政治的 側面”, 民族共同體와 統一問題(서울: 統一院, 1989) p.92

이 時期의 南北對話는 美·蘇·中을 둘러싸고 急激히 變化하는 國際情勢에 따라 南北韓이 보인 反應임에 틀림없다. 그와 同時에 南北自體의 國內政治的興件이 介入되어 있었는데 이點은 이 當時 統一問題가 世間的 論議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이에 朴正熙나 金日成의 權限을 強化하는 改憲作業이 南北兩側에서 強化되었다는 事實로서도 알 수 있다.

이때로부터 1979년까지 數年間 때로 會談의 再開를 特히 서울側에서 提議하였으나 南北對話는 休息狀態에 빠져있었다.

2. 探索의 時期(1979年-'80年)

朴大統領暗殺에 앞서 板門店에서 세번에 걸쳐 非正常的인 南北의 會談이 있었는데 서울 代表는 北側이 이미 解體되었다고 보는 南北調節委員會에서 나왔고 平壤側은 一種의 民間團體인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 代表를 보내왔다. 兩側은 서로 相對便을 無視하는듯 自己主張만을 하는 소위 “귀머거리의 對話”가 되어버렸다.⁽²⁾ 서울側은 이미 1973년에 南北의 交叉承認과 UN同時加入案, 1974년에 不可侵條約을 提案한바와 같이 相互政權의 法的承認과 現狀유지를 前提로 한 政府對 政府의 對話를 바랐다. 이에 반하여 平壤側은 그들이 1972년에 보였던 姿勢를 바꾸어 分明히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認하는 革命的大衆路線으로 되돌아 갔다. 1979年初에 있었던 “變則”對話가 失敗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와 並行하여 1979年2月~3月間에 네차례에 걸쳐 앞으로 平壤에서 있을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單一팀을 보내려는 協商이 있었는데 이 결실없이 끝나 不爲이었고 南韓選手가 國際競技에 參加하는 機會를 없애버린 結果가 되고 말았다.

(2) 統一院, A white Paper on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1982, p.165.

1980年初 朴政權 崩壞後의 서울의 不安한 政局을 틈타서 平壤側이 두가지 次元에서의 接觸을 提案해 왔다. 卽 南北政策代表들을 包含한 全國大會와 두 政府의 總理의 會談을 갖자는 것이었다. 全國大會案은 곧 霧散되어버렸으나, 政府高位級會談을 위한 豫備接觸은 1980年 2月~9月사이에 數次에 걸쳐 次官級代表間에 있었다. 그러나 이 豫備會議조차 舌戰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金日成은 그의 聯邦案을 構想하여 1980年10月10日 이를 발표하였다. 南에서는 소위 “서울의봄(春)”이 끝나고 全斗煥將軍이 領導하는 새로운 軍人執權層이 擡頭하였다.

'80年代初에 第5共和國은 頂上會談(1981),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과 20個示範實踐事業(1982)等 世目を 끄는 提案을 하였다.

平壤側은 「高麗民主共和聯邦」案을 極口 宣傳하였고 이것이 그들의 統一方案의 骨幹이 되었다. 서울에서 開催될 第24回 올림픽大會를 앞두고 南北間에 經濟擔當者들의 豫備接觸이 있기는 하였지만 1984年 9月까지 대체로 南北對話는 中斷된 채로 있었다. 1984年初에 北韓이 軍事的 緊張의 緩和를 口實로 3者會談을 提案했으나 南韓이나 美國은 卽刻 拒絕하고 말았다.

3. 部分的結實의 時期(1984年-'85年)

1984年9月 南韓水災物資의 提供을 北韓이 提案하자 南韓은 이를 卽刻 受諾하였고 分斷 以來 처음으로 南北間에 物資交流가 있게 되어 北은 쌀, 시멘트, 옷감, 醫藥品을, 南은 그대신 라디오等 消費用工產品을 相對便에게 傳達하였다. 이를 契機로 赤十字會談이 再開되고, 1985年 9月에는 數十名の 離散民이 서로 親族을 찾아 往來하게 되었다. 民間人家族議問은 이것이 처음이요 아직까지는 唯

一한 例이기도 하다. 이에 附隨되어 藝術公演團도 同行하여 祝祭분위기를 북돋우었다. 어떻게보면 個人的 人間的 情感을 宣傳用으로 利用한 것 같은 面도 있기는 하였으나 13년에 걸친 赤十字社의 努力의 結實이라는 點을 否認할 수 없다.

親族訪問以外에 새로운 部門에서도 이때 南北接觸이 始作되었다. (1)經濟交流, (2)國會, 그리고 (3) 서울 올림픽을 앞둔 體育部門이 그 例이다. 1984年11月부터 經濟交流를 위한 經濟의 會議이 시작되어 1985年 9月까지에 4차례 會談를 통하여 南北經濟委員會說立, 바-타交易品目決定等에 관하여 거의 合意에 이르는 進展이 있었다. 國會間交流는 平壤側 提議에 의해 1985年7월에 豫備會談이 있었고 또 이무렵 스위스에서 國際올림픽委員會의 案으로 南北體育擔當者들이 北韓의 올림픽參與를 위한 交渉을 시작하였다. 이뿐만아니라 1985年 10월에 뉴욕의 外交官 파-티席上에서 北韓副主席과 南韓 外務長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兩側이 宣傳을 위한 言辭을 止揚하고 實務的인 交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러한 變化가 1984年-'85년에 갑자기 있었는가 하는 것은 速斷하기 힘들지만 두서너가지 事實을 指目할 수 있다.

1984년에 平壤은 合營法을 制定하여 經濟 自給自足政策을 指向하고 外國의 技術과 資源을 導入하려고 하였다. 서울쪽에서는 다가오는 올림픽大會를 國家的優先事業으로 取扱하여 이를 契機로하여 安定된 近代國家로서의 大韓民國의 좋은 “이미지”를 培養해야만 하였다. 서울은 北韓의 올림픽 參加내지 不反對를 위하여 平和案을 써야 했다. 더 큰 視野에서 본다면, 1985年 3월에 고르바초프가 蘇聯政界에 登場하여 그해 11月에는 6年余만에 처음으로 美蘇頂上會談이 再開되었

다. 이러한 韓半島 内外의 여러與件이 共通對話의 촉진제가 된셈이다.

그러나 對話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네가지 對話部門에서 南北間의 隔差가 얼마나 뿌리깊고, 얼마나 幅넓은 것인지가 드러났다. 1986年初 南韓에서 年例의 韓美合同軍事訓練이 있자 北韓을 이를 非難하고 이것을 口實삼아 서울과의 接觸을 拒否하였다. 이로부터 2年以上, 即 1986年-87年사이에 一切의 南北會談은 中斷되었고 1987년에 北韓要員에 依한 KAL機 大爆破事件으로 因하여 1985年의 樂觀的 분위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北韓指導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第5共和國末年의 不安한 서울 政府로 따져보아 對話再開의 때가 아니라는 判斷을 내렸을 것이다.

4. 成熟過程 (1988年-現在)

過去 2,3年間에 東西 關係에 劇的인 變化가 연이어 있었다. 共產圈의 崩壞, 독일의 統一, 蘇聯內部的 政治的 經濟的 關等 一連의 事態는 國際政治의 樣相에 根本的인 變革을 가져왔고 韓國問題에 미치는 影響도 至大하다. 冷戰의 經驗과 蘇聯및 東歐經濟의 파산은 韓國이 政策을 急速하게 追求하는 機會를 마련하였다. 1989年 2月에서 1990年3月에 이르는 13個月사이에 韓國은 알바니아를 除外한 東歐共產圈의 모든 國家, 그리고 蒙古와 修交하기에 이르렀고, 1990年 9月 即 San Francisco에서 있었던 盧·고르바초프 會談이후 不過 3個月만에 蘇聯의 正式 認定을 받게되었다. 同年 12月에는 盧大統領의 蘇聯訪問이 있었고 今年 4月에는 고르바초프의 濟州訪問이 있어 韓蘇關係는 急速히 進展하고 있다. 韓中關係도 現存의 貿易代表部를 大使館으로 昇格시키고 國交를 完全히 正常化하는 것은 이제는 時間問題라 하겠다.

이러한 憂慮할만한 事態에 直面한 北韓은 서울의 外交攻勢에 맞서는 對策을 쓰기 始作하였다.

그들은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積極的인 努力을 서두르고 있다. 1988年 12月 以來 지금까지 13次에 걸쳐 北京에서 北韓과 美國外交官間에 非公式會합이 있었다. 1990年과 1991年 두차례에 걸쳐 韓國戰爭에서 쓰러진 美軍遺骸가 北韓側에 依하여 送還되었는데 이것은 1953年 休戰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美國內의 各種 學術, 藝術, 宗教的 모임에 參席하는 北韓의 非公式 訪問者의 數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때로는 이런 모임에 南韓에서 오는 參席者도 있다.

北韓의 對日接觸도 역시 增加一路이고 1991年 1月부터 正式 修交를 위한 會談이 現在 進行中이다.

가장 最近의 일로서 놀라운만한 消息은 平壤이 UN單獨加入反對라는 立場을 再考한다는 것과 北韓의에 대한 核施設의 國際機關의 依한 査察을 許容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劃期的이며 急轉하는 국제환경의 變化, 이에따른 南北韓의 對應策등으로 말미암아 南北對話나 接觸도 지난 2, 3年 사이에 새로운 境地에 이르렀다. 以下 1988年 以後의 重要事項은 列舉해본다.⁽³⁾

〈政府나 政治團體代表의 接觸, 高位(總理)會議〉

1990年7月까지 7次豫備會談

第1次 會談 1990年9月4~7日(서울)

第2次 會談 1990年10月17~18日(平壤)

(3) 李喜相, “南北交流協力の 經濟的 側面”, 民族共同體와 統一問題, 1989, p.106.

第3次 會談 1990年12月13~14日(서울)

第4次 會談 1991年2月25~28日(平壤)豫定이었으나 平壤側이 延期

國會豫備議會 1988年8月

IPU(國際會議聯盟)平壤大會에 南韓代表團 25名參加. (1991年 4月~5月)

南韓國會議員와 在野人士의 北韓秘密訪問(1988年, 1989年)

UN本部駐在南北·韓代表員의 接觸 (1991年 6月以前에 8次)

<經濟交流와 接觸>

北韓產品의 南韓으로의 公開輸入 첫케이스(第三國經由 1988年11月)3)

北韓產品(無煙炭)의 對南直輸送 (1989年)

南韓實業人(鄭周永)의 訪北(公認의 첫케이스·1989年2月)

南北商社間의 바-타 直去來契約(南韓産쌀과 北韓産 石炭과 시멘트, 1991年4月)

<藝術, 文化, 宗教, 學術 및 體育關係 接觸>

南韓音樂人14名이 平壤에서 汎民族統一音樂大會參加 (1990年10月)

뉴욕의 映畫祭에 南北韓映畫藝術人 參加 (1990年10月)

베를린의 韓國文學세미나에 南北韓文人 參加 (1991年6月)

北韓訪問團이 美國內韓人教會 訪問 (1991年 6月)

스탠포드 大學의 軍縮問題學術欄會에 南北韓學者參席 (1990年7月), 大阪의

高麗學大會에 北韓學者 11名 南韓學者 百余名參加 (1990年8月), 南韓學生代表

의 平壤 國際青年學生祝祭參加 (1989年7月), 아시아競技大會에서 南北韓體育

人 競技團體의 交流 (1990年 9月), 統一親善 蹴球競技 平壤과 서울서 開催

(1990年10月), 卓球와 蹴球 單一팀 構成會談 (1991年2月)

卓球팀은 1991년4월에 日本에서, 蹴球팀은 1991년6월에 포르투갈에서 參加豫定

〈其他接觸〉

赤十字會談 1989년9월 (거의 4年만에 再開)그러나 1989년 12월 豫定の 離散家族訪問團交流는 流産

平壤側이 提唱한 「汎民族大會」는 베를린(1990년 6月), 서울(1990년7月), 平壤(1990년8月)에서 豫備會談을 했으나 결국은 流會

在外韓人の 北韓 家族訪問의 增加

1990년 1年間に 美國에서만 千名以上 訪問

以上 例示한 事項中에는 南韓新聞에 大書特筆된 것도 많다. 또 附記할 것은 이 以外에도 여러가지의 南北接觸이 試圖되었으나 失敗하고 말았는데 그중 有名한 例로는 1989년 여름에 數百名の 南北學生이 白頭山에서 漢拏山에 이르는 “祖國巡禮”를 計劃하였던 일이다. 그뿐아니라 1990년8月中旬에 “民族大交流”를 서울側에서 提唱하여 相當한 關心과 期待를 불러일으켰다가 實敗한 例도 있다. 이 論文을 쓰는 중에도 (1991년6月), 오는 8월에 서울에서 있을 國際靑少年잡보리에 一百名の 北韓代表를 協請한다는 보도가 있다.

페르시아 灣戰爭과 팀스프리트演習을 口實 삼아 北韓이 1991년2月中旬에 모든 對話를 中斷시켰으나 過去經驗으로 보아 南北對話는 멀지않아서 再開될 것이고 앞으로 더 複數化되고 더 擴大될 可能性이 많다. 最近에 보도된 UN加入이나 核査察問題에 대한 北韓의 政策修正은 그들의 더 柔軟性있는 態度를 豫告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南北對話의 매우 重要的 分崎點에 서있다.

Ⅲ. 問題의 여러 次元

對話에 있어서 相互不信이 失敗의 根本要因이라는 것은 다아는 事實이고, 信賴感의 有無가 個人이나 集團을 無視하고 人間關係의 가장 基本的인 決定要素이라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기에 南北韓間의 모임에서도 兩側이 모두 信賴(trust)와 信義(confidence)를 構築하는 것이 絶對必要하다는 것을 數次 말해 왔었다. 이 信賴의 問題에 關聯되는 여러 與件을 살피기 위하여 南北이 서로 對立하는 立場에 서게되는 다음 세가지 次元을 分明히 하여야 한다. 즉 (1) 이데올로기의 그리고 政治的 次元 (2) 外交的 그리고 軍事的 次元(3) 經濟的, 社會的 次元이다.

1. 이데올로기의, 政治的 次元

지난 40年間 南北政權의 이데올로기의 政治的 基本構造는 거의 變하지 않았다. 南의 反共主義와 北의 主體思想은 各自의 領域內에서 絶對的인 存在로 君臨하고 있다. 南韓은 그 憲法秩序나 領導體制가 몇차례 要하기는 했지만 反共主義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礎石으로 남아있다. 이와 비슷하게 北韓에서도 맑스·레닌主義의 北韓式表現이라는 主體思想이 그곳의 사람들의 입버릇 같이 되었고 그 思想의 創出者를 감싸는 個人崇拜 때문에 神聖化되었다.

南韓의 政治는 暴動과 쿠데타를 몇번 겪었지만 그 權威主義的 樣式은 變함이 없다. 民主主義에 立脚한 自由나 統治는 비록 最近에 와서 若干의 有望한 徵兆가 있기는 하나 아직 實現하기 힘든 課題로 남아있다. 反共主義와 權威主義가

합치고 보니 共產主義治下の 北韓에 대한 참음(tolerance)이 있을 수 없다. 平壤 政權은 政治上의 敵手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상의 異端者로서 南韓의 政治安定에 根本적인 威脅을 주는 根源이다.

北韓의 政治는 겉에서 보기에 南韓보다 變動이 많지않았다. 公式 이데올로기나 最高指導者의 全體主義的 妥當性은 그 歷史를 通하여 큰 排戰을 받지 않았다. 이데올로기의 狂信的受容과 指導層의 堅固한 地盤은 個人崇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보니 對內, 對外政策을 가리지 않고 모든 面에서의 讓步나 協商을 極히 힘들게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政治的 硬直性은 南北韓間에 아직 殘存하는 韓國戰爭의 悲痛한 記憶때문에 더욱 惡化된다. 지난 20年동안에 世界政治에 나타나는 刮目할만한 여러 變化에도 불구하고 韓半島事態에 直接 또는 即時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다. 中美, 蘇美, 中蘇關係가 劇的으로 好轉되고 共產諸國이 沒落하였지만 이러한 豫想에도 不拘하고 韓半島內部的 이데올로기의, 政治的 對峙는 아직 硬直한 채로 남아있다. 南韓의 反共保安法規는 尙存하며 아직 有效하다. 그 反面 北韓은 여전히 南韓에서의 革命을 부르짖고 있으며 서울 政權을 아직도 美帝國主義의 傀儡라고 부르고 있다.

國際舞臺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와 韓半島內 事態와의 사이에 時差가 있는 것은 비록 韓半島에만 局限된 現象은 아니다. 아시아의 다른 地域에서도 이런 時差를 보게 되는데 日蘇關係나 強大國의 軍事力의 이 地域內 配置狀況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의 事態는 그중에서도 가장 解決이 힘든 일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南韓에서는 反政府勢力 特히 過激派學生들이 北韓의 여러가지 提案을 支持하거나 또는 그에 同調的인 것으로 看做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政府는 對北關係와 國內政治싸움間에 緊密한 連繫關係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北韓의 경우에는 最近指導者의 오랜 任期 또 그가 革命의 第一時代 出身이기 때문에 누구도 敢히 既存政策을 外部情勢의 變化라는 理由만 가지고 再檢討하거나 修正하자고 提議하기가 어렵다.

2. 軍事的, 外交的 次元

韓半島는 150萬 以上の 잘 武裝된 兵力이 前進配置되어 恒常警戒狀態를 지키고있는 世界에서 가장 武裝化된 地域의 하나이다. 美國의 核武器配置說이 있고 요즘와서는 北韓의 核施設에 關한 憂慮도 있고해서 軍事狀態는 더욱 緊張되고 있다.

世界의 大勢가 核武器나 探索武器 그리고 兵力을 줄이고 軍事同盟을 質적으로 바꾸거나 破기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東北아시아의 軍備增強計劃을 늦추거나 그 方向을 反對便으로 돌리지는 못하고있다. 韓半島內의 雙方의 軍隊는 繼續해서 裝備나 訓練面에서 增強되고 있다. 南韓의 國防豫算은 繼續 늘어나고(美軍兵力의 減縮이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와 同時에) 새로운 武器나 軍事技術의 南韓導入은 持續되고 있다.

北韓에서는 兵力을 10萬名 줄였다고 하지만 아직 確認되지는 못하였고 核武器 武裝中이라는 報道가 많은 우려의 對象이 되고 있다. 西方側 情報는 北韓의 軍事力이 南韓에 比하여 數量的으로 決定的인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淮測하고 있다.

서울에서나 平壤에서나 軍은 많은 勢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南韓指導者들이 軍出身인 것은 잘알려진 일이다.

北韓의 軍은 다른 共產國家의 경우처럼 黨의 指揮下에 있다. 그러나 北韓의 政策決定過程에서 安保問題가 차지하는 重要性을 감안한다면 職業軍人이 平壤의 執權層內部에서 차지하는 地位를 強調 안할 수 없다.

韓半島事態에서 軍事的 次元이 얼마나 重要한가는 ทัพ스피리트 演習, DMZ 밑의 땅굴, 寧邊의 核施設 等에 관한 報道나 論議가 끊임없이 있다는 事實로서 알 수 있다. 또하나 重要한 것은 軍事同盟을 維持하려고 힘쓰는 努力이다. 바르샤바와 同盟이 正式으로 解體되고 NATO가 再編成되고 그 政策도 再檢討되는 이 때 서울과 워싱턴間的 同盟은 아직도 確固하며 隨時로 補完되고있다. 平壤 역시 北京이나 모스크바와의 同盟을 애써서 지켜 나아가고 있다.

韓半島의 두 政權은 外交政策面에서 “Zero-sum game”의 前提下에서 이를 推進하고 있다. 서울 政權은 “할슈타인”原則을 포기하고 交叉承認과 UN同時加入을 提唱하며 民族共同體를 위한 和合을 宣言한 後에도 外交를 平壤政治와의 對立에서 優位를 차지하려는 方便으로 쓰고있다. 例를들면 美國이나 日本이 北韓과의 外交接觸을 하는데 있어서 完全한 그리고 때로는 事前의 協議를 要求하고 있다. 그 反面 平壤政權은 平和的 意去나이니 民族의 單一性を 늘 主張하면 서도 韓蘇協約에 화를내고 韓中接近에 神經을 쓰고있으니 이런例는 兩쪽 다 外交手段을 相對方보다 有利한 地位를 確保하는 方向으로 使用하고 이는 證左이다.

3. 經濟的, 社會的 次元

經濟, 社會政策이나 그 實踐에 있어서 두個의 韓國은 이데올로기 政治, 그리고 軍事, 外交部門에서 본 바와 같은 뚜렷한 差異點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經濟力이나 社會福祉가 國內安定뿐아니라 韓半島內 南北關係를 包含한 外交關係에

도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1960年代 初期에서부터 南韓의 市場經濟는 驚異的인 發展을 보이고 GNP나 交易面에서 北韓을 훨씬 앞서게 되었다. 그러나 “漢江의 奇蹟”에는 代價가 있었다. 富의 더욱 더 公平한 分配, 環境保全等の 問題가 提起되었고 貿易依存도가 높아지면서 經濟의 自主性, 安全도가 關心의 對象이 되었다. 北韓의 경우는 1950年度에 對南 經濟的優位를 차지하다가 1970年度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反對 現象이 일어났는데 이는 주로 다른 共產圈地域에서 보는 바와 같이 “命令型 經濟”(Command economy)의 共通된 弱點 때문이다.

“스탈린”式 經濟政策은 消費生活을 희생시키고 個人의 創意性을 抹殺하였다. 그뿐 아니라 北韓經濟는 國際市場, 先進技術, 外國資本으로부터 隔離되어 (故意로 아니면 國際環境때문에) 그 實績이 보잘 것 없는 形便이다. 中國을 본받아 經濟的 門戶開放案을 어느 程度 試圖하였으나 結果는 아직 未知數이다. 그 反面 北韓에서는 南韓과 같은 經濟的, 生態學的 그리고 社會的 代價를 치루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다.

南韓은 經濟的인 成功을 自己社會가 全般的으로 相對便價보다 優越한 證左라고 볼 可能性이 있다. 그 反對로 北韓은 經濟的 自足性을 자랑하고 南韓의 社會 經濟面의 不均等を 誇張한다.

世界經濟는 지금 資本, 技術, 物資나 서비스의 多邊的 交流가 많은 數의 經濟人이나 團體와 相互作用을 通하여 이루어지는 複雜한 樣相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 韓半島에서는 南北間에 이렇다할 經濟的 交流가 없고 오히려 社會, 經濟的 資料를 惡用하여 相對便像을 헐뜯고 있다는 事實은 時代錯誤的이며 害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IV. 展望과 提案

對話와 交流의 過去業績과 問題點의 여러 次元을 위에서 살펴 본 結果를 토대로 몇가지 私見을 紹介하여 對話의 契機를 삼고자 한다.

1. 南北對話는 中斷, 遲延은 있을망정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對話를 안한다면 窮極的으로는 戰爭만이 남게 되는데 이는 人命, 政治, 經濟面에서 큰 損失犧牲을 要求하니 理性을 가진 사람에게는 納得이 안간다.

對話나 接觸은 앞으로도 國內政治나 宣傳用目的으로 利用될것ियो. 따라서 內外與件의 變化에 많은 影響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서 完全히, 그리고 永遠원達히 對話를 끊어버리는 冒險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2. 對話와 交流의 “채널”이 더욱 늘어나고 따라서 이러한 接觸에 종사하는 사람의 數도 增大할 것이다. 現在까지 對話가 별로 없던 部門에서도 對話가 생길 것이다. 南北韓의 UN加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되면 UN이나 그 傘下機構 關聯團體 테두리 속에서 南北韓이 自然스러운 外交接觸을 할 機會가 많아질 것이다.

이와 同時에 過去2-3年間에 본 바와 같이 非政府, 民間次元의 接觸이 늘어날 것이다. 學生, 經濟, 生活團體, 勞動團體代表들이 交流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TV나 라디오放送을 包含하여 “매스 미디어”가 開放되고 書籍 其他 出版物도 開放될 날이 올 것이다. 南北間의 訪問도 赤十字社를 만드시 通하지 않더라도 可能해지고 時間이 갈수록 더 容易하고 더 頻繁하게 될것이다.

3. 南韓對話는 感情的 感傷的次元에서 벗어나서 좀더 實益本位로 進展될 것이다. 接觸의 最初段階에서는 新奇하고 興奮도 하지만 그 고비를 지나면 좀더 打算的으로 될 것이다. 實利를 따지는 交渉은 하되 政治이데올로기를 들고나서는 일은 드물게 될 것이다. 最近에 있었던 體育會談의 例로보아 妥協은 可能하며 國民大衆도 이를 支持할 것이다.

勿論 與件에 따라 다르겠고 政治色이 짙은 問題는 더 어렵고 藝術이나 體育에서는 이런 妥協이 더 쉬울 것이다.

4. 앞서 말한 對話의 여러 問題點은 앞으로 本質的인 變化가 갈수록 더 빠른 速度로 일어날 것이다. 1971年以前 約20余年동안 전혀 接觸이 없었던 것, 7.4聲明 이후 7年間이나 對話의 斷絶이 있었던 것 등을 상기해보면 '80年代 後半에 들어서 南北對話와 交流가 보여준 變化의 速度는 豫想 以上으로 빨랐다. 世界情勢의 速度에 따라 若干의 時差는 있겠지만 韓國事態도 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하나 問題가 되는 것은 政治大權 承繼問題, 特히 北韓의 繼承問題이다. 金日成 以後의 北韓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執權하는가는 南北關係 全般에 걸쳐 重要的 그러나 豫見하기 힘든 要因이 된다.

5. 南北韓關係에서 急激히 打開口가 열릴 수는 있으나 獨逸 統一方式 같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과 韓國問題의 差異點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단지 北韓의 降伏이나 吸收가 있을 徵兆는 보이지 않는다고만 말해 두고 싶다. 그러나 어느 期間을 두고 相互交流, 平常的인 交流를 거듭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劇的인 事態가 發生할 可能性은 있다고 본다. 독일이나 東歐各國의 例를 보아도 지금 立場에서는 想像조차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素地는 있다고 본다.

以上の展望이나豫見은大體로肯定的인性格을 지니고있는데, 여기에 부쳐서南北對話過程을促進하기 위한 몇가지提案을提示하고자 한다.

- (ㄱ) 어려운問題를避하고 서로利益이되고合意하기 쉬운 일부터 시작한다.
- (ㄴ) 相對便의轉向을 바라거나強要하는일이 없어야한다. 現狀에서出發하고當爲性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 (ㄷ) 名稱이나 '이미지'에拘礙되지말고實質的 問題를 다루어야 한다.
- (ㄹ) 愼重한 態度로 때로는 秘密을 지켜가며 活動하여 宣傳效果를 위한 行動을 참가하라. 言論紙上에서 得點하는 길은 目的이 아니다.
- (ㄹ) 忍耐心을 가지고 오랜 試練에 對備하여야 한다.
- (ㅁ) 非政府次元의 接觸을 禁하지 말고 獎勵하자. 나라의 統一은 單一의 行爲가 아니고 無數의 對話와 交流를 通하여 이루어지는 긴 過程이다.

南北韓關係는 어려운 고비를 지나 지금 重要한 轉換期에 이르렀다. 兩側이 다 友好的 態度의 賢明한 努力을 取한다면 韓國事態는 冷戰의 殘骸를 허물고 있는 世界의 趨勢에 逆行함이 없이 그리고 모든 韓國人의 熟願을 達成하게 될것이다.

8. 南北韓 緊張緩和와 軍備統制

李 恒 悅(세퍼드大)

目 次

I. 머리말	207
II. 南北韓의 軍縮政策	209
III. 南北韓의 軍備統制에 관한 評價	215
IV. 核武器 撤去와 美軍撤收問題	221
V. 結 論	226

I. 머리말

1953年 休戰 以後 韓國戰爭이 끝난지도 언 38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南과 北한은 軍비경쟁을 하고 있으며 國際情勢의 完화를 고려할 때 이 경쟁 危險하고도 反時代的이라고 할 수 있다. 特히 1950年 6·25때의 파괴력과 現在의 파괴력을 比較하여 보면 거의 80배가 가까운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두 체제의 現在 관계는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¹⁾ 南한의 國防部 예측에 의하면 韓國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一週日 以內에 240萬의 사상자가 생겨날 것이며 한달 內에는 500萬과 90%의 건물들이 파괴된다고 하였다.⁽²⁾ 이런 것을 참작할 때 軍비통제는 南한과 北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軍備를 축소하는데는 두가지의 目的이 있다. 첫째는 軍사 경쟁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죽음과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現在 南北韓의 국내사정은 軍비통제를 必要로 하고 있으며⁽³⁾ 特히 北韓은 그들의 經濟的 곤란과 外交的 고립 때문에 더욱 軍비통제가 必要한 것이다. 만약 北韓이 金日成 死後 정치, 사회적 安定을 바란다면 더욱 軍비통제가 필요하다. 南韓의 경우에도 이상훈 國防장관이 인정하였듯이 1990年代에는 새 安保政策이 必要하며 軍비통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特히 南北韓 관계 개선을 위해 서는 軍비통제가 必要하며 어떤面에서는 이것이 벌써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年에 처음으로 南韓의 國防비가 전체예산의 30% 以下로 하락했고 GNP의 5%정도로 낙착되었다. 北韓도 1987年에 軍隊 數를 10萬이나 감군하였던 것이

(1) ROK Ministry of Defense, Defense White Paper, (Seoul : 1989)

(2) Han Kuk Il Bo, December 12, 1989, 1.5

(3) Ibid.

다.⁽⁴⁾

이 論文은 이런 시점하에서 韓國분쟁의 해결을 위한 軍縮을 연구하고 軍축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目的이다. 軍縮을 위한 제의 중에서 兵力減縮, 軍隊配置, 核武器와 美軍撤收 等の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軍縮 연구 분야에서는 自己兵力에 대한 自身感, 信賴構築方法, 상대방의 軍事力과 武器에 대한 사찰, 軍備縮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도 아울러 고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南北韓이 軍備競爭으로 인한 긴장감을 줄일려면 여러가지의 신뢰 구축 방법이 必要하다. 예를 들면 直, 間接의 경제교류, 政治的인 접촉, 文化와 사람들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信賴構築이 축적이 되면 軍配置의 문제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양쪽이 서로 신뢰하게 되면 核武器, 化學, 生物 武器를 감소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兵力數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強大國의 보장으로 美軍의 장래도 결정될 수 있다. 남한은 經濟的, 社會的 대화와 타협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결국 北韓이 군사, 軍비축소 문제를 더 강조하므로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과 必要 이상의 軍備縮小 등을 포함한 本質的 문제 해결이 좀더 創意的인 방법을 요구 하고 있다.⁽⁵⁾ 무엇보다도 양당사간에 양보가 있어야 하며⁽⁶⁾ 어떤 구조적 체제가 軍축과 대화를 하는데 必要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 南北韓의 軍縮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4) See the Korean Budget of 1990, by KDI Report

(5) Follett, M.P., The Collected Papers of Mary Parker Follett(London : Pittman, 1941), p.32.
Rhee, Hang Yul, "How South and North Should Negotiate", Korean Observer, (Seoul :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987), pp 196-198

(6) Ikles, Fred C. How Nations Negotiate(New York : Harper & Row, 1964), pp. 43-45.

II. 南北韓의 軍縮政策

많은 기회에 南北韓이 軍縮을 제안하였는데 북한은 자그만치 64번에 걸쳐서 하였고 남한은 24번의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兩側의 제안은 너무나 달랐고 대개 宣傳效果와 外交的 목적 이득을 위하여 제안되었다. 다음 圖表에 보는 바와 같이 다른점이 많았다.⁽⁷⁾

〈圖表 1〉

TABLE 1

Proposals for Arms Control by South and North Korea

<u>Category</u>	<u>South Korea</u>	<u>North Korea</u>
Basic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ms control through three stages ·Political confidence building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rms re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condition ·Cessation of Team Spirit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tual visits and exchanges of military personnel ·Mutual disclosure and exchanges of military information ·Notification in advance of the movement and maneuvering of military units of certain size or larger, and invitation of observers ·Beginning January 1, 1991 ·Brigade or larger units ·Notification 45 days in advance ·Establishment of hotline between ministers of 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triction of military exercises ·Prohibition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ith foreign forces and military exercises of foreign for in the territories ·Ban of military exercises of division size or larger ·Suspension of military exercises near the DMZ ·Notification of military exercises in advance ·Making a peace zone of the DMZ ·Withdrawal of troops and weapons

(7). See Moon, Chung—in, "Managing the Inter-Korean Conflict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e Formation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90), pp. 175-178. Comparis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proposals is well described in this arti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fense ·Demilitar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its use for peaceful purpo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aring down military facilities -Use the DMZ for peaceful purposes and open it to civilian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ccidental conflicts and subsequent escalation -Establishment of hotline between high military authorities -Limit provocative military activities along the entire DMZ
Non-aggression 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after restoration of politico-military confi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concurrently with arms control measures
Arms re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nsform offensive military structure into a defensive one ·Initial balancing of military power -To possess equal numbers of troops and weapons the side with larger armed forces should first reduce them to the level of the other side ·Progressively balanced force reduction thereafter to successively lower levels ·Reduce the number of troops in accordance with reductions in arms ·Reduce concurrently reserve and paramilitary forces ·On-site verification and monitoring -Operate a joint verification group and permanent monitoring groups ·Mutual consultation on the final reduced level of armed forces in consideration of the military capabilities needed by a unified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hased reduction of forces in three stages within three to four years -Troops cut to 300,000 in the first stage, to 200,000 in the second, and to 100,000 in the last stage -Military equipment scaled down in proportion to troop cuts -Disbandment of militia in the initial stage ·Restriction on military equipments -Cessation of import and development of military equipment -Suspension of import of military technologies ·Mutual notification and verification -Notific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arms cutsh -On-site verification ·Setting up a nuclear-fre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Pull out nuclear weapons out of South Korea -Prohibition of production and purchase of nuclear weapons -Off limits to foreign ships and planes carrying nuclear weapons

Peace-guarantee
measures during and
after arms reduction

·Deploy observer troops composed
of neutral nations
·Establish a joint military com-
mittee to resolve possible mili-
tary disputes

Source : Texts of proposals by South and North Korean Prime Ministers at the first session of the Prime Minister's Conference held on September 5, 1990 in Seoul.

1. 北韓측의 態度

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은 한반도에서 軍事緊張을 줄이기 위하여 두가지 방법을 제의하고 있다. 첫째 軍事移動과 적대적인 軍事行動을 중지하는 것이며 둘째 戰鬥軍과 軍施設을 DMZ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된 후 兩側의 總軍隊數를 1992년까지 10萬으로 줄이며 軍備競爭도 중지하며 外國으로부터 武器도 수입금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緊張緩和보다 外部의 안보환경을 조정하므로써 분쟁이 해소하자는데 더 중점을 두고있다. 이 노선은 결국 韓國의 분쟁을 美軍介入때문에 생겨났다는 주장과 같으며 그런 論理下에서 그들은 韓國전쟁 이후 줄곧 美軍撤數를 요구하였으며 韓美安保 協定을 철회할 것을 바랬다. 이런 맥락에서 北韓은 韓美合同 軍事訓練, Team Spirit를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東아시아에서 非核地帶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北韓의 이러한 정책은 圖表1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남한 정부의 正統性을 부정하는 것이다. 北韓 주장에 의하면 남한은 노동자와 농민들 같은 보통사람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으며 美帝國主義者의 꼭두각시이며 과거 친일파였던 지주들이나 사업가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남북교섭에 있어서도 美國과 직접 교섭하든가 美國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南韓의 態度

남한은 北韓과는 다르게 紛爭解決에 있어서 더 점진적이며 수세적인 입장을 取하고 있다. 주로 緊張緩和를 위한 방법에 치중하였다.⁽⁸⁾ 남한은 DMZ를 양자간의 紛爭點으로 간주하고 휴전지대에 “平和都市”를 건설하여 再非武裝地帶를 만들고 군사 완충지대 설치를 제의하였다. 軍事緊張의 완화를 위한 다른 제안은 武力 不使用 선언과 各者의 國內問題에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고 軍事訓練을 서로 통지할 것과 서로 관측조사팀을 파견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안하였다. 全體적으로 南韓은 軍縮보다 긴장완화에 더 관심을 두었으며 안보환경변화에 더 관심을 표명하였다. 과거의 군축에 대한 미온적 태도 보다, 現在에는 더 능동적인 태도를 取하였으며 美國의 Washington Post 7月4日字에 의하면 이번 9月 UN 방문때 盧大統領이 군축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새로운 방안을 재출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한서는 군축 토론이 금지되다 시피 했으며 1988年 10月18日 UN연설에서 노대통령이 “東北아시아 평화안전기구” 설립과 同時에 군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군축 제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⁹⁾ 이런 정책 변화는 “北方政策”이라는 이름으로 표명되었으며 美·蘇의 냉전 종식, 蘇聯과의 화해관계 수립으로 가능하였다.⁽¹⁰⁾ 대체적으로 軍縮에 관한 南韓의 정책은 이북에 대한 불신감에 의하여 지배 되었으며 北韓의 군축제의를 과거에 하나의 속임

(8). Rhee, op. cit., p. 184.

(9). see Han Kuk Il Bo, October 19, 1988 for the text of speech.

(10).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4. A Comparison of Proposals on Unification by North and South Korea,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in Korean); Lee, Dal Gon, “Alternatives for the Arms Control Negotiatio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 11, Number 1, Spring, 1989, (Seoul: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90), pp. 103-118.

수로만 간주하였던 것이다.

3. 南北韓의 軍事力 比較

많은 南韓政策者들은 北韓이 赤化統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과거에 믿었었다. 南韓의 國防部 發表에 의하면 北韓은 1962년부터 1987年 사이에 군대수를 2.1배, 탱크수 5.4배, 대포수 3.7배와 항공기를 1.7배나 증가시켰다는 것이다.⁽¹¹⁾ 따라서 北韓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더 우월하며 圖表 2에서 증명된다는 것이다.

〈圖表 2〉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Strength

	<u>Personnel</u>	<u>Tanks</u>	<u>Artillery</u>	<u>Aircraft</u>	<u>Ships</u>
South Korea	655,000	1,500	4,200	500	190
North Korea	990,000	3,600	9,400	840	690
Ratio(N/S)	1.5	2.4	2.2	1.7	3.6

Source : ROK Ministry of Defense, Defense White Paper (Seoul, 1990), pp. 110-116.

1989年 南韓의 國防白書에 의하면 南韓의 총군사력이 北韓의 65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며 美國軍을 숨치면 약 70퍼센트가 된다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南韓정부는 北韓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ROK Ministry of Defense, Defense White Paper(Seoul : 1988) p. 75.

(12). ROK Ministry of Defense, Defense White Paper(Seoul : 1990), pp. 110-116.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trength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n Lond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omparison by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Thus, the IISS Kata is not cited here. See IISS, Military Balance 1990-1991, p. 166-167.

Also, see Kwak, Tae-Hwan, "Military Capabil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 A Comparative Study", Asian Perspective, Volume 14, No. 1, Spring-Summer 1990, pp. 113-14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南北韓은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보고 있으며 또한 서로 不信하기 때문에 軍備 경쟁을 멈출 생각은 안하였을 것이다. 그 以外에 남북한간의 분쟁 타결에 있어서 하나의 큰 걸림들은 남한으로 부터의 美軍撤收問題와 이것이 군사통제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가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紛爭 解決에 같은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例를들면 兩者는 平和 協定과 不可侵條約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軍의 주둔과 역할에 대해서 서로 反對意見을 제시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분쟁을 평화스럽게 해결하는데 속수무책인 것이다. 분쟁해결은 서로의 案만 내놓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式이고 서로가 좀더 건설적인 方向을 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軍事緊張感이 높고 不信의 鴻조가 깊게 남아있다.

Ⅲ. 南北韓의 軍備統制에 관한 評價

이 章에서는 이러한 불신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兩者의 軍備統制案을 批評하고자 한다.

1. 南韓의 軍備統制 政策에 있어서 약간의 短點

南韓이 주장하는 軍備統制案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兩者의 軍인수를 平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제안은 두가지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北韓의 軍事力은 南韓보다 훨씬 우수하며 둘째, 이런 不均衡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¹³⁾

그러면 정말로 北韓의 軍事力이 南韓보다 우월한가? 근래에 있어서 軍事力 우월의 비교를 軍인수와 무기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軍事力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軍인수나 무기장비로만은 정의할 수 없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여건을 참작하여야 되는 것이다.⁽¹⁴⁾

客觀적으로 볼 때 現在 南北의 軍力은 동등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과거식대로 軍事力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성이 없는 것이다.⁽¹⁵⁾ 現在 南韓과 北韓은 서로 상

(13). ROK Ministry of Defense, Defense White Paper, (Seoul : 1988), p. 152 .

(14). For discussion of power concept, see Wright, Quincy,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on, 1955). Stoessinger, John C., The Might of Nations, 3rd Edition, (New York : Random House, 1969).

(15). Ha, Young-Sun, "The Korean Military Balance : Myth and Reality", (Seoul : Korean Institute of Defense Analysis, 1988). (Unpublished mimeo)

Lee, Young Ho, "Comparative Study of War Capabil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ahei Wa Sasang, Vol. 1 (Seoul : 1988), pp. 140-166. (in Korean)

대방이 軍事力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걱정은 어느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군의 주둔만이 아니라 南韓內에 핵무기가 있다는데 근거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Gulf 전쟁에서 美國의 위력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南北韓은 상대방에 비해 각기의 軍事力이 열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現實的인 군사적신뢰구축 방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2번째의 도표가 보여주듯이 南韓은 한반도에서 軍事力을 比較할 때 美軍을 고려하지 않는데 사실 北韓이 6·25처럼 다시 침략하면 美軍은 自動的으로 戰爭에 다시 介入하게 되는 것이다. 現在 韓國정부와 美國정부가 公式的으로 핵무기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지만 핵무기가 韓國에 있다는 것은 이번 7月3日 韓美정상회담 以後 간접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北韓의 영변에 있는 핵무기 제조를 저지하기 위하여 韓國內의 핵무기를 움직이지 않겠다고 發表한 것이다.(7月3日字 Washington Post, p.19). 核武器 以外에 最新의 非核武器도 美軍은 갖고 있으며 또한 매우 발달된 통신망과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韓國內의 美軍은 600-700백個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그 위력은 12megton의 TNT에 맞먹는다는 것이다.⁽¹⁶⁾ 1945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이 12.5킬로톤이었으며 원폭 폭발 3個月內에 13萬의 사상자가 생겨났었다. 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거의 1000배나 되는 위력의 핵무기가 현재 韓國에 있다는 것이다.

Moon, Chung-In & In-Taek Hyun, "Mudding through Security",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Washington, DC, April 9-11, 1990.

(16) Henderson, Gregory, "American Command in Korea: The Political Dangers", Korean Politics in the Period of Transition, ed. by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1987), p. 162.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Korea and U.S. Policy in Korea", Defense Monitor, 1988, Vol. V pp. 1-8.

이런 것을 참작할 때 北韓의 두려움도 결코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¹⁷⁾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南韓의 군력이 北韓에 뒤떨어진다는 가설은 經濟的 힘의 면에 있어서도 도전될 수 있다. 現在 南韓의 國民總生産量은 北韓의 3.8배이고⁽¹⁸⁾ 南韓의 기술발달은 北韓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또한 人口도 南韓이 北韓보다 2배가 더 많으며 國防費도 北韓의 2.4배이다.⁽¹⁹⁾ 이런 사실은 London의 國際戰略 研究所 發表에 의한 것이며 Stockholm의 平和研究機關에 의하면 南韓의 국방비가 北韓의 2.7배라고 한다.⁽²⁰⁾ 이런 兩國의 軍事力 비교에 있어서 비행기와 군함을 들어 지적할 수 있다. 많은 北韓의 비행기는 1950年代와 60年代에 제작된 非초음속 비행기이고⁽²¹⁾ 南韓 조종사의 비행연습 시간도 以北조종사의 3배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造船(Ship Building)에 있어서도 南韓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생산하며 도표 2에서 배數가 北韓에 못미쳐도 Ton수로 따지면 北韓보다 45%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²²⁾ 이런 맥락에서 現在 南韓이 주장하는 北韓軍事力과 同等함을 가지려는 군비확장을 北韓例에서 볼 때는 위협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南韓의 軍事力확장은 北韓서도 아주 값비싼,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1991年 5月30日에 한국 國防部는 1992年 國防費를 금년의 국방비보다 6%를 더 청구한 것 등에 北韓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²³⁾

(17). Schell, Jonathan, *The Fate of the Earth*, (New York : Knopf, 1982), pp. 36-37.

(1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ilitary Balance 1990-1991*, (London, 1991), pp. 166-167.

(19). Ibid.

(20).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p. 164.

(21). South Korea Defense Ministry reported that North Korea was supplied with 12 s by the Soviet in 1988, but South Korea Plans to coproduce F-16 or F-18 aircraft in the near future with the help of American technology.

(22). South Korea had 99,000 tons, while North Korea had 68,000 tons, including the tonnage of submarines. Lee, Young-ho, op. cit., p. 156. Lee systematically criticized the inferiority thesis of South Korea with numerical data.

(23). Han Kuk Il Bo, May 31, 1991, p. 2.

2. 北韓의 軍備 統制 政策의 약간의 短點

북한의 군비통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단점은 軍縮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구조가 결핍되었으며 그들의 정책이 그릇된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은 軍縮만 되면 한반도에 있어서 平和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런 결론 때문에 軍縮으로 가는 단계적인 신뢰구축을 생각도 않고 있는 것이다. 特히 北韓은 軍事긴장감을 냉각시킬 수 있는 政治的 신뢰구축방법을 조금도 고려 안하는 것이다. 신뢰구조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政治的, 軍事的 적대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現實性이 가능한 방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信賴構築 方法들은 군축과 무장해제 또는 긴장완화 방법 自體를 表示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무기를 줄이는 방법이 hardware를 포괄하는 반면 신뢰구축방안은 政治的, 軍事的인 software로 表示될 수 있으며 이런 방안은 재확인성, 투명성 그리고 예측성으로 추정될 수 있다. 政治, 經濟, 社會的인 신뢰구축방안이 成功하면 결국 軍事的 면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좁게 표현할 때 우리는 신뢰구축 방안을 軍事的인 면에서 다루고 軍事 신뢰구축 방안으로 정보, 예고, 통신과 군대 배치면 등에서 방안이 나올 수 있다.⁽²⁵⁾

圖表 3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軍事的 信賴構築 方案은 남한이 1990年代의 Europe의 신뢰구축 방안 방식을 채택하므로써 北韓보다 더 적극적이다.⁽²⁶⁾

1982年 이래 南韓은 美國과 더불어 北韓에게 그들의 군사 연습 시행일과 그 연습에 참가하는 軍事力을 一方的으로 통고하여 왔다. 그러나 주로 이 통고는 Team Spirit에 국한되었으며 근래에는 Team Spirit 훈련에 북한측의 참관자들

(24). Mack, Andrew and Paul Keal,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Sydney : Allen & Unwin, 1988), p. 169.

〈圖表 3〉 Comparative Overview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ypes	North Korea	South Korea
<u>military CBM</u>		
-Notification	No	Yes(Unilateral)
-Information	No	Yes(Unilateral)
-Communication	Quassi (Hotlines for North-South talks)	Quassi
-Deployment	No	No
<u>Political CBM</u>		
	Proposed	Proposed
<u>Economic CBM</u>		
	Passive	Active
<u>Socio-Cultural CBM</u>		
	Restrictive	Limited, But Active

Source : Moon, op.cit, p.17.

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초청을 수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이 제의한 신뢰구축방안에는 軍事訓練 또는 移動前에 서로 통고하고 참관자를 초청하자는 제의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결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약간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데 북한은 3, 4年內에 양국의 兵力數를 30萬으로 줄이자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격적인 제안은 남한에게 신빙성을 안주고 특히 남한은 北韓이 87年에 10萬 군인수를 줄인 것도 건설작업에 배치하는 것으로 여차하면 다시 군인으로 돌아온다고 보고 있다. 이런 양자간의 상이한 點을 고려할 때 첫째의 과제는 군사력을 같은 비율로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現在 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數

(25). Ibid.

(26). Han Kuk Il Bo, April 20, 1990.

字는 서로 파악하기 힘들며 속이기도 쉬운 것이다. 그리고 武器와 軍事技術을 금지하자는 北韓의 제안도 효율성이 과히 없다. 현재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化學攻擊 能力이 커다란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북한은 軍縮제안에서 化學武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많은 전문가 말들에 의하면 現在 화학무기도 中東의 리비아와 이라크, 이란에도 수출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무기 수출량에 있어서 現在 世界 7位の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²⁷⁾

마지막으로 軍隊배치 방안이 제일 진전을 못하고 있는데 北韓 제안에서 아직 까지 이 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는 한반도에서 모든 核을 철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이 非核地帶 설치안도 政治的 선전 효과에 그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방안이 한반도內的 戰略的 안정성을 파괴하고 신뢰구축도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시종일관 이런 모든 政治, 軍事 대결은 결국은 상호 신뢰 부족 때문이며 정치, 군사 신뢰구축이 緊張緩和에 있어서 제일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7). Ibid, April 26, 1991, p. 9.

IV. 核武器 撤去와 美軍撤收 問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은 平和 協商과 軍縮 對話를 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先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年 7月5日 서울에서 열렸던 總理會談에서 北韓總理 연형묵은 成功的인 南北韓間의 대화는 軍事緊張을 축소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Team Spirit 중지, 남한에서의 美軍撤收 그리고 核武器撤收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1. 美軍撤收問題

北韓이 계속해서 이 세가지 조건을 제시하니 南韓도 의미있는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現實的으로 美軍 4萬의 존재 문제의 해결 없이는 信賴構縮 方案과 紛爭解決에 관한 협정이 성립될 수 없다. 남한에는 아직도 美軍이 DEFCON(Defence Readiness Condition Form)1으로 정상시보다 한 차원이 높은 상태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미국도 한국 사정을 세계 어느곳에서보다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⁹⁾ 그러나 急變하는 世界와 國內情勢를 참작할 때 남한은 더 이상 北韓의 美軍撤收 要求를 묵살할 수 없다. 最近 몇년 동안 韓國은 잘 훈련된 65萬의 군대를 성취시켰으며 그중 55萬이 地上軍이다. 空軍, 海軍은 아직도 美國에 많이 의존하나 이 두軍의 진보도 괄목할 만하다⁽³⁰⁾ 또한 무엇보다도 남한의 經濟는 北韓의 經濟에 비하여 成長하고 있으며

(28). Han Kuk Il Bo, September, 1990.

(29). Arkin, William and Richard Fieldhouse, Nuclear Battle Fields, (Cambridge, Mass : Ballinger Publishing Co., 1985), p. 120.

(30).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外交面에서도 蘇聯과 國交를 맺으므로써 北韓外交에 치명상을 입혔다. 가장 가까운 中國도 곧 남한과 영구적인 통상부 설치와 남한의 UN 단독 가입을 인정했으니 북한도 오는 9월에 할 수 없이 UN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³¹⁾ 남한과 美國은 이런 발전을 최고도로 이용하여야 되며 美軍撤收 문제는 신뢰구축과 군축을 달성시키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다. 美國도 다소 軍人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므로써 적자예산을 도울 수 있고 또 國內의 政治的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美國국민은 美國 혼자서만 世界 自由陣營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見解가 강하므로 다소의 美軍撤收는 많은 美國國民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美國指導者들 중에서도 이런 의견이 강한데 그중에서도 前 美聯合參謀部長 윌리엄 크로우 제독도 다소의 美軍撤收를 지지하고 있다.⁽³²⁾

실제 있어서 1992年말까지 7萬名의 美軍이 철수될 것이며 벌써 이 철수는 始作되고 있다. 아마도 더 많은 美軍이 1993-96年 동안에 철수할 걸로 알고 있다.⁽³³⁾ Crowe제독은 適正 美軍撤收 숫자를 23萬명으로 추산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5年 以內에 現韓國軍이 넉넉히 自體 방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이렇게 점차적인 美軍撤收는 기정사실인 만큼 남한은 韓美間의 美軍撤收 會議에 북한을 참관자로 초청하므로써 남북한 간의 평화교섭에 더 능동적인 솔선수범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솔선수범 방법이 南北韓間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신뢰구축에 중요한 透明性을 나타낼 것이다. 즉 南韓이 미군철수를 동의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美軍 撤收와 軍縮은 조심스럽

(31). Washington Post, May 31, 1991, p. A24

(32). Crowe, William J. Jr., and Alan D. Romberg, "Rethinking Pacific Security", Foreign Affairs, Spring, 1991, pp. 132-133.

(33). Washington Post, June 7, 1991, p. 1.

(34). Crowe & Romberg, op. cit., p. 133.

게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特히 現在수준의 美軍空軍力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결국 미래의 어떤 時點에서 美軍의 철수는 과격해지는 一部 大學生들의 요구도 와해 시킬 것이며 國內政治도 더 安定시킬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강조하거나 급작스런 美軍撤收는 위험하며 1960年 軍部 구테타가 일어난 원인 중에도 이런 갑작스러운 政策變化를 이유로 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이번 7月初 韓美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美國역할은 점차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서 배후에서의 창조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韓美정부는 1991年末까지 韓國軍의 통수권을 韓國으로 이양한다는 현명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RisCassi장군 자신도 이런 통수권이전 時期가 지금 바야흐로 왔으며 적절한 시기 라고 인정하였다.⁽³⁵⁾ 이 方案에 의하면 전쟁이 발생할 경우 韓國軍 將軍이 지상군을 통솔하게 되며 美 第2師團도 그의 지휘 밑에 있게 되는 것이다.⁽³⁶⁾

2. 韓國에 있어서 核武器 問題

北韓은 남한에서 核武器 撤去와 美國이 北韓에 대하여 핵무기를 안쓰겠다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反面에 南韓과 美國은 북한에게 핵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한에서의 軍事力축소를 요구하는 중에 美國이 새로운 핵무기를 北韓을 목표로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⁷⁾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現在 美軍은 한국에 數百個의 戰術 核武器를 소유하고 있다. 군산비행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韓國內에 있는 핵무기는 대개 B-61로

(35). Washington Post, June 7, 1991, p. 1.

(36). Ibid.

(37). The Pyong Yang Times, May 4, 1991, p. 7.

폭격기에 장치될 수 있는데 그 파괴력은 100 kilotons에서 500 kilotons까지 나간다고 한다. 또한 B-61은 8인치의 대포로도 사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55mm의 대포는 0.1 kiloton의 핵탄두를 사격할 수 있다.⁽³⁸⁾ 이번 韓美 정상회담에서 암시된 것 같이 現在 Washington에서는 韓國에서 政治的 문제로 비약될 수 있는 핵문제 이야기가 表面化되기 전에 핵무기를 남한에서 철거시키자는 알가왈부의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이 못되었고 一部에서는 핵무기 철수를 하므로써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저지 시킬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분간은 부시大統領이 발표하였듯이 두개의 문제는 개별적인 것이며 당장 핵무기 철수는 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 아마도 盧泰愚大統領이 9월에 UN議會 연설에서 어떤 變化的인 한반도에의 핵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어마어마한 破壞力과 韓半島에서의 軍事力 형평을 참조할 때 核武器는 한반도에서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런 案이 북한과 동조된다고 할지 모르나 韓半島에서의 핵무기 철거가 핵무기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美 太平洋艦隊의 군함으로 옮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면 南韓內 핵기지가 테러공격을 받을 걱정도 없어지고 북한의 침략을 막는데도 美軍이 군함으로부터 쓸수 있는 것이다. 사실, 윌리엄 크로우 제독도 남한에서 核武器貯藏은 核雨傘 政策에 절대 必要한 것이 아니며 핵무기는 바다에서도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⁹⁾ 크로우제독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핵무기를 남한에서 제거하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美國고위관리들은 美國의 핵무기

(38). Goose, Stephen,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wo Koreas-One Future? edited by John Sullivan and Roberta Fos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p. 77.

(39). Crowe, op. cit.

存在가 북한의 核武器 發達 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것이고 북한의 핵사찰은 북한이 86년에 國際原子力 機構에 가입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였으므로 영변 핵발전소의 국제적 핵사찰은 國際的인 의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하여간 北韓의 攻擊에 對備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반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南侵을 저지하는데는 韓國軍의 준비와 美軍의 공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득이 위협스러운 핵무기는 남침 저지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핵무기가 전쟁발생을 방지 못한다면 戰略的 핵무기가 韓半島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影響力은 한민족, 한반도에 추측도 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올 수 있고 인접국인 蘇聯, 中國, 日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卽 韓國戰은 또한번의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國際的 성격을 띠게 되고 그 해결책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국 땅에서 핵무기 철수는 불가피하며 핵무기 철수는 남한과 미국당국의 밀접한 의논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現在라도 美軍의 핵무기 사용은 韓國정부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다는 軍事協定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북한은 核武器 개발시도를 中止하여야 되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북한은 1991年 6月7日 國際原子力機構에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⁴⁰⁾ 그러나 外交部長 金永南이나 黨 國際部長 金容淳 아직도 남한에서의 핵무기 사찰과 同時에 행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나 종말에 가서는 國際 輿論에 굴복할 것 같다. 日本정부도 修交하는데 이점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蘇聯도 압력을 넣고 있으므로 조만간 이 核査察 問題는 해결될 것 같다.⁽⁴¹⁾

(40). Washington Post, June 7, 1991, p. 26. The New York Times, June 14, 1991

(41). Washington Post, June 9, 1991, p. A34.

V. 結 論

그동안 南韓에서는 韓半島에서의 政治, 經濟的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을 추구하는데 北韓에 대한 많은 개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은 북한이 그들의 적화 전략에 따라 韓半島를 통일하려는 점이 不信을 초래하였으며 긴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군사적분쟁도 이런 불신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북한은 美國의 개입으로 인한 군사분쟁과 또한 자극적인 Team spirit 등이 韓半島에서 긴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정 때문에 북한은 政治, 軍事的 신뢰구축 방안에 대하여 남한과 달리 과히 신뢰감을 갖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政府든지 軍事的信賴構築과 軍縮이 成功될려면 군사긴장의 원인과 근원을 제거하여야 되며 어떤쪽이더라도 그들의 安保가 軍縮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確答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兩者間의 대화에 군축에 대한 一般的 規則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측의 軍隊가 一線으로 부터 후퇴되어 배치될 수 있고 Team spirit 연습문제, 상호간의 군사력참관 등 문제들도 우선적으로 고려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軍縮과 軍備統制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점진적이며 조심성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서로간의 오랜 不信 때문에 단계적인 접촉방법이 必要하며 各者의 安保가 軍비통제로 위협을 느껴서는 안된다. 現在의 양자간에 不信과 疑心 때문에 값비싼 軍事競爭이 계속 되어왔으며 한심스러운일은 양측이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토의하지 않은 것이다. 값비싼 軍備 競爭은 쌍방의 복지정책, 교육, 경제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이런 값비싼 軍비 때문에 南北이 다 軍事獨裁 아니면 全體主義 국가로 되기가 쉬웠었

던 것이다. 南韓도 엄청난 軍備와 軍隊가 存在하지 않았으면 더욱 일찌기 민주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現在 南北韓은 국제적 긴장완화의 여건을 이용하여야 된다. 네 나라의 강대국, 美國, 蘇聯, 中國, 日本도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 긴장감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마당에서 韓國은 독일 統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南北韓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서로 共同利益點을 찾아내어 이것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된다. 어떠한 軍縮도 신뢰구축 방안을 조성할 수 있는 政治的 해결을 수반하여야 될 것이다. 紛爭解決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政治的 해결책으로 첫째 現在의 휴전협정을 不可侵條約으로 대치하는 것이며, 둘째단계로는 美國, 蘇聯, 中國, 日本을 포함시킨 한반도에서 平和條約을 맺는 것이다.

現在 사정으로는 양쪽의 火力이 너무 거대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쪽도 승리자로 부상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韓民族들은 더 이상의 軍비확장이 平和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과 軍事的으로 한반도의 분쟁 해결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되는 것이다. 오로지 政治的 해결이 必要하고 軍備統制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에서는 점차적으로 核武器와 美軍을 철수하여야 되며 북한에서는 재래의 軍兵力을 줄이고 特히 生物, 化學 武器를 제거하여야 된다. 이런 軍備統制와 政治的和解가 成立되었을 때에 한반도에 平和가 깃들며 兩國에도 진실된 安保가 확립되는 것이다.

9. 南北韓 統合模型

金 甲 喆(建國大)

目 次

I. 머리말	231
II. 南北統一과 民族統合을 위한 概念的 틀	233
1. 統一과 再統合의 問題	
2. 民族統一(統一, 再統合을 위한 概念的 틀)을	
III. 統一國家의 模型.....	240
IV. 맺는말	245

I. 머리말

統一 獨立 民主 韓國(a unit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1)統一을 향한 접근과정과 방법(戰略) (2)統一國家의 模型에 관한 研究와 政策化 그리고 실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는 南北韓 統一 또는 統合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統一後의 國家와 정부形態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그리고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논의된 韓半島 統一의 의제는 주로 統一過程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統一過程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1)韓半島 周邊 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통일에 유리한 環境造成問題(교차승인, 지역협력체 구성) (2)統一을 위한 接近方法(연방론,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등) (3)韓半島 緊張解消 方案 (4)南北韓 交流協力 問題 (5)南北韓 체제의 改革 또는 變化問題 등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統一國家의 模型에 관한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統一國家의 模型이나 위상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統一國家의 模型과 位相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民族的·政治的 통일을 위한 과정과 접근전략의 연구가 축적되었는바 이제부터는 統一後의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통일과정 연구에 있어 그 효율성, 현실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누구도 그 時期를 정확하게 예측 못한 獨逸의 통일이 이룩되었다는 교훈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남북한 統一國家 모형에 대하여 먼 훗날의 일이라고 안이하게 방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셋째, 그 동안 남북한의 정부가 제시한 통일국가의 이

념은 북한이 제시한 “인간의 自主性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사회”, 남한이 그린 “민족성원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民主國家”등이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 쌍방에 의하여 革命的 統一論 또는 制度的 統一論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어 統一國家의 장래에 대하여 상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위상에 대하여 佐·佑翼 勢力의 불안을 극소화하는 것이 남북한 통합의 中核을 이룬다는 점에 새로운 통일국가의 모델의 정립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必要性에 입각하여 이제부터 통일국가의 모델에 관하여 學界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政策分析(policy analysis)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서술과 설명이라는 경험분석 차원과 함께 규범적 접근이 혼용됨으로써 객관성(a logical tightness)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南北韓이 통일된 이후의 통일국가 모형과 위상을 학계의 논의를 위한 發展的 水準에서 자의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II. 南北統一과 民族統合을 위한 概念的 틀 (conceptual scheme)

1. 統一과 再統合의 問題

統一(unification)과 再統合(reintegration) 개념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과 고유부분이 병존하는 것 같다. 政治的 統一은 분단된 정치체제가 單一國家 형태로 통일되는 國家形成(state-building)과 관련되는 概念이라면, 社會的 再統合은 문화적 이질성 또는 分裂(cleavage)에서 생기는 잠재적, 현재적 갈등을 통합하는 民族形成(nation-building)과 관련성이 강한 개념이라 하겠다. 레바논과 나이지리아는 국가형성은 되었으나 民族形成의 수준이 낮아 內戰(civil war)등 강도 높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반면에 東西獨의 統一은 민족통합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 정치적 統一이 달성되는 과정을 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통일된 동서독에 있어 국민적 재통합에 여러 問題를 표출하고 있다.(Los Angeles Times, 91. 6. 16)

한편 機能統合論者에 의하면 政治的 統一(political unification)이란 “이전에는 政治的 紐帶가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은 정치적 유대가 존재한 단위로부터 政治的 共同體를 형성하는 과정”(이용필, 1990,p.43)이라 한다. 에치오니에 따르면 완전히 확립된 공동체는 자기 충족적 메카니즘(self-sufficient integrative mechanisms)을 갖출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Etzioni, 1962,p.44) 그런데 政治的 共同體는 세가지 종류의 統合, 즉, (1)暴力手段의 正當한 行사의 獨점이 가능한

통합, (2)共同體의 자원과 보수의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政策決定의 중심이 갖
추어진 통합, (3)政治적으로 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대다수에 대한 정치적 同一
化의 두드러진 焦点을 가진 통합이 있다.(Ibid.,p.45)

그런데 에치오니는 政治的 共同體는 고도로 통합된 體系를 지칭하고 잠재적
공동체, 예컨대 통합을 증진시키는 과정에 있는 體系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聯合
體(union)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에치오니의 繼起的 選擇 모델(a
sequential-option model)에 따르면, 사회의 재통합(reintegration)에는 3段階-
(1)융합된 사회(a fused society), (2)분화된 사회(a differential society), (3)
재통합된 사회(a reintegrated society)-를 거친다(Etzioni, 1968,pp.457-573).

이상에서 제시한 에치오니의 概念들에 의하면 정치적 통일에는 統攝의 水準에
따라 낮은 수준의 聯合體에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공동체까지 복수의 통합유형
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북한의 “高麗民主 聯邦共和國”과 남한의 “南北聯合”은 정치적 통합
의 수준이 낮은 “聯合體”에 해당되며 남한의 “통일민주 공화국”은 정치적 공동
체로서 “자족적 통합 메카니즘”을 구비한 高度로 통합된 政治體系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남북한 사이의 40여년간의 심각한 葛藤構造는 정치적 통일과정과 형
태에 따라서는 統一後의 국민의 再統攝에도 여러 갈등들이 未解消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재통합에 역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要素들은 첫째,
民族分裂의 심화과정에서 발생해서 고착화된 것들, 예컨대 동족상잔에 의한 상
호적대감, 40여년간의 政治社會化(反共, 反帝教育)에 의한 문화적 이질화, 정치
적, 군사적 대결의 누적된 상호불신 등이며 둘째, 한국인의 타협할 줄 모르는

정치문화 즉 世俗化된 문화의 결여로 타협, 흥정, 토론등 갈등의 평화적 해결 (peaceful settlement of political conflicts)에 필수불가결의 메카니즘이 갖추어 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他協과 흥정을 타락된 정치행위로, 선명성과 절개를 선 비정신의 표본으로 여기는 정치문화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 흑백의 兩分論으로 심화되기 쉽다. 셋째, 政治的 統一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상실한 집단이 한국인의 정치문화적 특성이운데 하나인 派閥主義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 民族統一(統一, 再統合)을 위한 概念的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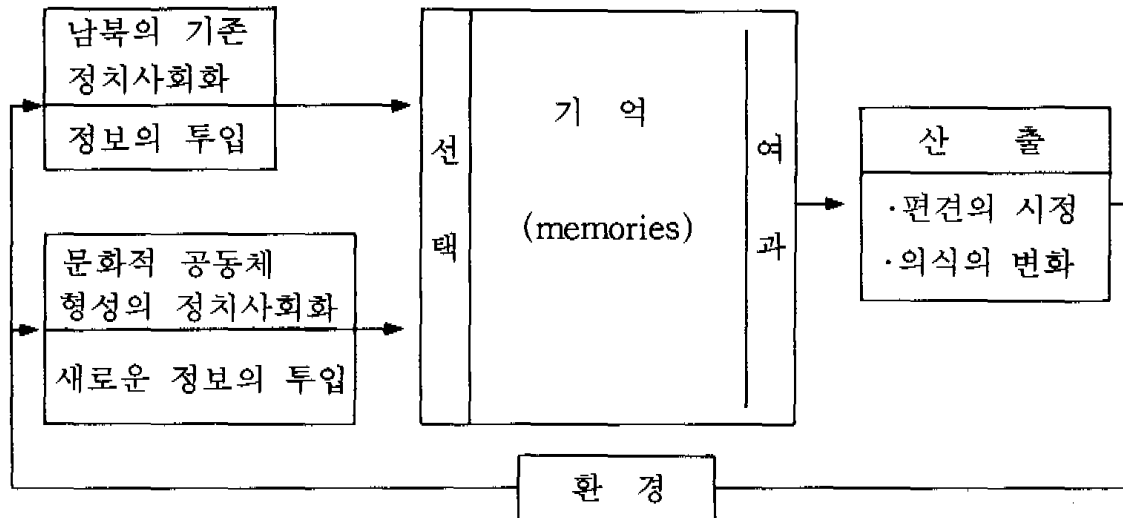
남북의 거레가 각기 다른 世界觀, 政治意識 또는 政治文化를 형성하게 된 원인을 分析해 보면 40여년간 각기 다른 政治社會化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체제적·이념적 차원에서 對決構造를 심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자칫 통일후 국민의 再統合에 역기능하여 에치오니가 지적한 정치적 공동체나 재통합된 사회와 같은 결속력이 강한 국민형성에 큰 障礙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나라의 統一問題는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후의 국민 재통합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북한간에 존재하고 있는 不信과 對決의 저변에 흐르는 문화적 이질성을 어떻게 克服할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한 남북한 사회에 아직도 잔류할 것으로 생각되는 전통적 民族文化를 回復함과 동시에 남북간에 多方面的인 교류와 협력을 계기로 문화적 共同體意識이 싹트고 이것이 심화됨으로써 民族共同體文化의 형성운동이 전개될 때 이것이 促進劑가 되어 남북간에 정보교환시스템의 기능화가 이룩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정보가 투입될 것이다. 이로써 남북의 두 정치체제가 40여년간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교육

의 결과로 생긴 당파적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편견이 점진적으로 是正될 것이다.

<표1>.

<표1> 文化的 同質性 提高過程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의 형성은 두 정치체계의 환경(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지도자의 교체가 시기적으로 相合作用을 일으킬 경우 기하급수적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김갑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적 측면”, 1990,p.142).

南北韓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下部構造인 가치체계와 문화체계의 異質化를 축소하고 文化的 共通性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남북한의 리더쉽은 각기 자기의 政治 體制의 改革이 필요하다. 남한은 먼저 현재 진행중인 民主改革을 추진함과 동시에 당면한 사회적 갈등(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制度化되어야 하고 나아가 한민족 공

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한 目標 文化에 접근하는 정치체제적, 사회적 개편이 지금 부터 착실하게 推進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는 정치적 통일후로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가능한 한 속히 推進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의 리더쉽은 파산에 직면한 현 經濟的 難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國際經濟體系와의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적응을 통하여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政治的 正統性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사회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인권을 점차 신장시키는 改革 共產主義를 制度化해야 한다.

셋째로 南北韓 體系의 리더쉽이 각기 대내적으로 安定을 확보함으로써 남북간의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政治的, 社會的 變化에 대하여 危機意識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정부가 민족통일의 추진 주체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류와 협력이 내정교란이나 혁명수출의 공작수단이 아니라는 相互信賴를 조성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民族統一問題를 정치전략적으로 악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共同體文化의 형성을 위한 네번째의 조치는 남북의 역사, 교육, 문화, 문예, 정보 부문의 전문가나 종사자들이 공동연구나 학문적 세미나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文化的 異質性과 同質性을 確認하고 이를 인정하는 過程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南北韓 사이에는 정치문화나 정치의식, 학문적 방법론상의 차이점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사실로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共同體文化形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새롭게 형성되는 文化的 共同體는 민족분단以前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

라,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와 남한의 개인주의(자유기업주의)와 시민정치문화와의 折衷이나 調和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逆說的일지 모르나 정치적 통일(정치적 공동체 혹은 연합체)은 南北體制의 집안단속이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메카니즘을 갖추어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民主福祉 社會體制로의 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과의 平和定着과 共榮을 위해 사랑과 자원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

북한에서의 안정된 民主政治(stable democracy)의 제도화와 민주복지 사회로의 발전은 북한의 경제생활의 향상을 사랑으로 돕는 포용성의 높은 정치리더쉽을 탄생시킬 것이다. 북한을 포용하는 이러한 정치리더쉽의 自信心은 북한체제의 자체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날 때 文化的 共同體 形成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北韓體制의 변화는 현재 外交政策과 經濟政策次元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下位體系의 구조적 수준에서 김일성 사망 이전이라도 북한의 대외적 환경 변화와 대내적 요구로 인하여 ‘위로부터의 改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리하여 南韓이 민주복지사회로의 位相을 정립하고 北韓이 改革共產主義統一의 기반 조성에 대한 障礙物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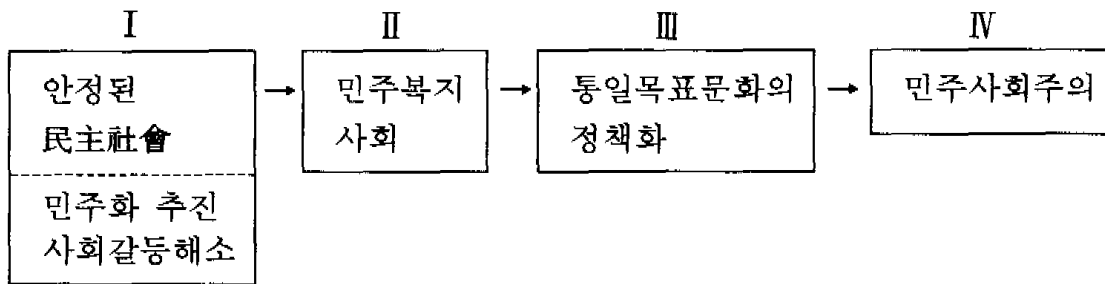
이러한 남북간의 政治, 社會的 發展을 통한 민족재통합/정치적 통일의 概念에 대하여 북한은 이를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일정책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유지·발전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金正日은 금년 5월 “스웨덴 모델”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적 계급적 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 대

중의 반응을 무마하기 위한 것”(김정일, 91. 5. 27)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西歐型 民主主義와 맑스주의적 社會主義 사이의 수렴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南北體制의 변화, 발전과 민족통일 사이에는 불가피한 連繫가 일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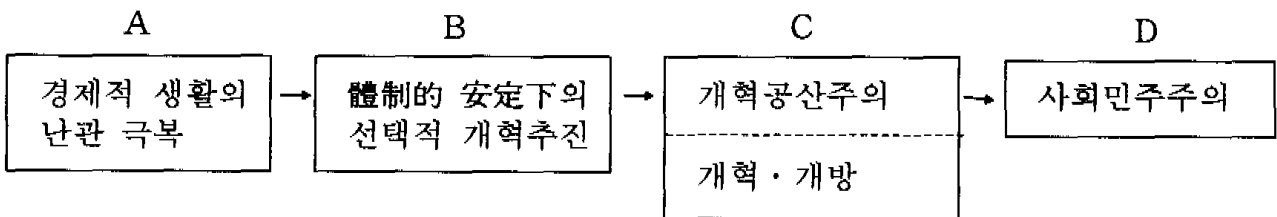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南北體制의 民主發展, 民族共同體文化와 政治的 統一過程

[남 한]



[북 한]



· IA(IB) : 남북공존 단계 - UN동시가입, 주변 4대국과의 교차승인

남북경제교류의 제도화

· II B(II C) : 남북교류·협력 단계 - 쌍무적 협력체계, 다무적(아태지역적)

협력체계,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대표부 교환설치

· II C : 느슨한 통일국가(국가연합체 또는 국가연합)수립에 합의,

경제적·문화적 공동체 형성 가능

· IVD : 정치공동체(통합수준이 높은 통일), 이데올로기적 수렴현상이 두드러짐

Ⅲ. 統一國家의 模型

前節에서 推論한 統一過程을 거쳐 우리민족이 政治적 統一을 성취했다고 가정하고 韓國 통일國家의 模型을 그려보기로 한다.

(1) 먼저 統一國家의 模型은 統一과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어떤 過程을 거쳐서 統一이 이룩되었느냐에 따라 統一國家의 特性이 결정되는 것은 當然하다. 필자는 <표2>와 그 설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統一國家가 南北 쌍방중 어느 일방에 의한 武力統一이나 흡수 통일(또는 “제도적 통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南北한체제의 리더쉽들의 협상과 민족성원의 參與性 있는 文化的 同質性 努力을 통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될 것으로 豫測해 보았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자주역량에 의해 평화적 統一이 이룩된 후의 統一國家의 模型을 생각해 보아야겠다.

(2) 다음으로 統一國家의 模型研究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統一國家의 형태(form)에 있어서 政治的 共同體의 높은 수준의 政治적 통합이라는 “완전한 統一國家로 가는 中間과정의 과도적 統一體”를 상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問題는 통일된 國家사회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균열을 극소화함으로써 民族의 再統合(national reintegration)을 용이하게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體制聯合(南北연합 또는 國家연합 또는 連방제)단계를 過渡期的 統一體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統一國家는 政治적 통일후에도 표출될 수 있는 社會的 龜裂과 이로인한 政治적 갈등을 극소화하고 민족적 재통합을 용이하게 이룩할 수 있는 諸裝置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문제에 관하여 임용순 교수는 갈통(J.Galtung, 1985)의 15개 처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임용순, “한국통일국가의 모형”, 1991.pp.8-9)

(4)통일국가의 模型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통일국가의 理念體系 또는 정치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세째번 고려사항에서 언급한 민족적 재통합과 깊은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하여 박한식 교수는 이데올로기의 통합을 위해서 새 이데올로기의 信念體系에 “인간존엄성”을 중심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한식, 1990,pp.141-145)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용순 교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 타협한 사회민주주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복지정책 모델보다는 “새로이 창조된 제3의 모델이 더 합당할 것”이라는 論據를 전개하였다.(임용순,pp.6-8)

임용순 교수에 의하면 첫째로 자본주의 制度나 사회주의 制度가 공히 問題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절충문제를 반대하고 있다. 사회주의 制度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게 되고, 또한 인간을 타성에 빠지게 만들어 사회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불필요한 경쟁속으로 몰고, 때로는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때로는 물질만능주의를 야기시키고, 인간의 본질로부터 疏外시키기가 일쑤이다.

둘째로 임교수는 자본주의가 본래 서양의 소산물인데 이것은 공히 인간만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建立하려다 실패하였다. 또한 서양문명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생존을 위해서만 존재이유를 찾으려 하였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서양에서 실패한 制度를 모방하여 절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의 통일국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體制가 되어야겠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그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해야 함은 당연하려니와 민족의 특성이나 문화에 기초를 두어야 영구히 서식한다고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傳統文化는 자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자연질서와 조화가 될 수 있는 사회체제의 시발이다. 질서는 있으되 서양식의 계급화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자연질서에 의한 사회의 유지이다”(Ibid.,p.7)

간추려 말하면 임교수가 제시하는 통일국가의 새로운 이념체계는 한국전통사상에 뿌리박고 있는 道德政治의 중심가치들을 존중하는 정치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정치생활을 규제하는 信念體制의 설정은 (1)우리민족의 전통문화와 도덕정치와 가치규범 (2)민족분단 40여년간의 정치생활의 반성에서 얻은 교훈 (3)脫이데올로기化의 새로운 時代精神을 적절히 반영함과 동시에 민족의 재통합과 민족성원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Inoneseu, 1984, pp. 2.16.32)이어야 하겠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묘사한 통일국가의 目標文化(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국가), 인간존중(박한식) 또는 유교의 德治理念 규범(임용순)은 통일국가의 理想想定에 훌륭한 시사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미래는 그 발전방향인 인간적 사회주의(humane socialism)로 될 것이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도 결국 민주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南北韓 사이에는 장차 이데올로기적·문화적 통합(또는 수렴)현상이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나타날 것으로 본다.

(5)끝으로 통일국가의 정부형태와 구조를 모색해 보자

이상과 같이 열거한 문제점을 解決하고 민족공동체로의 發展을 감안하여 통일

국가의 정부체제를 모색 해보기로 한다. 통일국가의 정부구조로는 과도적 통일 체제로서의 연방제(federal system)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밝혀줄 것은 임용순 교수의 모델(임용순, pp.10-11)이 나의 견해와 일치한 점이 많아 그것을 크게 受容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연방정부는 의회중심인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회의 구성은 상원과 하원으로 하되 하원은 인구중심으로 하고 상원은 한일합방전의 8도를 단위로 한 지역대표제로 한다. 국가의 상징인 大統領은 상원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으로 단임제로 한다. 內閣의 수상은 하원에서 뽑으며, 상원 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하원은 해체시 수시로 선거를 할 수 있게 한다. 사법부는 연방사법부와 지방사법부로 이원화하되, 연방재판소는 연방헌법에 관한 것만 판결하며, 大統領이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 연방행정부의 임무는 주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및 대외무역의 규제를 主業務로 한다.

지방정부는 도단위로 설립하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된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하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도의 판사는 지사가 지명하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도의 판사는 지사가 지명하되 도의회의 承認을 받으며, 임기는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한다. 지방의 입법의원은 단원제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정부의 任務는 교육, 공공질서 유지, 교도소의 관리, 지역개발, 도로공사, 항만운영,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主業務로 한다.

이와같이 통일국가의 정부구조를 서술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인간존중의 도덕정치를 실시하고 둘째로 각 지방의 특색에 맞게 정치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지방의 자치를 인정하고 연방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써 오랫동안 이질화 되었던 문화를 서서히 재통합할 수 있는 機會를 준다. 상징적인 大統領을 상원에서 선출함은 덕과 신망이 있는 분이 국가의 대표가 되게 함이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그때에 가서 결정하지만, 평양이나 북쪽의 한도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꾀함에 有利하다. 그리고 우리의 북방진출을 위해서도 수도는 북쪽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은 국방력이 必要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군은 40만에서 50만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軍의 구조는 육군, 해군, 공군이 균형을 맞춘 병력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한 정예화된 군인이어야 한다. 외교정책은 자주독립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안보협력체계에 주력한다. 국호는 “코리아 통일 공화국(United Republic of Korea)”으로 함이 適當하다.

V. 맺는말

이제까지는 필자는 統一國家(가칭 “코리아 통일공화국”)의 이념, 정치생활의 모습, 국민적 재통합 그리고 통일정부체제에 관하여 필자의 주관적 시각에 推理해 보았다.

南北韓 統一過程에 관하여서도 推理하였으나 이는 통일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금년으로 미주지역 통일문제 학술회의가 7년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그 축적된 知的 財産이 정부와 학계에서의 統一問題 연구에 공헌한 점을 치하하면서 이제 부분적이거나 北韓學者와의 학술토론이 活性化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의 보잘 것 없는 소견이 통일국가 模型의 보다 심오한 研究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第 7 回 美洲地域學術會議 論文集

1991年 10月 20日 印刷

1991年 10月 23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院

第 1 分 析 官 室

印刷所 서라벌印刷株式會社
